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00-00

정책보고서 20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김성희 · 이동석 · 오욱찬 · 김희성 · 배용호 · 오다은

【책임연구자】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수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공동연구진】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애학과 교수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배용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오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내용	9
제3절 연구방법	1
제4절 연구추진 및 수행체계	41
제2장 문헌고찰	5
제1절 BF인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7 1
제2절 BF인증 관련 선행연구 고찰	8 4
제3절 유사 인증제도 고찰	07
제3장 질적 분석	9
제1절 조사의 개요	11
제2절 내용 분석	102
제3절 합의	128
제4장 BF인증제도 개선방안	3
제1절 BF인증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	51
제2절 민간 분야 확대방안	8
제3절 공공 분야 확대방안	5
제4절 인증운영기관 설립 및 운영 방안	37
제5절 기타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8
제5장 결론 및 관련 법률 개정 사항	8
제1절 결론	185
제2절 관련 법률 개정 사항	9

참고문헌	202
------------	-----

표 목차

<표 1-1> BF인증 실적 현황	6
<표 1-2> 인증대상별 인증실적 현황	6
<표 1-3> 건축물의 세부유형별 인증 현황	8
<표 2-1> 인증기관 현황 및 인증실적	9 1
<표 2-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2] 장애물 없는 <표 2-3> BF 인증 대상	22
<표 2-4> 인증수수료 체계(2019.1.1. 시행)	4 2
<표 2-5> BF인증 실적 현황	5 2
<표 2-6> 인증대상별 인증실적 현황	6 2
<표 2-7> 건축물의 세부유형별 인증 현황	6 2
<표 2-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조례 현황	8 3
<표 2-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비교	9 3
<표 2-10>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원칙	1 5
<표 2-11> 무장애(barrier free)시설의 경제적 가치체계	1 6
<표 2-12> 무장애 건물의 비용편익분석 선행 연구	2 6
<표 2-13> ‘접근성 도시 대상’ 선발 기준 및 과정	7 6
<표 2-14> ‘접근성 도시 대상’ 연도별 수상 도시	9 6
<표 2-15> 국내 정부 인증제도	1 7
<표 2-16>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건축물 유형별 적용	7 7
<표 2-17>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전문분야별 가중치	8 7
<표 2-18>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기준	2 8
<표 2-19>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의 규모별 할증률	3 8
<표 2-20>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 완화	4 8
<표 2-21>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감률	5 8
<표 2-2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2 9
<표 2-23>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3 9
<표 2-24>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 완화	4 9
<표 2-25>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감률	4 9
<표 2-26> 건축·시설물 분야 인증제도 비교	6 9
<표 3-1> FGI 참여자 정보	201

<표 4-1> 녹색건축 인증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사례	9	3	1
<표 4-2> 인증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 제시 사례	0	4	1
<표 4-3>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사례: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2	4	1
<표 4-4> 지역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2016년 기준)	6	4	1
<표 4-5>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검사 신인도 평가	0	5	1
<표 4-6> 공공 분야 주요 기관 BF인증 현황(2019년 1월 기준)	1	5	1
<표 4-7> 주요 공공기관 BF인증 현황(2019년 1월 기준)	2	5	1
<표 4-8> BF인증 소재지 기준 시군구 분포 현황(2019년 1월 기준)	3	5	1
<표 4-9> 지방공기업 BF인증 현황(2019년 1월 기준)	4	5	1
<표 4-10> 공공기관 유형 분류	6	5	1
<표 4-11> 2018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18.9월 기준)	7	5	1
<표 4-12>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18.9월 기준)	8	5	1
<표 4-13>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18.9월 기준)	9	5	1
<표 4-14> 공공기관 경영 평가 지표 비교	1	6	1
<표 4-15> 2018년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세부 항목	2	6	1
<표 4-16> 2018년 사회적 가치 구현 내 BF인증 관련 세부 항목	2	6	1
<표 4-17> 진주 무장애도시 사업 내용	5	6	1
<표 4-18> 진주 무장애도시 인증 평가 기준	5	6	1
<표 4-19> 2016년 지방공기업 기관 현황(2016.6월 기준)	9	6	1
<표 4-20> 2016년 지방공기업 시도별 현황(2016.6월 기준)	0	7	1
<표 4-2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유형	1	7	1
<표 4-2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체계	1	7	1
<표 4-23> 도시철도공사 사회적 약자 배려 지표 세부 평가 내용	2	7	1
<표 4-24> 인증운영기관의 인력 구성(안)	6	7	1
<표 4-25> 인증운영기관 소요 예산(안)	7	7	1
<표 5-1> BF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8	1

그림 목차

[그림 2-1] BF인증 관련 법 체계	8	2
[그림 2-2] 유니버설디자인의 예	2	5
[그림 2-3] 브랜드 가치의 구성 요소	6	5
[그림 2-4] '접근성 도시 대상' 홍보 수단	0	7
[그림 2-5] 녹색건축 인증 관련 법령 체계	5	7

[그림 2-6]	녹색건축인증 운영체계	0	8
[그림 2-7]	녹색건축인증 등급 및 표지	3	8
[그림 2-8]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관련 법령 체계	7	8
[그림 2-9]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운영체계	0	9
[그림 2-10]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및 표지	3	9
[그림 4-1]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 및 시스템	8	3 1
[그림 4-2]	최우수 인증 건축물에 대한 홍보 사례	1	4 1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연구추진 및 수행체계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장애인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접근권(Right to access)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접근권은 장애인이 건축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건물접근권)이며, 교통수단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동권)이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전자 및 비전자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정보접근권)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바로 접근권이라고 할 수 있다(배용호, 2018).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해서는 위 세 가지 접근권 중 건물접근권과 이동권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포함)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08년 7월 15일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¹⁾을 근거로 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이하 "BF 인증"이라 함)²⁾를 시행하고 있다.

BF인증 제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BF인증 제도는 생활환경 차원에서 포괄적 의미의 편의를 보장하는 공간으로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

1)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대체됨

2) 장애인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률과 제도로써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와 유니버설 디자인 제도가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제도는 BF인증 제도에 비해 더욱 포괄적이어서 모든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화성시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 및 경기도의 경우에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아직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적 인 건축물 접근성 정책 계획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BF인증 제도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행되었으며, 이 제도를 통하여 교통약자 및 보행약자들도 시설의 이용 및 접근과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계획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검증하여 등급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박신원 외, 2013). BF인증 제도의 특징은 기존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 편의시설 설치 위주의 접근성 보장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하여 장애물의 제거 위주의 접근성 보장 정책을 추진하며, 기존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이나 ‘교통약자법’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보다 훨씬 강력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배용호, 2018).

이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5년 1월 29일 관련 조항 신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9년 12월 29일 관련 조항 신설)을 법적 근거로 하여 BF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BF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42-5), 제1차 장애인 안전종합대책(‘17~’2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5개년계획(‘18~’22) 등 주요 국가정책계획에서 아젠다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BF인증 제도는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현 정부도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지하여 정부의 관련 종합계획에 BF인증 제도 활성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p>「국정과제 42-5」</p> <p>○과제목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p> <p>－ 주요내용: 장애인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p> <p>· 장애인 지역생활 환경 조성</p> <p>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조성, 주거환경 개선, 웹 접근성 확대 등 추진</p> <p>·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기반 자립 환경 조성(커뮤니티 케어)을 위하여 주거, 접근로, 이동수단, 제품, 안전 등 무장애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p> <p>·급격한 고령화 진행, 장애인의 증가 및 외국인 여행자 증가·다문화 가정 증가 등 BF의 주요 수요계층 증가에 따른 정책마련 시급</p> <p> * ‘16년 통계청 기준 65세 이상 인구+등록 장애인+15세 미만 유소년 비중은 전 인구의 31.27%</p> <p>「제1차 장애인안전종합대책」</p> <p>○추진목표: 2. 안전한 장애인 활동 공간 조성</p> <p>－ 추진과제: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확대</p> <p>·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BF 인증 의무화(‘19)</p> <p> (현행) 국가·지자체의 공공건축물에 한하여 BF인증 의무취득제도를 도입(‘15년)하였으나 민</p>

간 시설은 자율적 참여 부족
(개선)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신축 시 BF 인증 의무화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상 BF 인증 시범사업 확대 추진
 - 교통약자가 시설물을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217개 터미널 대상 공모, BF 인증 시범사업 추진
 - * `15년 5개소 → `16년 3개소 → `17년 2개소 → `18년 4개소
- BF 인증 활성화를 위한 상세표준도(건축물, 공원 등) 개발·보급(`17)
 - 건축물, 공원, 교통시설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증지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BF 인증 상세표준도 개발·보급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5개년계획」

○추진전략: 5.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추진과제: 5-3. 편의증진·의사소통 지원 강화
 -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 일정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의 BF인증 의무화 단계적 확대, 인증 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 장애인 화장실 면적의 건폐율·용적률 산정 시 제외 등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신축 시 BF 인증 의무화 우선 추진(`19)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상 BF인증 시범사업 확대
 - 장애인 편의증진 강화를 위해 BF 인증심사 제도 개선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내용을 인증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18)
 - * 출입구(문) 폭 확대(0.8→0.9m),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 확대(1.4×1.8미터→1.6×2.0미터이상) 및 비상벨 설치, 음성·점멸형태 피난구유도등 설치 등
 - 소규모 건축물 등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 BF인증 참여 활성화하기 위해 단일 금액인 인증 수수료를 건축물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18)

하지만 BF인증 제도의 인증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³⁾에 편중되는 등 아직 사회 전반에 안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인증의무가 있는 국가·지자체의 인증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2%대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⁴⁾

2016년부터 공공부문의 인증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장애인등편의증진법」 개정으로 대상시설에 대한 BF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BF 인증의무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3) 공공부문은 인증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이고, 민간부문에는 공사, 공단 등이 포함됨

4) BF인증 실적: 공공부문 - 2,074건, 민간부문 - 515건 인증

<표 1-1> BF인증 실적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2,589	4	18	45	96	115	126	155	188	629	1,213
인증 대상	민간	515	1	3	24	52	46	49	50	54	106
	공공	2,074	3	15	21	44	69	77	105	134	523
인증 단계	예비 인증	2,015	3	13	33	89	89	87	92	123	545
	본 인증	574	1	5	12	7	26	39	63	65	84

또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 대한 인증은 미미한 반면, 건축물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증대상별 인증실적(`08~`17)을 보면 건축물은 2,473건이지만, 여객시설은 97건, 공원은 10건, 도로는 8건, 지역은 1건에 불과하다.

<표 1-2> 인증대상별 인증실적 현황

(단위: 건)

구분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합계
예비인 증	최우수	1	5	2	63	168	229
	우수	—	3	3	22	1,595	1,623
	일반	—	—	—	—	163	163
	합계	1	8	5	75	1,926	2,015
본 인증	최우수	—	—	2	12	83	97
	우수	—	—	2	10	445	467
	일반	—	—	1	—	19	20
	합계	0	0	5	22	547	574
공공	—	6	8	15	2,045	—	2,074
민간	1	2	2	82	428	—	515

건축물의 세부유형별 인증현황을 보면, 교육·연구시설, 근린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의 인증실적이 1,830건(약 7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교육·연구시설의 인증실적이 51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대명, 2018). 교육·연구시설, 근린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이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시공하는 건축물(학교, 지역자치센터, 지구대, 우체국, 장애인복지시설 등)이기 때문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인증의무 이행의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 민간부문에서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들의 경우는 공공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증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인증 건수가 165건으로 전체 건축물 인증실적 중에서 약 6.6%에 불과하지만, 인증 주체를 살펴보면 민간부문이 155건(약 94%)로 공공 부문에 비해 현저히 높았는데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BF 인증을 권고하거나, 인증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서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건축계획 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무장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있다. 또한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민간부문이 BF 인증 취득 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인증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예비인증 중 최우수 약 9%, 우수 약 83%, 일반 약 8%였으며, 본인증의 경우는 최우수 약 14%, 우수 약 75%, 일반 약 11%로 전반적으로 예비인증과 본인증 모두 우수등급이 대부분이었다.

<표 1-3> 건축물의 세부유형별 인증 현황

(단위: 건)

구분		근린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 시설	판매 시설	의료 시설	교육 연구 시설	노유 자시 설	업무 시설	숙박 시설	관광·휴 게시 설	공동 주택	기타 시설	합계
예 비	최우수	8	22	1	—	3	21	32	41	—	1	24	15	168
	우수	313	99	—	5	5	375	258	280	1	3	66	189	1,594
	일반	22	16	—	—	1	28	17	23	—	1	34	22	164
	합계	343	137	1	5	9	424	307	344	1	5	124	226	1,926
본	최우수	1	13	—	—	2	10	16	17	—	1	17	6	83
	우수	107	28	—	—	1	83	93	76	—	—	17	41	446
	일반	4	—	—	—	—	2	—	3	—	—	7	2	18
	합계	112	41	—	—	3	95	109	96	—	1	41	49	547
공공		408	155	—	4	8	474	373	374	1	4	10	234	2,045
민간		47	23	1	1	4	45	43	66	—	2	155	41	428

인증제도 비활성화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연례적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민간부문의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 BF 인증 취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건축물에 대한 인증수수료 체계 개선 등의 요구가 있었다.

특히 BF인증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건축주 입장에서 BF인증을 받아도 별다른 이익이 없고, 안 받아도 벌칙이 없다 보니, BF인증은 편의증진보장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에 부가된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제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요자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무장애 환경의 사회적 가치 확산 등 인식개선을 통해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으로 BF인증제도를 구조적, 제도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BF인증의 수용성 제고 방안,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인증 확대 방안, 사후관리 강화 방안, 인증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전반적인 제도개선 및 무장애 환경조성 촉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증 수용성 제고 및 유인설계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제도 정착 및 국가차원의 무장애 환경 중장기 로드맵 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과

연관되어 모든 국민의 교육시설, 일자리시설 등 기본생활을 위한 접근성 향상을 국가가 보장하는 브랜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인증 활성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하여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환경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 정부 5대 국정목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원활한 운영 방안 마련을 통해 BF인증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정책개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고, 인증 관련 법규 정비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내용

이 연구는 BF인증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요자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무장애 환경의 사회적 가치 확산 등 인식개선을 통해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으로 BF인증 제도를 구조적, 제도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BF인증의 수용성 제고 방안,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인증 확대방안, 사후관리 강화 방안, 인증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가. BF인증 인식확산(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BF인증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 BF인증의 당위성(타당성) 논리 개발
- BF 브랜드 가치 증진 방안
- 타 인증제도(녹색인증, 에너지인증 등)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한 수요자 수용성 제고 방안

나. 민간분야 확대방안 마련

민간분야의 경우 현재 인증 의무화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인증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 편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BF인증 의무대상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면적 확대를 할 경우 현장에서의 혼란, 반감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 확대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 인증의무대상시설 범위 설정

- 장애인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증 의무화 방안 제시
- 대상시설 현황, 확대 시 민간 수용성의 예상되는 문제점 등 파악

○ 민간분야 활성화 방안

-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BF인증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비제도적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다. 공공분야 확대방안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경우 BF인증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실제 인증실적은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BF인증 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분야 확대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공공분야 의무화 대상 확대방안

- 현행 공공부문 의무화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공공부문 인증률 제고 방안 제시

- 미인증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등을 통한 공공부문 확대방안 마련

라. 기타 BF인증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 외에도 현행 BF인증 제도와 관련된 개선사항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포함된다.

○ 인증운영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제시

- BF인증 제도를 원활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인증운영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
- 인증운영기관 선정방법

○ 인증지표, 인증수수료 등 기타 관련법규 정비 방안 제시

- 유사 인증제도 및 타 입법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BF인증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
- BF인증 연장신청 제도 점검
- 인증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개정 수수료 방안 검토 및 개선책 마련

제3절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충실히 검토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문헌에 대한 조사, 현장조사, 초점집단인터뷰(FGI),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가.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BF인증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BF인증에 대한 사례와 선행연구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BF인증제도의 종합적 문제점

○ 현행 공공부문 의무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민간부분 활성화 방안
-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서비스 효율성, 서비스 질 측정
- BF인증 관련 법규
- 녹색인증, 에너지인증 등 유사 인증제도
- BF인증의 당위성(타당성) 논리
- 민간분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 브랜드 가치 측정 및 BF 브랜드 가치 증진 방안
- 민간분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나. 현장조사

7개 인증기관의 업무 등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인증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음과 같은 총 3곳의 인증대상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관련 분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만 현장조사와 현장에서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정보는 “제4장 BF인증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증시설 1곳
 - 현재 실태에 대한 탐색
- 민간부문 의무화 대상시설에 포함될 시설 2곳
 - 향후 의무화가 예상되는 공공기관,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인증시설 각 1곳씩 총 2곳을 현장 방문하여 실태에 대한 탐색

다. 초점집단인터뷰(FGI)

인증기관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우선 인증기관 인증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FGI는 1월 30일 서울에서 2시

간 동안 각 기관에서 1명씩 참석하여 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관의 경우 발주자(지자체/시설주), 건축사/시공담당자, 인증컨설팅 업체(신청 및 인증 업무 대행) 등의 담당자가 포함되었으며, 4월 12일 서울에서 2시간 동안 6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FGI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고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내용은 제3장에 포함하였다.

- 현행 BF인증제도의 종합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공공부문 인증 확산 방안 논의
- 민간분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논의
- 인증운영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논의
- BF인증의 제도적 보완책 논의
- 인증 사후관리 강화 방안 논의

라. 전문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이를 통해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연구 착수와 더불어 2인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고, 중간보고발표 시 2명의 전문가에 자문을 받았다. 현장조사와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정보는 “제4장 BF인증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제4절 연구추진 및 수행체계

본 연구의 연구추진 및 수행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제 2 장

문헌 고찰

제1절 BF인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BF인증 관련 선행연구 고찰

제3절 유사 인증제도 고찰

제1절 BF인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BF인증 제도의 현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BF인증 제도의 현황으로 BF인증 관련 규정, BF인증 조직, BF인증 대상사업 및 인증의 종류, BF인증 절차, BF인증 실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BF인증 관련 규정

현재 BF인증제도는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5년 1월 29일 관련 조항 신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9년 12월 29일 관련 조항 신설)을 법적 근거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경우 제17조의2와 제17조의3이 BF인증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또한 각 법령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중에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설 목록은 [별표 2의2]에서 명시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는 인증대상지역에 ① 읍·면·동,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역,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 중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③ 그 밖에 법령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지역이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하였다.

BF인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시에 관장하는 공동부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칙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인증 대상, 인증기관, 인증심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BF인증 조직

1) 주무 부처

BF 인증제도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이다. 주무 부처는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년간 교대로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2) 인증운영위원회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도시·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인증운영위원회는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인증 기준의 제

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인증수수료 체계 등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3) 인증기관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고,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2019년 현재 BF 인증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으로 총 7개 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8년부터 가장 먼저 인증기관이 되었고 최근인 2017년에는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 인증기관이 되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개별시설과 지역 등 모든 인증대상에 대한 인증이 가능하고, 그밖에 기관들은 전문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개별시설 중 건축물에 대한 인증만 가능하다.

인증실적을 업무 개시연도부터 2017년까지의 예비 인증과 본 인증을 합친 실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인증기관이 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1,6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380건,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274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22건의 순이었다. 그리고 2017년에 인증기관으로 합류한 인증기관 중에서는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 2-1> 인증기관 현황 및 인증실적

인증기관	인증업무 개시연도	인증분야	인증실적
한국장애인개발원	2008	지역, 개별시설(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1,612건
한국토지주택공사	2008	지역, 개별시설(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380건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2016	개별시설(건축물)	274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개별시설(건축물)	222건
한국감정원	2017	개별시설(건축물)	53건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2017	개별시설(건축물)	25건
한국환경건축연구원	2017	개별시설(건축물)	23건

주: 인증실적은 업무 개시연도부터 2017년까지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합친 수치임

다. BF인증 대상사업 및 종류

1) 인증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2008년 7월 15일에 제정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2008년도에 시행될 때, 인증대상은 1. 도시, 2. 구역, 3. 개별 시설의 세 가지였다⁵⁾. 이때 도시는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시·군·구 또는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200만㎡ 이상의 사업지역을 의미하며, 구역은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시·군·구의 행정동, 각종 개발법에 따라 조성되는 10만㎡ 이상의 사업지역 또는 도로와 그 도로에 연속적으로 접하는 공공시설물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을 의미하였고, 개별시설물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의미하였다.

이후 2010년 7월 9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인증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와 지역으로 변경된다. 이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은

5)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3조(2008.7.15. 제정)

포함이 안 되는데, 이것은 2009년 12월 29일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이 신설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대상시설만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3년 12월 24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대상시설 중 도시가 삭제되고, 구역은 지역으로 변경되어 지역인정과 개별시설인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때 지역은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읍·면·동 또는 각종 개발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10㎡ 이상의 사업 지역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지역을 의미하게 된다.⁶⁾

공원,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은 2015년 1월 28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신설되면서 2015년 8월 3일에 개정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인증대상)에 포함이 된다. 제2조에 따르면 인증대상은 1. 개별 시설, 2. 지역으로 구분되며, 개별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이 포함되는데, 제10조의2 제3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여 인증 의무화가 시작되었다.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2015년 7월 24일에 신설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을 별표2의2로 정해주고 있다.

<표 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 관련)

대상 시설	
1.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6)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3조(2013.12.24. 개정)

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안마시설소
	공연장 및 관람장
3. 문화 및 집회 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학교
7.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아동 관련 시설
8.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1. 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갇혀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갇혀·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현재 BF 인증대상은 크게 개별 시설과 지역으로 구분된다. 개별 시설

중 대상시설은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경우는 지역과 함께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2-3> BF인증 대상

구분		내용
개별시설	대상시설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 밖에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등
	여객시설	정류장, 철도시설, 환승시설, 공항 및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도로	보도, 횡단시설 등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읍·면·동, 도시·군계획사업, 지역재정비축진사업, 지역택지개발사업 지역 등

2) 인증 종류(단계)

BF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심사기준에 따라 각각 최우수, 우수, 일반 등급으로 구별하여 인증결과가 부여된다. 예비인증은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신청하고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본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본인증은 공사 및 지역조성을 완료하거나 교통수단을 등록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인증받은 대상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 및 인증지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보한다.

라. BF인증 절차 등

1) 인증절차

BF 인증절차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에 따라 구분된다. 예비인증은 예비인증 신청→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 등 1차 평가→인증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인증여부 및 등급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본인증은 본인증 신청→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인증심의위원회의 인증여부 및 등급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2) 인증수수료

인증을 신청한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예비인증, 본인증,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개별시설의 크기에 따라 인증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다. 지역 인증의 예비인증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429만원이고, 본인증의 경우 면적에 따라 618만원에서 995만원까지 부과된다. 개별시설 중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예비 인증 286만원, 본인증 403만원이 부과되고,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의 경우 예비인증 시 면적에 따라 103만원에서 309만원까지 수수료가 소요되고, 본인증 시 면적에 따라 201.5만원에서 604.5만원까지 부과된다.

<표 2-4> 인증수수료 체계(2019.1.1. 시행)

(단위: 만원)

구분	지역 인증			개별시설 인증					
	10만㎡ ~ 200만㎡	200만㎡ ~ 300만㎡	300만㎡ 이상	교통 수단, 여객 시설, 도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300㎡ 미만	300㎡ 이상 ~ 1,000㎡ 미만	1,000㎡ 이상 ~ 3,000㎡ 미만	3,000㎡이 상 ~ 10,000㎡ 미만	10,000㎡ 이상
본 인증	618	807	995	403	201.5	322.4	403	483.6	604.5
예비 인증	429	429	429	286	103	164.8	206	247.2	309

주: 부가세 별도, 인증 연장 수수료는 100분의 50,

주: 개별시설의 제5구간(10,000㎡ 이상)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일(2019.12.31.)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3) 인증서 발급

인증이 결정되면 개별시설과 지역에는 각각 인증명판과 인증안내판이 소유자 등에게 발급된다. 인증명판 또는 인증안내판을 받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소유자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이를 부착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마. BF인증 실적

BF인증 제도의 인증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증의무가 있는 국가·지자체의 인증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2%대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BF인증 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4,771건의 인증이 있었다. 인증대상을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공의 인증실적이 4,172건으로 전체의 8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의 인증실적은 599건으

로 전체의 12.6%에 불과하다, 해마다 공공의 인증비율이 높아지고 민간의 인증 실적은 점점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예비인증에 비해 본인증의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예비인증은 3,346건으로 70.1%를 차지하고 있지만, 본인증은 1,425건으로 29.9%에 불과한 수준이다.

<표 2-5> BF인증 실적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총계		4,771	4	18	45	96	115	126	155	188	629	1,213	1,654	528
인증 대상	민간	599	1	3	24	52	46	49	50	54	106	130	100	34
	공공	4,172	3	15	21	44	69	77	105	134	523	1,083	1,554	494
인증 단계	예비 인증	3,346	3	13	33	89	89	87	92	123	545	941	1,041	290
	본 인증	1,425	1	5	12	7	26	39	63	65	84	272	316	238

주: 2019년은 4월까지의 실적임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또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 대한 인증은 미미한 반면, 건축물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증대상별 인증실적(`08~`17)을 보면 건축물은 2,473건이지만, 여객시설은 97건, 공원은 10건, 도로는 8건, 지역은 1건에 불과하다.

<표 2-6> 인증대상별 인증실적 현황

(단위: 건)

구분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합계
예비인증	최우수	1	5	2	63	168	—	229
	우수	—	3	3	22	1,595	—	1,623
	일반	—	—	—	—	163	—	163
	합계	1	8	5	75	1,926	—	2,015
본인증	최우수	—	—	2	12	83	—	97
	우수	—	—	2	10	445	—	467
	일반	—	—	1	—	19	—	20
	합계	0	0	5	22	547	—	574
공공		—	6	8	15	2,045	—	2,074
민간		1	2	2	82	428	—	515

건축물의 인증등급별 현황(`08~`17)을 살펴보면 예비인증 중 최우수 약 9%, 우수 약 83%, 일반 약 8%였으며, 본인증의 경우는 최우수 약 14%, 우수 약 75%, 일반 약 11%로 전반적으로 예비인증과 본인증 모두 우수등급이 대부분이었다.

<표 2-7> 건축물의 세부유형별 인증 현황

(단위: 건)

구분		근린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 시설	판매 시설	의료 시설	교육 연구 시설	노유 자시 설	업무 시설	숙박 시설	관광· 휴 게시 설	공동 주택	기타 시설	합계
예비	최우수	8	22	1	—	3	21	32	41	—	1	24	15	168
	우수	313	99	—	5	5	375	258	280	1	3	66	189	1,594
	일반	22	16	—	—	1	28	17	23	—	1	34	22	164
	합계	343	137	1	5	9	424	307	344	1	5	124	226	1,926
본	최우수	1	13	—	—	2	10	16	17	—	1	17	6	83
	우수	107	28	—	—	1	83	93	76	—	—	17	41	446
	일반	4	—	—	—	—	2	—	3	—	—	7	2	18
	합계	112	41	—	—	3	95	109	96	—	1	41	49	547
공공		408	155	—	4	8	474	373	374	1	4	10	234	2,045
민간		47	23	1	1	4	45	43	66	—	2	155	41	428

2. BF인증 관련 법체계

2008년 도입된 BF인증 제도는 인증신청, 심사, 심의, 인증서 발급 등의 인증업무 전반에 걸친 관리시스템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개별 시설물 또는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BF인증제도 관련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시행규칙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령이다. 즉,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공신력있는 인증기관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BF인증 관련 법 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BF인증 관련 법 체계

법률	<div data-bbox="453 365 850 43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div> <div data-bbox="453 434 850 698">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제10조의5(인증의 취소) 제10조의6(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10조의7(청문)</div>	<div data-bbox="885 365 1244 43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div> <div data-bbox="885 434 1244 698">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제17조의3(인증 표시 등)</div>
시행령	<div data-bbox="453 741 850 810">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div> <div data-bbox="453 810 850 940">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의 범위) [별표 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 관련)</div>	<div data-bbox="885 741 1244 810">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div> <div data-bbox="885 810 1244 940">제15조의2(인증대상지역) 제15조의3(인증표시)</div>
시행규칙 (공동 부령)	<div data-bbox="453 983 1244 1028">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div> <div data-bbox="453 1028 1244 1344"> <div>제1조(목적)</div> <div>제2조(인증 대상)</div> <div>제3조(인증기관의 지정)</div> <div>제4조(인증기관의 의무 등)</div> <div>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div> <div>제6조(인증의 신청)</div> <div>제7조(인증심사 등)</div> <div>제8조(인증 기준 등)</div> <div>제9조(인증서 발급 등)</div> <div>제10조(인증의 취소)</div> <div>제11조(재심사 요청)</div> <div>제12조(예비인증의 신청 등)</div> <div>제12조의2(사후관리)</div> <div>제12조의3(인증수수료)</div> <div>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div> <div>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div> <div>제15조(위원의 해촉)</div> </div>	

가. 법률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근거로 하여 실시해온 BF인증제도는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5년 1월 29일 관련 조항 신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9년 12월 29일 관련 조항 신설)을 법적 근거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두 법률 중 BF인증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이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경우 제17조의2와 제17조의3이다. 두 법률에서의 BF인증제도와 관련된 해당 내용은 <표 2-1>, <표 2-2>와 같다.

이에 따라 법률에 의한 인증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와 같은 개별시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서의 BF인증 관련 내용(10조의 2~10조의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 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5(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의6(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7(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5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의 BF인증 관련 내용(17조의 2~17조의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권자와 인증 기준·절차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4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3(인증 표시 등)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이하 "인증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군·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증시설물과 인증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②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인증대상시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는 인증대상 지역의 범위를 추가하고 있다. 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설 목록은 [별표 2의2]에서 명시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는 인

증대상지역에 ① 읍·면·동,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역,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 중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③ 그 밖에 법령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지역이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하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BF인증 관련 내용(5조의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별표 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 관련)	
대상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안마시술소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4. 종교시설	동·식물원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8. 노유자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갇셈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갇셈·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의 BF인증 관련 내용(15조의 2~15조의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인증대상지역)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

역을 말한다.

1. 읍·면·동
 2.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지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지역
 - 나.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 라.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역
 - 마.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
 3. 그 밖에 법령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지역이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
- 제15조의3(인증표시)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에 인증명판(人證名板)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군·구 및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인증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의 도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다. 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서 인증의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시함에 따라 두 부처가 동시에 관장하는 BF인증 관련 공동부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2010년 7월 9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규칙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인증 대상, 인증기관, 인증심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공동부령)에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내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6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도시·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③ 제1항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을 받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 또는 인증을 받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군·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인증기관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별로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실적 및 인증업무의 추진 상황을 주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6. 삭제 <2015.8.3.>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인증의 신청)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개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군·구 및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별시설
 - 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 나.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2.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 ③ 개별시설의 소유자·관리자·시공자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제7조(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제심사 요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8조의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하되, 별표 3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별표 4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되,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중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인증을 받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통보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 ②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제9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인증 대상, 인증날짜, 인증등급, 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명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설 및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해당 인증시설과 인증지역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시설의 경우에는 인증명판을, 인증지역의 경우에는 인증안내판을 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서, 인증명판 또는 인증안내판을 받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⑦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일까지 인증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취소)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 요청)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제10조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등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소유자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예비인증을 받은 소유자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12조의2(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대상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 및 인증지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인증수수료) ① 소유자등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 제9조제7항에 따른 인증연장 신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비인증 신청을 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장은 인증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⑧ 인증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증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주무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라. 조례

시·도 중에서는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와 같은 7개 시·도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 달서구, 대구시 북구, 광주시 동구,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남도 거창군과 같은 5개 시·군·구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제주도와 같은 4개 시·도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6개 지역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표 2-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시행일	제(개)정 일자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2015. 12. 31	2015. 12. 31, 제정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2015. 10. 24	2015. 9. 23, 제정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2015. 10. 30	2015. 10. 30, 제정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	2014. 1. 1	2014. 1. 1,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2016. 6. 1	2016. 6. 1, 제정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	2015. 11. 4	2015. 11. 4, 제정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2015. 11. 4	2015. 11. 4, 제정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5. 12. 30	2015. 12. 30, 제정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2013. 6. 13	2013. 6. 13,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2019. 3. 14	2019. 3. 14,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2016. 4. 8	2016. 4. 8, 제정
시·군·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2014. 4. 11	2014. 4. 11, 제정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2016. 6. 10	2016. 6. 10, 제정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Barrier Free인증)에 관한 조례	2018. 10. 5	2018. 10. 5, 일부개정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2013. 6. 19	2013. 6. 19, 제정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2016. 9. 28	2016. 9. 28, 제정

각 지역의 조례는 비슷한 형식과 내용이지만, 대상시설, 의무시설,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부산시처럼 대상시설과 의무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의 대상시설과 의무시설을 그대로 인정하는 조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각 시·도가 건축주인 건축물뿐만 아니라, 시·도가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시·도가 전부 혹은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까지도 의무시설에 포함하고 있다. 또 의무대상시설에 공공건물

의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과 개축도 포함하고 있는 조례들이 다수 있다.

또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처럼 민간기관의 건축물도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지정하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기타 행정적 지원을 등을 제공함으로써 BF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대상시설에 각 시·도가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점,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도 포함하고 있는 점, 장애인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 목적 건축물, 비영리 기관이 건축주인 건축물 등에 대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점 등은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함의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표 2-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비교

조례 (지역으로 표기)	대상시설 (적용 범위)	의무시설 (인증취득의무)	지원 (인증취득지원)
서울시 교육청	1.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부산시	—	—	의무인증 시설을 제외한 시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대구시	의무시설+권장시설 권장시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개인이 건축주인 건축물	대 구 광 역 시 (이하 “시”라 한다)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권장시설에 대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 가능
광주시	의무시설+권장시설 권장시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그 밖에 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	권장시설에 대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 가능

	하는 건축물 3.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 시설로써 건축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하며,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고 시에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건축물	원하여 신축·개축하는 건축물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광주시 교육청	1.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경기도	의무+권장시설 권장시설: 민간시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1. 경기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경기도가 신축하여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경기도 교육청	1. 경기도교육청 소관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	인증 취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가능
충청남도	의무시설+권장시설 권장시설: 민간시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개인이 건축주인 인증(예비인증 포함) 받은 건축물	1.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도지사가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증축, 전면 개축하는 건축물	민간건축물의 인증 대상의 시설주(또는 인증수수료 납부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수수료의 50%(부가세 제외) 지원 가능
전라남도	의무시설+권장시설 권장시설: 민간시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1. 전라남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전라남도가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3. 그 외 전라남도가 전부 혹은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수수료 지원 가능 기타 인증 취득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행·재정적 지원 가능
제주도	의무시설+권장시설 권장시설: 민간시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

4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제주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4. 건축주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제주자치도가 신축하여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료(재인증을 포함한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제주도 교육청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도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자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학교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지원 가능
대구 달서구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3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 2.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3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대구 북구	의무시설+권장시설 권장시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행정적·재정적 지원
광주 동구	의무시설+권장시설 권장시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1. 동구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동구가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3. 그 외 동구가 전부 혹은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 4. 동구의 도로, 공원 등 공공발주 대상물	공공건물 입찰 참여 시 기존 인증 취득 실적에 있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등 인증 취득 장려
목포시	의무시설+권장시설 권장시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건축물	1. 시가 건축하는 공용의 청사 2. 시가 신축하여 위탁 운영하는 다중이용 공공건물 3. 그 외 시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수수료 지원 기타 인증 취득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거창군	의무시설+권장시설 권장시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 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거창군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 용시설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수수료의 50퍼센트 (부가세 제외) 지원
-----	--	--------------------------------	--

3. BF인증제도의 문제점

문헌,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나타난 BF인증제도는 비활성화 문제, BF인증 대상의 제한성, 수수료 등 비용의 부담,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의 문제점 등과 같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가. BF인증제도 비활성화 문제

무장애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축주 등이 BF인증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고, 공간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건축주 등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BF인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건축주 등의 입장에서 보면 BF인증제도는 편의시설 정책에 부가된 추가규제이고, BF인증에 따른 실이익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일반 국민들은 BF인증제도 홍보부족에 따라 BF인증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BF인증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1) BF인증제도 필요성에 대한 낮은 체감도- BF인증제도를 편의시설 정책의 다른 버전으로 여기는 사회인식

현행 BF인증제도가 주로 접근성을 강조하다 보니 편의증진보장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에 부가된 규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추가규제로 여기는 인식이 많다 보니 법률에서 의무를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규정을 지키려 하나, BF인증은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굳이 지키려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 BF인증에 따른 이익 부족

현행 BF인증제도는 인증을 받은 노력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의 만족감 이외에 제공되는 이익이 부족한 상황이다. BF인증을 받은 경우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물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BF인증을 위해 소요한 비용 및 노력에 비해 얻는 이익이 적을 경우 인증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 현행 인증제도 하에서는 인증을 받더라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 단지 BF인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BF인증을 받기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편의시설 적합성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해당 면적만큼 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는 혜택만 있을 따름이다. 오히려 인증신청 시 2~4백만원 정도의 인증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의 경우 인증의무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지만 불이행 시 어떤 제재조치도 없다. 결국 현재 BF인증 제도는 공익적 차원의 만족감 외에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고, 또한 벌칙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축주, 특히 민간분야 건축주 입장에서는 BF인증을 받아도 별다른 이익이 없고, 안 받아도 벌칙이 없다보니 인증을 회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민간부문의 BF인증을 유도할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3) BF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BF인증이 결정되면 개별시설과 지역에는 각각 인증명판과 인증안내판이 소유자 등에게 발급된다. 인증명판 또는 인증안내판을 받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소유자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이를 부착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즉 명판 등을 건물 앞에 부착하거나 광고 시 BF인증 시설임을 알림으로써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유자 등이 BF인증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BF인증에 대해 알고 있고, BF인증을 받은 경우 이용 등이 더욱 활성화되

거나 심리적 만족감이 상승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BF인증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BF인증이 하나의 브랜드로써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BF인증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4)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의 낮은 인식

현재 우리나라에서 편의시설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 보니, BF인증에 대한 인식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9월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희한 결과, 업체 측은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우며, 폐업 시 임대인이 경사로 철거를 요구하는 점 등을 어려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주는 장애인 1~2명을 위해 비용을 쓸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한편, 경사로가 인도를 점유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설치된 경사로를 철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편의시설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 보니, BF인증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나. BF인증 의무대상의 제한성

2015년 ‘장애인등편의증진보장법’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BF인증의 의무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 의무인증대상의 제한성, 신축건물에만 한정되는 건축범위의 제한성, 용도와 면적에 대한 고려에 따른 기준 미비, 미이행에 따른 제재 수단 미흡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1) 인증대상의 제한성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경우로 제한되다 보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설립한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은 모두 배제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민간이 건축하는 건물 및 시설의 경우에도 국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를 반드시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이와 같은 건물 및 시설이 의무대상에서 배제된 문제점이 존재한다.

2) 건축 범위의 제한성

인증대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로 인증의무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증축, 개축,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BF인증 의무대상 시설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존 건물의 경우에도 이 제도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하지만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지표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등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BF인증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을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는 현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3) 용도와 면적에 대한 고려 미흡

BF인증 의무대상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로 규정하다 보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소규모 시설까지 모두 포함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5조의2 관련 [별표 2-2] BF대상시설 관련하여, 현재 규모의 제한이 없다 보니 공원 내 화장실과 같은 소규모 건물도 의무대상이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소규모 시설이라 하여도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의 접근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시설의 용도에 따라 이용 정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용도 및 규

모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에 따라 일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 제도 자체에 대한 반감을 높이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용도와 규모를 함께 고려한 대안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다. 소규모 시설 인증수수료 및 재인증 수수료 등 수수료 부담 문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 비용, 수수료 비용 등이 발생한다. 물론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을 위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BF인증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지불해야 할 비용이 클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소규모 시설의 수수료와 재인증 수수료가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민간시설의 자발적인 BF인증 참여를 유도하고자 2018년 8월 ‘BF 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고, 기존 예비인증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인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구분 차등화해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소규모 민간시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그럼에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인증이 꼭 필요함에도 수수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BF인증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5년 후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건물의 큰 변동의 없었음에도 5년마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

라.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의 문제점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고, 이로 인해 인증기관 간 인증 품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증운영기관이 없다보니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건축주 등 인증제도의 수요자에 대한 지원업무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인증심의위원회 및 인증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시민의 대표성이 부족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1)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부재

현행 인증기관 지정 정책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연장을 위한 평가나 재지정을 위한 평가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증기관을 수시(1년 단위)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다 보니, 현재 운영 중인 7개 인증기관별로 상당한 전문성 격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인증 품질에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몇몇 기관들은 공공성보다는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 기관의 인증 품질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과도한 시장화를 경계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미달되는 기관은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인증운영기관 부재

인증기관이 2-3곳에 불과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인증기관을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인증기관이 7곳에 이르게 되면 주무부서의 인력만으로는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 인증제도의 홍보 및 제도개선, 심사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인증기관만 있다보니 인증을 위한 심사제도는 발전할 수 있지만, 건축주 등에게 인증제도를 알리고, 제대로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등 지원업무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BF인증 제도가 현재보다 더욱 활성화되고, 인증기관이 많아졌기 때문에 타 인증제도의 경우처럼 인증운영기관을 새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인증심의위원회 및 인증운영위원회 구성의 문제 - 시민 대표성 부족

최종적인 인증단계인 인증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더불어 해당 전문분야 전문가와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복지 업무 경력자를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에 따라 실제 운영 현장에서는 위원회가 건축, 도시계획, 조경, 장애인복지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어, 장애 관점보다는 업계의 의견이 과다 대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BF인증제도는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임산부 포함) 등 시설,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 노인, 장애인, 여성(임산부 포함) 등 시민대표가 4-5인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편의시설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체, 시각, 청각, 발달 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BF인증 관련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일반적인 접근권 개념, 건축물 접근권 개념,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등 BF인증과 관련된 개념을 우선 살펴보고, 편의시설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접근성 도시 대상’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1. BF인증 관련 개념

가. 접근권

접근권(Right to Access)은 장애인의 기본권 중 하나로 건축물의 이용과 접근

에 대한 권리(건축물 접근권 또는 시설 접근권)와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권리(이동권), 그리고 전자 및 비전자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권리(정보접근권)를 포함하고 있다(배용호, 2017).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서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대상의 범위에 있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대상시설은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이용방법에 있어서 장애인도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배용호, 2017).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접근성(accessibility)이라고하며,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등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특히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과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서비스’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UN, 2007).

접근권의 범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광범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BF인증의 대상이 시설로 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 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 그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위의 세 가지 접근권 중에서 건축물(또는 시설) 접근권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나. 건축물 접근권

우리나라의 건축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특징은 건축물의 접근성을 편의시설이라는 시설물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영향으로 장애인의 건물의 이용과 이동에 대한 부분을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시설과 설비를 편의시설로 지칭하게 되었다(배용호, 2018). 법령 측면에서도 보면 「심신장애자복지법」(1980)에서부터 최근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2005)까지 공간 전체의 이용측면에서의 접근성 또는 접근

권 보장이라기보다는 편의시설 설치라는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려고 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접근성은 다양한 방안 가운데 편의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었고 건축물 접근권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권리로 축소되고 말았다(배용호, 2018). 이에 반해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뿐 아니라 장애물의 제거(barrier free),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포함시킨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BF인증 제도의 의무화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을 통해 합리적 편의제공을 도입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정책은 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74.8%로 2013년의 60.2%에 비해 증가했으나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률은 실제 설치율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편의시설 설치율과 장애인의 접근성이 비례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배용호, 2015; 배용호, 2018).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의 질적 분석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의 주출입구 접근로가 편리하게 잘 조성되고 있고, 입구에 점자블록과 건물 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건축물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 없이 계단만 설치되어 있으면 결국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는 이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 되기 때문이다(배용호, 2018). 이는 결국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장차법이 도입된 이후 근 10년 간 시설물 접근에 대한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는 전체 중 12.2%로 재화·용역 일반,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이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건축물 등 시설에 접근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실제 건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존중

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제품이나 시설, 환경을 의미한다. 즉, 유니버설디자인의 대상자는 모든 사람이며, 장애의 유무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체형의 차이, 신체기능이나 이해력의 차이 등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인순 외, 2016; 배용호, 2017).

BF 인증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BF인증이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처음부터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은 <표2-10>과 같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표 2-10>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원칙

구분	원칙
1	누구에게든 공평히 이용 가능할 것
2	사용상 자유도가 높을 것
3	사용자가 간단히 바로 알 것
4	필요한 정보가 바로 이해 가능할 것
5	실수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디자인일 것
6	무리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작은 힘으로도 편하게 사용 가능할 것
7	접근하기 쉬운 공간과 크기를 확보할 것

자료: 김인순 외, 2016 p.12재인용

유니버설디자인은 특정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복수의 디자인 및 제품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유니버설디자인의 예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2018). 2018 편의증진 민간교육 1기 교재 p.9 재인용

국내에서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기준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BF인증의 지속적인 발전과 맞물려 공간 유니버설디자인은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정보와 제품 영역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BF인증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초고령화된 사회구성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 환경의 유니버설로의 변화가 요구되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국제 흐름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이다(김인순 외, 2016; 배용호, 2018). BF인증제도는 건물과 공간에 대한 디자인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체가 아닌 일부만 개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BF인증과 함께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로 유니버설디자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김인순 외, 2016).

2. 브랜드 가치(Brand Value)

가. 브랜드 가치의 개념

브랜드의 사전적 의미는 “상표, 제품 이름, 품질, 품종 그리고 소유주 등을 표시하는 소인(消印), 각인(刻印) 등”이다. 그러나 학문적인 정의에 따르면 브랜드는

“특정 판매자 혹은 판매집단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의 것과 구별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문자, 한 무리의 단어 및 문자, 디자인 혹은 이들의 결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손일권, 2003).

학자들의 정의도 조금씩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Hugh Davidson은 브랜드를 심리적인 이익 측면에서 보아서 “브랜드는 특별한 이익을 보장하며 소비자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구체화시킨다, 또한 브랜드는 품질, 가격, 목적과 성과에 대해서 고객의 마음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생필품들의 경우에는 정체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브랜드가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Davidson, 1987; 박문기, 2000 재인용). 한편 Philip Kotler는 Marketing Management에서 브랜드를 ‘이름, 용어, 신호, 심볼 또는 디자인, 이들 간의 다양한 결합이 경쟁의 그것들과 차별화되어 판매자의 서비스와 제품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Kotler, 1991; 박문기, 2000 재인용).

지금은 제품에 브랜드의 의미를 부여하여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그 브랜드를 같이 구매하는 의미가 되었으며, 제품의 수요시장이 아니라 브랜드 수요의 시장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오늘날 브랜드는 기업이나 판매집단의 제품과 서비스를 다른 경쟁사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기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브랜드 범위는 브랜드 네임(Brand Name), 트레이드 마크(Trade Mark), 브랜드 마크(Brand Mark)로 구분된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브랜드 네임이라 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각적 기호, 마크 등을 브랜드 마크 라고 하며, 트레이드 마크란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으므로 상표권이 형성되기에 타인에게서 침해를 받지 못하도록 보호가 되어 있다(Kotler, 1991; 박문기, 2000 재인용). 이런 브랜드는 초기 단계에 제조원을 표시하는 수단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브랜드 자산이란 개념이 도입되면서 브랜드를 기업의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브랜드를 제품의 일부로 간주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곡현, 2019).

브랜드 자산가치란 소비자나 고객이 어떤 특정상표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됨으로써 그 브랜드의 상품 가치가 증가된 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런 브랜드는 기업의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내부 프로세스의 혁신과 외부구조 및 기업의 유형자산과 결합 할 때 하나의 자산으로 역할을 한다. 브랜드 자산의 학문적 정의로

Aaker(1991)는 “브랜드 자산이란 브랜드의 이름, 상징과 연관된 자산 및 부채의 총합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가 기업과 그 기업에 제공하는 가치를 브랜드 자산이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브랜드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는 지각된 품질, 브랜드 연상이미지,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인지도를 꼽았다(Asker, 1991). Narver and Slater(1991)는 소비자, 기업, 유통경로 참가자의 입장에서 브랜드가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더 높은 마진과 매출액을 보장하며, 경쟁자에 비하여 지속적이고 강한, 그리고 차별화된 우위를 제공해주는 집합체라고 브랜드 자산을 정의하고 있으며, Bovee와 Arens(1992)는 브랜드 자산을 어떤 상표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경쟁 상표와 비교해서 소비자, 유통업자, 판매원 등이 생각하고 느끼는 가치로 정의하였다(곡헌, 2019). 또, Keller(1993)는 브랜드 자산을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브랜드 지식이 미치는 차별적 효과로 정의하였으며, 고객기반의 브랜드자산은 브랜드 지식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브랜드 자산은 소비자가 그 브랜드에 친밀함을 느끼고 호의적인 감정을 가짐으로써 강력하고 독특한 브랜드 연상이 발생한다. 브랜드 지식은 브랜드 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인 브랜드 연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브랜드 반응에는 선호와 행동인 브랜드 선택행동, 추천행동,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사, 확장 브랜드 상품의 구매행동 등이 포함 된다. 또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브랜드 연상에 의하여 반영되는 브랜드의 인지를 말하며, 브랜드 연상에 있어서 호의도는 어떤 상품의 구성을 통해 형성되며 소비자의 기억에 얼마나 강하고 독특하며 경쟁우위에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 해당 브랜드를 구매하게 된다고 하였다(백승희, 2003). 한편 Biel(1993)은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의 이미지로 유도되며 모든 물리적 자산을 제외한 브랜드의 경제적인 가치라고 정의 하였으며,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자, 공급자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품 그 자체의 세 가지 구조로 나누었고 이 세 가지 이미지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다. 또 Anantachart and Sutherland(1998)는 브랜드 자산은 개개인의 브랜드에 대한 만족수준 및 경쟁브랜드에 대한 선호도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백승희, 2003). 이처럼 브랜드 자산가치는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분류되고 해석되고 있지만

대부분 Aaker(1991/1992,1996)의 브랜드 자산가치 구성요소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곡현, 2019). 결국 브랜드 가치란 브랜드와 연계되어 제품의 가치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는데 브랜드 이름의 인지도, 소비자의 브랜드 로열티 및 품질에 대한 인식, 브랜드와 관련된 연상이미지 등을 합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나. 브랜드 가치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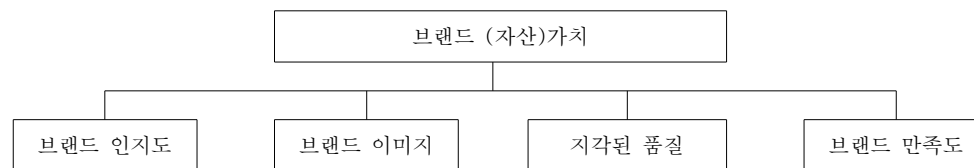
Aaker(1991)는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조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응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량적인 조사를 통해 브랜드 자산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과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작된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는 브랜드를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하위 평가항목에 따라 측정하였다.

한편 Keller(1993)는 브랜드 가치를 오직 브랜드에 대해서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마케팅의 효과라고 주장하였으며 고객인식에 기초한 브랜드 자산가치를 브랜드 지식이 어떤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노력에 대한 소비자의 차별적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고객의 브랜드에 대한 재인과 회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브랜드 인지와 연상의 집합인 브랜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이들은 다시 각각 다른 여러 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하위차원들이 고객이 지각하는 브랜드 자산가치의 형성에 관여하고 고객인식에 기초한 브랜드 자산가치는 고객이 특정 브랜드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강하며, 독특한 브랜드 연상을 가졌을 때 형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브랜드는 이름이나, 로고, 심벌 등과 같이 브랜드를 구성하는 브랜드 요소나 아이덴티티에 관한 초기 선택이 중요하며, 브랜드명은 이해하기 쉽고, 발음하기 쉬우며, 쓰기 쉬워야 한다. 또한 기업의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은 고객의 인지도와 호의적이며, 강하고, 독특한 브랜드 연상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과 통합될 때 그리고 몇몇 개체에게 브랜드를 연결시킴으로서 브랜드에 간접적으로 전이될 때 브랜드 자산가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김연선, 2004).

다. 브랜드 가치의 구성 요소

브랜드 자산가치는 학자 간 연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연구되어지기도 하고 구성요소도 조금 다르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브랜드 자산가치의 구성요소는 Aaker(1991)의 이론으로 브랜드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지각된 품질, 브랜드 만족도로 구성된다(곡현, 2019 재인용).



[그림 2-3] 브랜드 가치의 구성 요소

자료: Asker(1991), 곡현(2019) 재인용

1)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인지란 잠재된 구매의사를 가진 사람이 어떤 제품 부류에 속해있는 특정한 브랜드를 인지 또는 재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브랜드 인지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목적 중의 하나로써, 브랜드에 대한 호감과 친밀감을 조성하는데 이와 같은 호감과 친밀감은 기업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에 따라 높은 브랜드 인지도 구축은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브랜드 인지 없이 소비자의 구매가 결정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심리학적으로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선택할 때 타 브랜드 보다 친밀한 브랜드가 먼저 구매 고려 대상이 된다. 이런 친숙함이나 호감은 이미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대기업보다 신생기업이나 이제 막 브랜드를 출시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그 기업이나 브랜드의 약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이미 인지하거나 친숙한 브랜드를 주로 구입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본인이 인지하고 친숙한 브랜드가 비교적 믿을만하고 품질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의 결과로, 소비자들에게 구매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먼저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구입희망의 브랜드 군에 포함되어야 하

므로 무엇보다 브랜드 인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결국 브랜드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으면 소비자가 브랜드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지도는 제품범주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브랜드 연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곡현, 2019).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중 브랜드 접점(Brand Touch Point)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소비자와 브랜드가 처음 대면하는 그 순간을 중요시 한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향후 구매의사 결정시 구매 희망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브랜드 인지도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 인지도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이미지를 연결해 주는 매체 역할을 한다. 둘째, 브랜드 인지도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친숙성과 신뢰성을 제공해주어 구매 가능성을 높인다. 셋째, 브랜드 인지도는 소비자에게 해당 브랜드를 상기하게 하여 구매할 때 고려할 상품군에 포함되게 한다(김용만, 사회정, 김은정, 2005).

2)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하여 갖게 되는 전체적인 인상을 말하는데, Aaker(1991)는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의 브랜드 연상들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브랜드의 속성(attribute), 편익(benefit), 태도(attitude)등과 관련된 연상들의 집합으로 소비자가 그 브랜드에 대해 갖는 전체적인 인상을 말한다(이은주, 2007).

브랜드 이미지는 해당 브랜드와 연관된 여러 연상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며 소비자의 기억 안에 새겨진 브랜드 연상들로 표현된 브랜드에 대한 인지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Keller, 1998). Keller에 의하면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 연상의 강도, 유형, 독특성, 호감도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범주 중 하나인 브랜드 연상의 강도는 소비자들이 브랜드 정보를 인식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Keller, 1998). 또한 브랜드 연상은 어느 정도로 호의적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은 본인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키는 이점과 속성을 브랜드가 갖고 있다고 믿을 때,

해당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브랜드 연상의 호감도는 브랜드 연상의 전달가능성 및 타당성과 관련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Keller, 1998). 브랜드 이미지에 내포되어 있는 연상은 커뮤니케이션 노출이나 브랜드와 관련된 경험 등에 의해 강화 될 수 있으며 특히 이런 이미지들이 일치되면 될수록 브랜드 자산은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상호간의 연상이 불일치되는 경우 오히려 브랜드 자산은 감소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브랜드 자산의 강력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브랜드 연상과 브랜드 이미지의 연상이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브랜드 연상 이미지는 제품 속성, 유명인 모델, 특정한 심벌 등이 포함되는데,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 기억 속에 형성된 브랜드 연상에 의해서 반영 되어지는 브랜드의 인지라고 한다면, 브랜드에 대한 호감, 강도, 독특함은 브랜드 자산 가치를 구성하는 브랜드 연상의 각기 다른 하위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나 소비할 때와 연관된 상품의 외부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경험의 전·후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곡현, 2019).

3) 지각된 품질

지각된 품질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품질이나 우수성에 따른 품질 지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각된 품질의 가치는 방문 이유, 차별화 및 포지션, 프리미엄 가격, 유통 구성원의 이해관계, 브랜드 확장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제공한다(Aaker, 1991). Garvin(1987)은 지각품질을 브랜드, 광고, 제품이미지 등에 의한 간접적인 평가 측면에서 소비자 개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품질이라고 말하고 제품 품질은 성능, 신뢰성, 특징, 재구성, 제품 사용의 일치성, 제품의 마무리, 서비스능력 등의 7개 차원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Zeithaml(1988)은 지각된 품질을 제품의 전반적인 탁월성 또는 우월성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으로 보았으며,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품질과 다르고 상품의 구체적인 속성이 아닌 추상적인 속성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태도와 유사한 총체적인 평가라고 하였다. 이런 지각된 품질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구매경험을 통하여 그 브랜드가 우수하고 차별적인 것으로 인지한다는 것으로, 결국 지각된 품질이 높아질수록 브랜드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그

제품을 구매하고 이용함으로써 얻는 개인적인 경험과 만족하게 되는 상황 등이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끼치므로 지각된 품질이 높다는 것은 브랜드의 우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곡헌, 2019).

Aaker(1991)는 지각된 품질을 소비자들이 특정한 제품 또는 서비스가 본래 의도한 바에 따라 소비자가 갖게 되는 전반적인 우수성이나 품질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지각된 품질의 가치는 브랜드 확장, 프리미엄 가격, 구매이유, 차별화 및 포지션, 유통구성원의 이해관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치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소비자들은 지각된 품질을 평가하는 단서로 브랜드를 중요시 하고 있어 소비자가 반드시 그 브랜드에 대한 자세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제품의 질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의 질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이 브랜드 인식의 정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4) 브랜드 만족도

Aaker(1991)에 의하면 브랜드 만족도는 브랜드 자산가치의 핵심으로 고객이 가지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애착의 정도를 나타내며, 사용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브랜드 자산가치의 다른 요소와는 다르다고 한다. 브랜드 만족도는 때로는 브랜드 애호도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사전 구매나 사용 경험 없이 존재할 수 없지만, 브랜드 자산가치의 다른 요소인 인지도, 지각된 품질, 선호도 등에 영향을 받아 생성된다. 이런 브랜드 만족도는 소비자의 막연한 반복구매와는 달리 그 브랜드에 대한 선호와 애착을 전제로 하며,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이자 경쟁기업 또는 경쟁 브랜드의 견제를 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은 브랜드 만족도를 브랜드 자산의 핵심으로 기업의 핵심적인 전략목표로 여기고 있다. 한편 Keller(2003)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브랜드가 되기 위한 최종단계를 소비자가 브랜드의 관계로 보며, 강력한 브랜드를 위해서는 단계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상위단계의 목표는 하위단계의 목표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선행되어 소비자에게 인지된 후에야 브랜드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고, 브랜드의 의미가 전달되어야 제품의 품

질이나 감정과 관련된 소비자의 반응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최종단계에서 브랜드와의 관계가 공고히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브랜드 만족도나 브랜드 공명성의 개념은 모두 소비자가 브랜드에 갖는 애착을 전제로 한 만족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연선, 2004). 이처럼 브랜드 만족도는 기업 시장에 있어 정보 효율성 증가, 사업적 위험 감소, 부가가치 및 이미지 편익 등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 준다.

3. 편익시설의 효율성

국가 정책에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 또는 비용효과분석을 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CBA : cost-benefit analysis)은 현시선호이론(revealed preference theory)을 바탕으로 정책대상자의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을 측정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분석방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의 특징은 특성 사업의 긍정적(편익), 부정적(비용) 영향을 화폐 단위로 환산한다는 것이다. 또한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 혹은 편익과 비용의 비율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는 한 비용편익분석은 공리주의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오정일, 2012). 비용편익분석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비용편익분석은 국민경제전체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둘째, 정책의 실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셋째, 서로 다른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야 하므로 시간이 중요한 변수로 개입된다는 점이다(김인순 외, 2009).

반면에 비용효과분석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이 있으며, 광의의 개념은 의사결정자가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들 중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든 종류의 분석적 연구를 비용효과분석으로 보는 것이며, 협의의 개념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려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정권 외, 2017).

일반적으로 국가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택하는데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장 널리 이용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타당

한 사업은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의 직접적·경제적 편익 추정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CEA : 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차선택으로 실시하기도 한다(김정권 외, 2017)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정책 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성 평가라는 목적에서 본다면 비용편익분석 보다는 비용효과분석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의한 사회적 효과는 단순히 편익 대비 비용으로만 계산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비용이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인식 개선 및 장애인등의 삶의 질의 개선이라는 사회적 효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 국내 문헌 분석

김인순 등(2009)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비용 효과 분석 연구에서 장애물 없는 건물의 비용편익분석의 국내외 사례를 고찰하고 인증을 통해 건물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분석하고 있다. 김인순 등은 먼저 무장애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하고 있다.

<표 2-11> 무장애(barrier free)시설의 경제적 가치체계

총 가치 (total value)	사용가치 (use value)	직접사용가치 (direct use value)	무장애시설을 현재 직접 사용할 때 획득되는 가치
		간접사용가치 (indirect use value)	다른 사람들(지인, 타인 등)이 무장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얻는 가치
	비사용가치 (non-use value)	선택가치 (option value)	무장애시설에 대한 의도된 미래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가치
		존재가치 (existence value)	다른 사용·비사용가치 외에 무장애시설이 존재하여 편리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획득되는 가치
		유증가치 (bequest value)	미래세대가 무장애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존되는 것에 대하여 느끼는 가치

자료: 김인순 외, 2009. p. 30

김인순 등(2009)은 무장애(barrier free)와 같은 공공재화는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선택가치, 존재가치 등과 같은 비사용가치도 가지고 있으므로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총경제가치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⁷⁾. 이와 함께 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2> 무장애 건물의 비용편익분석 선행 연구

저자	연구 연도	주요 내용
Schroeder & Steinfel	1979	초기 계획단계부터 무장애건축으로 디자인할 경우 나중에 개조비용에 비해 4배에서 35배의 비용이 절감됨
싱가포르 도심 재개발기관 (CIB W84 Report)	1993	사무공간, 주차장, 푸드센터로 이루어진 복합건물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접근을 제공한 시설은 비용이 11% 증가함.
Armani	1993	접근 가능한 기준에 의해 지어진 공동주택은 0.5~1%의 비용이 증가함.
Ratzka	1994	평균적으로 접근가능한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은 0.1%, 공동주택은 3% 정도의 비용이 증가하나, 건축가, 시공자, 공급자의 무장애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비용은 현저히 줄어들 것.
Desmyter & Lechat	2006	디자인 단계부터 접근가능한 디자인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경우 총 건설비용의 1.8%가 더 소요됨.
Gaia	2008	기존의 건물에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복도시스템, 승강기와 같은 요소들은 변형이 불가능했으며, 계획시 비용보다 2.1%의 추가비용이 소요됨.

자료: 김인순 외, 2009. pp. 30-32.

무장애 공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연구들은 건물이 지어진 후에 개보수하는 것보다 건물 계획부터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유리하며, 계획부터 반영할 경우 기존 공사 비용의 1~3%의 비용만 추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예비인증을 통해 건축물 등의 계획부터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용편익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신원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성과분석 연구를 통해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여객시설의 점수를 분석하여 인증이 어느 부분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7) CVM은 가상평가방법이라고도 한다.

지를 분석하고 있다(박신원 외, 2013).

나. 국외 문헌 분석

국외에서는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배리어프리화의 사회경제적 평가 확립을 향하여』라는 연구를 통해 배리어프리(BF)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 연구에서 가상평가법(CVM : Con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하여 편익을 측정하고 있으며, 도시철도역사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⁸⁾

연구에서는 배리어프리사업의 경제효율성 즉, 투자효율을 판단하는 방법으로써 비용편익분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역사 시설에서 장애인과 노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의 쾌적한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정비효과를 계량화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교통시설 관련시설정비의 편익계측 방법으로는 시간 단축 효과나 주행비용 절감효과가 편익의 전부가 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보행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효과의 성격이나 데이터 제약으로 시간 단축이나 주행비용 절감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용자의 정신적·육체적 부담 경감이라는 효과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교통성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도시환경 및 광의의 환경의 경제성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의식조사 방법인 가상평가법(假想評價法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 로 칭함)을 이용하여 편익을 측정하였다.

CVM 모델의 설명변수로서 제시금액, 지역, 연령, 고령화 의식별로 현재 역 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의 자신의 편익을 포함하고 있는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등의 5가지의 항목을 채택하여 지불행동모델과 WTP를 추정하였다.

제시금액, 지역(도쿄 or 센다이), 연령, 고령화 의식(고령이 되어도 현상태의 역시설이 충분히 편리하고 쾌적하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자신의 편익을 포함하

8) 이하 일본의 사례는 일본국토교통성, 2011의 자료에서 발췌하였음.

는가 포함하지 않는가라는 항목에 있어서, 지역은 동경보다 센다이, 연령은 많으면 많을수록, 고령화의 의식은 나이가 들면 지금의 시설은 불편할 것이라는 의식이 가진 사람이, 현재 자신의 메리트를 포함한 설문표에 회답한 쪽이 보다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역시설내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설문지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에스컬레이터 설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였지만 모두 설치하는데 있어서의 지불금액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각 각의 지불액의 합과 일치하지는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지역비교에 있어서는 센다이 지역의 지불의사액이 동경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는 도심부보다는 주변 지역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심지보다도 교외에 고령자 더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대로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불의사액이 높았으며, 고령화의 의식에 있어서는 현재 역시설로 고령을 맞이하였을 때 현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지불의사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역사 시설 내의 배리어프리화에서 특히,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의 필요성의 상당히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성은 배리어프리 정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노인의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매크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배리어프리 정책의 실시로 소비를 동반하는 행동이 증가하고, 여행횟수가 증가하며, 노인 가족이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배리어프리 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하트빌딩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가는 국내 항공 이용의 증가와 노인의 일본 내 관광인구의 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장애인 및 노인 1인당 JR역의 엘리베이터의 수도 소비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국토교통성은 매크로 경제에 있어서 국민의 저축율 감소 등의 요인이 총생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배리어프리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산능력이 증가되어 오히려 국민경제는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다. 소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많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효율성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는 비용 편익분석보다는 CVM 등을 활용한 비용효과 분석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이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예비 인증 단계는 향후 기존 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주며, 일본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과 노인 가구의 사회활동을 증진시켜 국민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유럽연합(EU)의 ‘접근성 도시 대상’(Access City Award)

가. 도입 배경 및 목적

유럽연합(EU)에서 2010년부터 착수하여 2011년부터 시상을 시작한 ‘접근성 도시 대상’(Access City Award)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특히 도시 지역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높이기 위한 시도 중 하나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접근성 도시 대상’의 도입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의한 의무와 ‘유럽장애전략(European Disability Strategy) 2010-2020’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1).

유럽장애전략 2010-2020은 유럽연합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10년간 장애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계획이며, 정책 영역을 크게 8개로 구분하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접근성’이다(European Commission, 2010). 또한 장애인이 완전한 권리를 향유하고 완전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전반적인 목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 8개 영역에서의 장벽(barrier)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전략의 부제에도 ‘장벽 없는 유럽’(Barrier-free Europe)이라는 목표가 달

려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 ‘접근성 도시 대상’은 유럽장애전략 2010-2020의 주요 이행 실적으로도 소개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7b).

구체적으로 ‘접근성 도시 대상’의 시상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우선 유럽연합 내에서 접근성을 높이려는 도시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 등의 도시 생활에서 평등한 접근을 촉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방 당국이 접근성에 대한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그들의 노력을 촉진하는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19).

나. 신청 대상 및 선발 과정

‘접근성 도시 대상’은 기본적으로 유럽연합 내의 도시를 신청 대상으로 한다. 도시를 대상으로 한 것은 유럽연합의 시민 5명 중 4명이 도시에 거주할 정도로 유럽이 본질적으로 도시화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European Commission, 2019). 신청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국내에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가 2개 미만인 경우, 두 개 이상의 인접 소도시가 결합하여 인구 5만 명 이상이 있는 도시 지역이 신청이 가능하다. 동일 도시가 여러 차례 신청하고 수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년 연속 수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수상한 도시의 다음 해 신청은 금지된다(European Commission, 2018).

심사 영역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과 실제 이루어진 조치를 평가한다. 첫 번째 영역은 건축환경 및 공공 공간, 두 번째 영역은 교통 및 관련 인프라, 세 번째 영역은 신기술을 포함한 정보통신(ICTs), 네 번째 영역은 공공 시설 및 서비스이다(European Commission, 2018). 따라서 ‘접근성 도시 대상’은 시설 접근성, 이동권, 정보 접근성이라는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시설 접근성 및 이동권에 초점을 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와 차이가 있다.

심사 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접근성 향상을 위해 취한 조치

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가이다. 두 번째는 시설의 소유권, 그리고 헌신의 수준이다. 세 번째는 접근성 향상을 위해 취한 조치의 영향(impact)이다. 네 번째는 접근성 향상을 위해 취한 조치가 낳은 결과의 질과 지속가능성이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 및 관련 파트너의 참여 정도이다(European Commission, 2018).

심사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1단계인 사전심사는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신청국가별로 구성된 국내 심사단(National jury)이 신청 도시의 접근성을 평가하여 국가별로 최대 3개의 도시를 선정한다. 이 때 6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선정이 가능하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도시는 2단계인 최종심사에 올라간다. 최종심사는 유럽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전 유럽 차원에서 구성된 심사단(European jury)이 최종 심사를 하여 수상 도시를 선정하게 된다(European Commission, 2018).

심사단은 장애인, 노인 등의 당사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최초 시상인 2011년의 경우 유럽 심사단은 패럴림픽 휠체어테니스 메달리스트 Mark Eccleston을 위원장으로 하여 장애인단체 대표, 노인 및 장애인 교통 전문가, 건축가, 민간재단의 접근성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장애인권리 국장 등으로 구성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1). 2012년의 경우에도 북극탐험가인 Marek Kamiński를 위원장으로 하여 당사자 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2).

〈표 2-13〉 ‘접근성 도시 대상’ 선발 기준 및 과정

심사 영역	심사 기준	심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환경 및 공공 공간 -교통 및 관련 인프라 -신기술을 포함한 정보통신 -공공 시설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치의 범위 -소유권, 헌신의 수준 -영향 -결과의 질과 지속가능성 -장애인 및 관련 파트너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심사(국가수준): 신청국가별로 구성된 국내 심사단이 국가당 최대 3개 도시 선정 -최종심사(유럽수준): 전 유럽 차원에서 구성된 유럽심사단이 최종 심사

다. 수상 현황

유럽연합의 ‘접근성 도시 대상’은 2011년 66개 도시, 2012년 114개 도시가 신청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2019년에도 52개의 도시가 신청하였다.

2011년 제1회 ‘접근성 도시 대상’에서는 스페인의 아빌라(Ávila)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인구 6만의 중세 도시인 아빌라는 2002년 ‘아빌라 접근성 특별 행동계획’(Special Action Plan for Accessibility in Ávila)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건축, 통신, 교통 등 모든 영역에서 접근성을 핵심 이슈로 적용하였다. 2007년에는 시 정부에 접근사회관광부(Department of Accessible and Social Tourism)를 설치하기도 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면서, 건축물과 교통수단의 개조, 신기술의 적용 등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중세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것이 아빌라가 대상을 수상하게 된 배경이었다(European Commission, 2011).

이후에 2012년 제2회 ‘접근성 도시 대상’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Salzburg), 2013년 독일의 베를린(Berlin), 2014년 스웨덴의 예테보리(Göteborg), 2015년 스웨덴의 보로스(Borås), 2016년 이탈리아의 밀라노(Milan), 2017년 영국의 체스터(Chester), 2018년 프랑스의 리옹(Lyon)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네덜란드의 브레다(Breda)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접근성 도시 대상’에서는 1~3위의 수상 도시를 발표함과 동시에 최종심사 단계까지 올라갔지만 수상을 하지 못한 도시 중에서 특정 부문에서 접근성 향상의 좋은 사례가 되었던 도시를 ‘특별 언급’(special mentions) 부문으로 발표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접근성 도시 대상’의 네 가지 심사 영역에서 두드러졌던 도시들을 ‘특별 언급’ 수상 도시로 발표했다. 2016년부터는 기존의 심사 영역이 아닌 새로운 ‘특별 언급’ 분야의 시상을 시작했다. 2016년에는 노인 및 장애인의 접근성 부문과 근로환경 개선 부문에, 2017년에는 스마트시티, 근로환경 개선, 금융환경 개선, 지형의 어려움 극복 부문에 시상을 하였다. 2018년에는 문화유산 접근성 부문, 2019년에는 혁신적인 건축환경, 지속적인 접근성 개선 부문의 ‘특별 언급’ 시상을 하였다.

2019년에는 ‘유럽 문화유산의 해’(European Year of Cultural Heritage, 2018년)를 맞아 문화유산 접근성 부문의 특별상(Special Prize)을 별도로 시상하였다. 15개 도시가 신청하여 인구 5만 이상 부문에서는 덴마크의 비보르(Viborg)가, 인구 5만 미만 부문에서는 이탈리아의 몬테베르데(Monteverde)가 수상을

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9).

〈표 2-14〉 ‘접근성 도시 대상’ 연도별 수상 도시

연도	본상	특별 언급(special mentions)
2019년 (제9회)	-1위: 브레다(네덜란드) -2위: 에브뢰(프랑스) -3위: 그디니아(폴란드)	-지속개선: 커포슈바르(헝가리) -혁신건축환경: 비고(스페인)
2018년 (제8회)	-1위: 리옹(프랑스) -2위: 류블랴냐(슬로베니아) -3위: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	-문화유산 접근성: 비보르(덴마크)
2017년 (제7회)	-1위: 체스터(영국) -2위: 로테르담(네덜란드) -3위: 유르밀라(라트비아)	-스마트시티: 루고(스페인) -근로환경개선: 셀레프테오(스웨덴) -금융환경개선: 알레산드리야(이탈리아) -지형어려움극복: 푼살(포르투갈)
2016년 (제6회)	-1위: 밀라노(이탈리아) -2위: 비스바덴(독일) -3위: 툴루즈(프랑스)	-근로환경개선: 바사(핀란드) -노인장애인접근성: 커포슈바르(헝가리)
2015년 (제5회)	-1위: 보로스(스웨덴) -2위: 헬싱키(핀란드) -3위: 류블랴냐(슬로베니아)	-공공시설 및 서비스: 아로나(스페인),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 -건축환경 및 공공 공간: 로그로노(스페인) -교통 및 인프라: 부다페스트(헝가리)
2014년 (제4회)	-1위: 예테보리(스웨덴) -2위: 그르노블(프랑스) -3위: 포즈난(폴란드)	-건축환경 및 공공 공간: 벨파트스(영국) -정보통신기술: 드레스덴(독일) -공공시설 및 서비스: 부르고스(스페인) -교통 및 인프라: 말라가(스페인)
2013년 (제3회)	-1위: 베를린(독일) -2위: 낭트(프랑스), 스톡홀름(스웨덴)	-교통 및 인프라: 그다니아(폴란드) -정보통신기술: 빌바오(스페인) -건축환경 및 공공 공간: 팜플로나(스페인) -공공시설 및 서비스: 탈라(아일랜드)
2012년 (제2회)	-1위: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 -2위: 크라쿠프(폴란드), 마르부르크(독일), 산탄데르(스페인)	-건축환경 및 공공 공간: 테라사(스페인) -교통 및 인프라: 류블랴냐(슬로베니아) -정보통신기술: 올로모우츠(체코) -공공시설 및 서비스: 그르노블(프랑스)
2011년 (제1회)	-1위: 아빌라(스페인) -2위: 바르셀로나(스페인), 켈른(독일), 투르쿠(핀란드)	-공공서비스: 반즐리(영국) -정보통신기술: 더블린(아일랜드) -교통 및 인프라: 그르노블(프랑스) -건축환경: 말뫼(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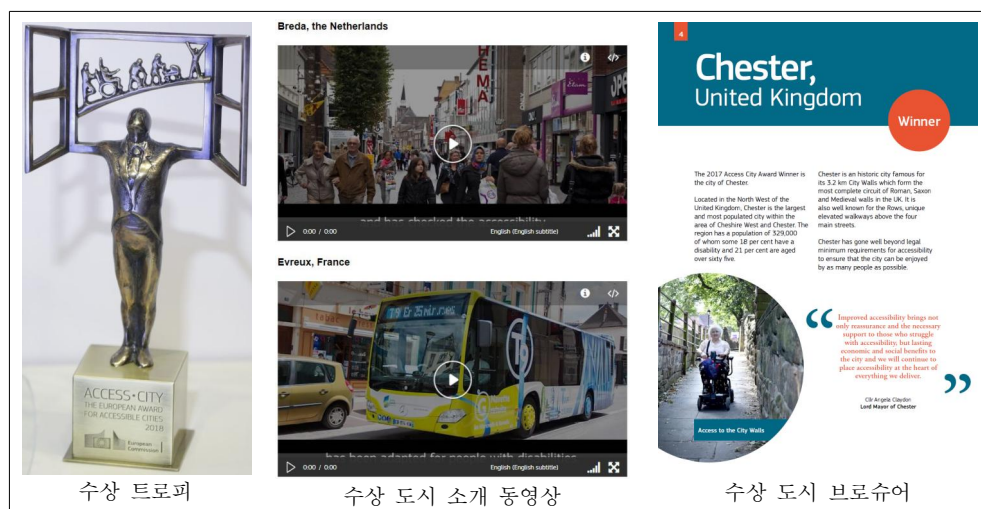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1~2019)에서 정리

라. 수상 결과의 활용

유럽연합의 ‘접근성 도시 대상’의 시상식은 전년도 말(11월 말 ~ 12월 초)에

개최되며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장애인의 날’(European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컨퍼런스 행사와 동시에 진행된다. ‘접근성 도시 대상’은 시상식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상 도시들을 홍보하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근성 도시 대상’에 대한 메뉴를 구성하여 의미, 절차, 연도별 수상도시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수상 도시의 접근성을 소개하는 동영상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에 게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 도시 대상’에 대한 소개와 수상 도시의 모범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그림 2-4] ‘접근성 도시 대상’ 홍보 수단

자료: Access City Award 홈페이지(<http://ec.europa.eu/social/accesscityaward>)

제3절 유사 인증제도 고찰

1. BF인증과 타 인증제도의 비교

가. 정부 인증제도 개괄

현재 국내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주요 인증제도를 파악해보면 크게 기술·제품 분야, 식품 분야, 건축·시설물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제품 분야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를 비롯하여 신기술, 신제품 등에 대한 인증과 함께 환경과 관련된 기술,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제품 분야 인증 제도는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식품 분야에서는 친환경, 우수식품, 식품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건축·시설물 분야의 인증제도는 크게 환경 분야, 에너지 분야, 접근성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녹색건축 인증(G-SEED),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 대표적이다. 나머지 인증제도는 최근에 신설되었거나, 타 인증제도에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예: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은 녹색건축 인증에 통합)이다. 건축·시설물 분야의 인증제도는 타 분야와 달리 두 개의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하여, 환경과 관련된 건축물 인증은 환경부가, 에너지와 관련된 건축물 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접근성과 관련된 건축물 인증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시설물 분야의 인증제도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과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 인증제도로 녹색건축 인증(G-SEED)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2-15〉 국내 정부 인증제도

분야	인증제도	대상	주관부처(주관기관)
기술·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표준, 방법표준, 전달표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NET)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개발한 신기술	
	신제품인증(NEP)	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한 제품	
	제품안전인증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분야	인증제도	대상	주관부처(주관기관)
	녹색인증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기술인증·기술검증(NET)	환경 분야 신기술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 성능확인(ETV)	환경기술 보유자가 제시한 환경기술 성능	
	환경마크 인증	일반 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	
식품 분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농산물(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축산물(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GAP)	식용 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식품 인증	가공식품 표준화(KS),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술품질 인증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 식품 제조·가공·유통·외식·급식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용 가공식품, 조리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일반음식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축·시설물 분야	녹색건축인증(G-SEED)	건축물(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	국토교통부·환경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인증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국토교통부·환경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성)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ZEB)	건축물(에너지 효율성 및 신재생 에너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축물(접근성)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나.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1) 목적 및 대상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는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 건설을 유도·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이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데, 신축 건축물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의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며, 기존 건축물은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 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은 적용에서 제외된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와 같이 의무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강제적용을 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즉, 녹색건축 인증을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인증서류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이러한 강제적용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로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며,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된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며 포함되는 기관은 다음의 일곱 가지 유형으로 제시된다.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④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⑥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⑦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이러한 의무적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1조 제1항 제7호). 구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0만 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행령 별표 2).

또한 녹색건축 인증은 인증 자체의 의무범위를 규정함과 동시에 특정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녹색건축 인증에서 우수 등급(그린 2등급) 이상의 취득이 의무화되고 있다(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7조 제2항).

2) 법령 체계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두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공동부령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는 행정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으로 「녹색건축 인증 기준」 고시를 두고 있다.

우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제6조의2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녹색건축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 녹색건축 인증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9조에서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20조

에서 인증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포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녹색건축 센터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제41조 과태료 규정에서는 녹색건축 인증의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녹색건축 인증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은 제11조에서 녹색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의 완화 적용의 대상으로 녹색건축 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의3에서는 녹색건축 인증의 의무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15조에서는 녹색건축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녹색건축센터를 제시하고 있는데, 6개의 기관을 명시하고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법령 체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은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으며, 대신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이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은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관련 사항,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규정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행정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인 「녹색건축 인증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일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증신청 절차, 인증기준 및 등급, 녹색건축 인증 취득 의무 규정,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2-5] 녹색건축 인증 관련 법령 체계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제20조(인증의 취소)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제41조(과태료)
시행령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부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제6조(인증 신청 등) 제7조(인증 심사 등) 제7조의2(인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인증기준 등)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0조(재심사 요청 등)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제14조(인증 수수료) 제15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6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7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고시 (행정규칙)		「녹색건축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환경부)
		제1조(목적) 제2조(인증 신청 등) 제3조(인증기준 및 등급) 제4조(재심사) 제5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6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제8조(인증 수수료) 제9조(인증 신청이 반려) 제10조(인증 업무 지원) 제11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2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3조(인증 홍보)



제14조(운영세칙)
제15조(녹색건축전문가 관리)
[별표 1~7] 유형별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별표 8] 인증등급 산정표
[별표 9] 전문분야별 가중치
[별표 10]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별표 11]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별표 12]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별표 13]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3) 인증기준 및 인증 갱신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의 기준은 신축 혹은 기존 건축물 여부, 주거용 혹은 비주거용 여부 등에 따라 건축물을 7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인증기준을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인증기준 분야는 ① 토지이용 및 교통, ② 에너지 및 환경오염, ③ 재료 및 순환, ④ 물순환 관리, ⑤ 유지관리, ⑥ 생태환경, ⑦ 실내환경, ⑧ 주택성능, ⑨ 혁신적인 설계의 9개 분야로 구성되는데 건축물 유형마다 적용되는 평가 분야가 다르다. 또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 분야도 건축물의 유형별로 세부 지표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세부 인증 항목은 평가항목, 필수항목, 가산항목으로 구분되는데, 필수항목의 경우에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수를 취득해야 하는 항목이며, 가산항목은 최우수 및 우수 등급으로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혁신적인 설계’ 분야에만 해당된다.

〈표 2-16〉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건축물 유형별 적용

분야	신축 주거용		신축 단독주택	신축 비주거용	기존 주거용	기존 비주거용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그린 리모델링 비주거용
	일반 주택	공동 주택						
토지이용 및 교통	○	○	○	○	○	○	-	-
에너지 및 환경오염	○	○	○	○	○	○	○	○
재료 및 지원	○	○	○	○	○	○	○	○
물순환 관리	○	○	○	○	○	○	○	○
유지관리	○	○	○	○	○	○	○	○
생태환경	○	○	○	○	○	○	-	-
실내환경	○	○	○	○	○	○	○	○
주택성능	-	○	-	-	-	-	-	-
혁신적인 설계 (가산항목)	○	○	○	○	○	○	-	-

주 1) 신축 주거용의 주택성능 분야 평가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만 표시하고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배점은 부여하지 않음.
2) 신축 및 기존 비주거용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로 구분됨.
자료: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 1~7에서 정리함.

이러한 인증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는 분야별 가중치가 적용되어 최종적인 점수로 환산되는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야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표 2-17〉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전문분야별 가중치

분야	신축 주거용	신축 단독주택	신축 비주거용	기존 주거용	기존 비주거용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그린 리모델링 비주거용
토지이용 및 교통	10	15	10	10	10	-	-
에너지 및 환경오염	25	25	30	27	25	60	60
재료 및 지원	18	15	15	15	15	10	10
물순환 관리	10	10	10	10	10	10	10
유지관리	7	5	7	15	15	10	10
생태환경	10	10	10	10	10	-	-
실내환경	20	20	18	13	15	10	1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 9.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의 경우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인증의 경우 인증일자로부터 5년으로 규정된다.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효력이 중지되며 별도의 갱신 절차는 없다.

4) 운영체계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의 책임 관리부처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이다. 이들 부처는 인증제도의 책임 관리와 함께 운영기관 및 운영기관을 지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법령상 인증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은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11조와 제12조에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인증운영위원회는 담당 공무원, 교수, 연구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때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하는데, 운영을 담당하지 않는 부처의 국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부처의 소속공무원이 간사를 담당하게 된다. 인증운영위원회의 역할은 ①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심의, ②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심의, ③ 인증 심사 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④ 기타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심의로 규정된다.

녹색건축 인증제도 운영의 실질적인 행정기구로서 인증운영기관이 별도로 지정된다. 인증운영기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해 녹색건축 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2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정되었다. 인증운영기관의 역할은 ①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 ②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 ③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④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⑤ 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 ⑥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 ⑦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 요청 업무로 규정된다(녹색건축 인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그림 2-6] 녹색건축인증 운영체계



자료: 녹색건축인증 홈페이지(gseed.greentogether.go.kr)

실제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 녹색건축 인증을 시행하는 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 인증기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제시된 7개 전문분야(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중 5개 이상의 분야에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때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사 자격 혹은 해당 분야의 기술사, 기사, 학위, 경력 등 심사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이 별도로 제시된다. 인증기관의 역할은 인증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인증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인증등급 결정,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인증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등이다. 현재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그린빌딩협의회,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감정

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10개 기관이다.

인증기관이 작성한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인증심의위원회는 운영기관이 구성한 후보단 중에서 전문분야 4개 이상의 분야별 1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고 다른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수수료는 인건비, 기술경비, 간접경비, 기타경비의 산출기준이 예비인증과 본인증에 대해 각각 제시된다. 이 때 본인증의 경우 기존 건축물은 인건비 산출기준의 70%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수수료 산정기준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면적 110,000㎡, 1,000세대일 경우,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20,000㎡일 경우 적용되며, 규모에 따라 수수료의 할증계수가 적용된다. 할증계수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0.5~1.4의 범위, 비주거용 건축물은 0.5~5.0의 범위로 규정된다. 하지만 단독주택과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에 대해서는 이러한 산정기관과 별도로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다. 단독주택 녹색건축 인증의 경우 85㎡ 이하는 60만 원, 85㎡ 초과 250㎡ 이하는 120만 원, 250㎡ 초과는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그린리모델링은 주거용의 경우 60만 원, 비주거용의 경우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인증 수수료에 대한 환불 비율도 규정되어 있는데, 인증심의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인증심사 수에는 30%, 보완요청 후에는 60%, 접수 후에는 90%의 수수료가 환불된다.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사의 경우에는 기존 수수료의 50%로 책정된다.

〈표 2-18〉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기준

구분	비목	세부항목	내역
본 인증	인건비 (A)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3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3일
		현장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1일
		행정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0일 × 0.2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기술경비 (B)	제작 및 비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 (C)	인증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 (D)	여비, 심의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장비(주1), 심의비(주2)
	합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예비 인증	인건비 (A)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3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3일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인수: 4인
		행정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0일 × 0.1*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효율: 0.2
	기술경비 (B)	제작 및 비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 (C)	인증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서, 임차료 및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 (D)	심의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비(주1)
	합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주1) 심의비: 1인/1건(1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인건비 산출기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 {(인건비(A) × 0.7)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자료: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 12.

〈표 2-19〉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의 규모별 할증률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구분		할증계수	구분	할증계수
규모별	5,500㎡ 미만	0.5	500㎡ 미만	0.5
	33,000㎡	0.7	5,000㎡	0.8
	55,000㎡	0.8	10,000㎡	0.9
	110,000㎡	1.0	20,000㎡	1.0
	220,000㎡	1.2	50,000㎡	1.2
	220,000㎡이상	1.4	100,000㎡	1.4
세대수별	50세대 미만	0.5	200,000㎡	2.0
	300세대	0.7	400,000㎡	2.5
	500세대	0.8	700,000㎡	3.0
	1,000세대	1.0	1,000,000㎡	4.0
	2,000세대	1.2	1,000,000㎡ 이상	5.0
	2,000세대 이상	1.4		

자료: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 12.

5) 인증 유인체계

녹색건축 인증(G-SEED)에 의한 인증등급은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의 4등급(그린 1~4등급)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인증표지가 발급된다. 인증등급은 인증표지에 등급명 및 별 모양으로 표시된다.

[그림 2-7] 녹색건축인증 등급 및 표지



자료: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2

인증기관은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주에게 인증명판을 제작하여 발급하며, 건축주는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및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야 한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인증명판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또한 건축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인증 사실을 홍보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때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적용된 인증기준, 인증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13조).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와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제15조 제2항에서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의무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 요건의 완화 기준이 제시된다.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요건 완화는 모든 인증을 획득한 모든 건축물이 아닌 인증등급에서 최우수 및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녹색건축 인증등급과 함께 에너지효율인증 등급에 따라 완화 비율이 3~9%로 차등화된다.

〈표 2-20〉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 완화

구분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용적률 및 높이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이상	9%	6%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6%	3%

자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과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우선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도 가능하도록 규정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록세 감면이 가능하다.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비율을 제시하는데, 이 또한 모든 등급이 아닌 최우수 및 우수 등급에만 적용되며 녹색건축 인증등급과 함께 에너지효율인증 등급에 따라 감면 비율이 3~10%로 차등화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며, 재산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한정된다.

〈표 2-21〉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경감률

구분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취득세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이상	10%	5%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5%	3%
재산세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이상	10%	7%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7%	3%

주: 취득세 경감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 경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적용됨.

자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6항

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1) 목적 및 대상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제1호), 공동주택 및 기숙사(제2호), 업무시설(제14호), 그리고 기타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이다. 다만 기타 건축물 중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적용 실내 냉방(26℃) 및 난방(20℃)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

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또한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같이 의무적용 대상이 별도로 규정된다. 그 범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로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며,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의무적용 범위와 동일하다. 또한 의무적용 범위는 물론, 의무적용의 방법, 의무적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 또한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동일하다. 다만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같이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일정 등급 이상의 인증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

2) 법령 체계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같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두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동부령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는 행정규칙(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를 두고 있다.

우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제6조의2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에서는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20조에서 인증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포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제41조 과태료 규정에

서는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증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은 제11조에서 녹색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의 완화 적용의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의 의무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15조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녹색건축센터를 제시하고 있는데, 6개의 기관을 명시하고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령 체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은 인증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으며, 대신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이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관련 사항,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규정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행정규칙(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일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증신청 절차, 인증기준 및 등급,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2-8]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관련 법령 체계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제20조(인증의 취소)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제41조(과태료)
시행령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부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제16조(자격·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제6조(인증 신청 등) 제7조(인증 평가 등) 제8조(인증기준 등)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0조(재평가 요청 등)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1조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제13조(인증 수수료) 제14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별표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의 범위
고시 (행정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제1조(목적) 제2조(인증신청 보완 등) 제3조(인증신청의 반려) 제4조(인증기준 및 등급) 제5조(재인증 및 재평가) 제6조(인증 수수료) 제7조(운영비용 활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운영세칙) [별표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별표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별표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적용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
[별표 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3) 인증기준 및 인증 갱신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인증기준은 비교적 단순하다. 신청 건축물의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에너지 소요량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해당 공간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뒤 합산하여 단위면적당 전체 1차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 2).

$$\begin{aligned}
 \text{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 & \frac{\text{난방에너지 소요량}}{\text{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 + \frac{\text{냉방에너지 소요량}}{\text{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 + \frac{\text{급탕에너지 소요량}}{\text{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 + \frac{\text{조명에너지 소요량}}{\text{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 + \frac{\text{환기에너지 소요량}}{\text{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end{aligned}$$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의 경우 인증일자로 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으로 규정되며, 본인증은 인증일로부터 10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시 효력이 중지되며 별도의 갱신 절차는 없다.

4) 운영체계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책임 관리부처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

자원부이다. 이들 부처는 인증제도의 책임 관리와 함께 운영기관 및 운영기관을 지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법령상 인증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은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8조와 제9조에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인증운영위원회는 담당 공무원, 교수, 연구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때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도 있다. 인증운영위원회의 역할은 ①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②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심의, ③ 인증 평가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④ 기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심의로 규정된다.

[그림 2-9]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운영체계



자료: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홈페이지(beeec.kemco.or.kr)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의 실질적인 행정기구로서 인증운영기관이 별도로 지정된다. 인증운영기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해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되어 있다. 인증운영기관의 역할은 ① 인증업무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 ②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 ③ 인증기관의 평가사후관리 및 감독, ④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⑤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⑥ 인증절차 및 기준 관리 등 제도 운영, ⑦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 ⑧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요청 업무로 규정된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실제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시행하는 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 인증기관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상근 인증업무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근 인증업무인력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건축사 자격 혹은 해당 분야의 기술사, 학위, 경력 등 자격 기준이 별도로 제시된다. 인증기관의 역할은 인증기준에 따른 도서평가 및 현장실사, 인증평가서 작성, 인증등급 결정, 인증서 발급, 인증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등이다. 현재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감정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의 9개 기관이다.

〈표 2-2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전용면적의 합계	수수료	전용면적의 합계	수수료
85제곱미터 미만	50만원	1천제곱미터 미만	1백90만원
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7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백90만원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백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9백9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5백3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천3백9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6백6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1천5백9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4만제곱미터 미만 6만제곱미터 미만	1천7백80만원
4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9백2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1천9백8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8만제곱미터 미만	1천60만원		
8만제곱미터 이상 1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12만제곱미터 이상	1천3백20만원		

자료: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 4.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인증 수수료는 건축물 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 된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경우 면적에 따라 50만원에서 1,320만 원까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경우 면적에 따라 190만 원에서 1,980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대한 인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인증신청 접수 후 평가 완료 전 반려 혹은 신청 취소한 경우에는 50%가 환불되며,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사의 경우 인증수수료의 50%를 부담하게 된다.

5) 인증 유인체계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인증등급은 총 10개의 등급으로 구분된

다. 가장 낮은 7등급부터 가장 높은 1+++등급으로 구분되며,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표 2-23〉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등급	주거용 건축물(기숙사 제외)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기숙사 포함)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m ² ·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m ² ·년)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자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 2.

인증표지에는 인증등급이 표시되며, 색깔로 인증등급의 수준이 구분되기도 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은 녹색건축물 인증과 달리 건축주가 직접 인증명판을 제작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그림 2-10]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및 표지



자료: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홈페이지(beec.kemco.or.kr)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와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동일하다. 따라서 제1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면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의무 면제,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에서 완화 가능,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완화 및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요건 완화를 보면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같이 1등급 이상의 인증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인증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결과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 요건이 3~9%의 범위에서 완화된다.

〈표 2-24〉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 완화

구분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용적률 및 높이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이상	9%	6%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6%	3%

자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인센티브 또한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동일하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가능,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우선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록세 감면 가능,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가능 등의 혜택이 있다. 실제 적용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의 경우에도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동일하며 두 제도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3~10%가 감면된다.

〈표 2-25〉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경감률

구분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취득세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이상	10%	5%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5%	3%
재산세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이상	10%	7%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7%	3%

주: 취득세 경감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 경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적용됨.
 자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6항

라. 인증제도 비교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살펴본 결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와 비교하여 크게 세 가지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의무적용 대상에서의 시사점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는 건축물 분야의 타 인증제도와 달리 의무대상이 협소하고 의무를 강제할 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도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교육기관까지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며, 신축에 한정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와 달리 신축, 재축, 증축 건축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포괄성에서 차이가 있다. 더구나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정 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의무의 강제 측면에서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인증서 첨부을 의무화하고 미첨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다. 현실에서는 과태료 규정보다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인증서 첨부 의무가 실효적인 강제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는 의무 대상만 규정하였을 뿐 아무런 강제수단이 없어 선언적인 의무규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운영체계에서의 시사점이다. 운영체계에서 가장 큰 차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는 타 인증제도와 달리 인증운영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증관리시스템 운영, 인증기관 감독, 제도개선, 인력 교육 등의 역할이 상당 부분 공백상태로 있다. 인증제도의 활성화, 제도개선, 인증심사의 표준화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운영기관 지정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인센티브의 부재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는 인증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 인증제도와 달리 별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 편의시설 설치시 소득세 및 법인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

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득세 경감,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가지는 타 인증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타 인증제도에서 이러한 인센티브가 모든 인증 시설이 아닌 일정 등급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세금 감면의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표 2-26〉 건축·시설물 분야 인증제도 비교

구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목적		친환경 건설	에너지 절약	접근성 제고
적용 대상	일반 대상	신축 및 증·개축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건축물	-장애인등편의법 대상시설 -교통약자법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도시(지역)
	의무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신축·재축·증축 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공관은 우수 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신축·재축·증축 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축 시설 중 19개 유형 시설
	의무 강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인증서 첨부 의무화 -미첨부 시 과태료 부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인증서 첨부 의무화 -미첨부 시 과태료 부과	없음
법령 체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 기준(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고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인증기준		건축물 유형(신축/기존, 용도)별 차별화	건축물 유형 무관(동일 기준)	시설 유형별 차별화
인증 유효기간		5년	10년	5년(연장신청 가능)

9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구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운영 체계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인증 운영 위원 회	-구성: 20명 이내 -역할: 인증기관 지정·취 소·갱신, 인증기준 제·개 정 등	-구성: 20명 이내 -역할: 인증기관 지정·취 소·연장, 평가기준 제·개 정 등	-구성: 10명 이내 -역할: 인증기관 지정·취 소, 인증기준 제·개정 등
	인증 운영 기관	-기관: 한국건설연구원 -역할: 시스템 운영, 심사 결과 검토, 제도개선, 인 력 교육 등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역할: 시스템 운영, 인증 기관 평가, 제도개선, 인 력 교육 등	없음
	인증 기관	-지정 기관 수: 10개	-지정 기관 수: 9개	-지정 기관 수: 7개
인증 수수료		-항목별 산출기준 마련 -용도 및 면적에 따른 할 증계수 적용 -일부 건축물 유형 별도 기준 적용(60~200만 원) -환불규정 있음 -재심사 수수료 경감	-면적에 따른 차등 -공동 임대아파트 경감 -환불 규정 있음 -재심사 수수료 경감	-시설 유형별, 면적별 차 등 -인증 연장 수수료 경감 -사회복지시설 경감
인증등급		4개 등급 (최우수, 우수, 우량, 일 반)	10개 등급 (1+++ , 1++ , 1+ , 1~7)	3개 등급 (최우수, 우수, 일반)
인증명판 및 홍보		-인증기관이 인증명판 제 작·배포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인 증명판 활용, 홍보 가능	-건축주가 직접 인증명판 제작	-인증기관이 인증명판 제 작·배포 -홍보 활용 가능
인센티브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면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 한 차양 등의 설치 의무 면제 -취득세·재산세 경감(일 정 등급 이상) -용적률 및 높이 기준 완 화(일정 등급 이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면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 한 차양 등의 설치 의무 면제 -취득세·재산세 경감(일 정 등급 이상) -용적률 및 높이 기준 완 화(일정 등급 이상)	없음 (다음의 세제혜택 폐 지: ① 편의시설 신축, 증 축, 개축, 구입 비용에 대 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 액공제, ② 편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지방세특례제 한법에 의한 개인지방소득 세 세액공제)

제 3 장

질적 분석

제1절 조사의 개요

제2절 내용 분석

제3절 함의

제1절 조사의 개요

1. 조사 개요

현재 국내의 BF 인증기관은 총 7곳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BF인증을 위해 인증 컨설팅업체, 건축사사무소, 발주청 등에서도 인증관련 업무에 관여되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무 담당자들이 인지하는 인증 과정 등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통해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확산 방안을 도출하고자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참여자 선정방법은 연구 주제에 대한 참여자의 심층적 토의를 통해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얻기 위해 가장 생산적인 토의를 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해야 한다(김성재 등, 2000). 이에 따라 인증기관의 실무자들과 인증절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FGI 분석은 전체 면담 내용을 녹취하고 반복 리딩을 통해 주제별로 범주화한 뒤, 주요 내용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에 참여한 담당자들의 주요 특성은 <표 3-1>과 같다.

<표 3-1> FGI 참여자 정보

참여자	근무기관 및 직위	참여자	근무기관 및 직위
1A	인증기관 부장	2A	건축사사무소 대표
1B	인증기관 차장	2B	건축사사무소 대표
1C	인증기관 대리	2C	건축사사무소 소장
1D	인증기관 팀장	2D	인증건설업체 실장
1E	인증기관 과장	2E	발주청 담당자
1F	인증기관 팀장	2F	인증건설업체 부장
1G	인증기관 실장		

제2절 내용 분석

1. BF인증제도의 당위성

BF인증제도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접근권 강화와 기회의 평등 측면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의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건축이나 환경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따라서 BF인증의 당위성 측면에서 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BF인증제도와 다른 인증제도의 차이점도 명확히 구분되었다. 타 인증제도는 에너지 효율 등 인증이 목표하는 바를 조금 더 좋게하기 위한 선택적 인증으로 볼 수 있지만, BF인증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장애인, 노인 등의 이동 및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선택적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F인증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증이 아니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공공기관이라는 설립목적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장애인들도 공공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당연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봐요.(1E인증기관 과장)

제가 보는 BF인증제도는 기회의 평등이에요.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노

령화 과정을 거치잖아요. 노령화를 거치게 되면 불편하게 되는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건축물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주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요소이기도 하고..... (2B건축사사무소 대표)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 느끼는 것은 다른 인증에 비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단순한 지표에 의해서 통과, 불만족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화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나온 지표들과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요. 적어도 그 사람의 나이, 키, 또는 일시적이든 선후천적인 장애는 그것을 떠나서 최대한의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건축이나 환경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2D인증컨설팅업체 실장)

1970년에는 그냥 양적 발전이에요. 그때는 주택법이 아니라 건설촉진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촉진을 하라는 개념이고 질이 아닌 양에 대한 개념만 들어가 있는 상태였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회적인 흐름에서 양보다는 질적인 발전이 되어야 하는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약자에 대한 고려가 사회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죠. (2A건축사사무소 대표)

BF당위성을 보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라고 생각해요. 지하철 내려가는데 예전만 해도 비를 그대로 맞았는데 비가림막도 이제는 설치를 하고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외부에 두었던 것도 다 안전하게 출입문도 내부로 하는 것처럼 문화라고 생각해요. (2C건축사사무소 소장)

BF인증을 다른 제도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BF인증은 선택적 인증이 아니에요.어떤 건축가가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불편하게 쓰고 누구는 아예 못쓰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1A인증기관 부장)

2.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활성화 방안

가. 공공분야 대상 확대 방안

공공분야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뒤에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로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우선 의무대상 범위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지방공기업,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현재 시에서 개발공사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의무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총 공사비 중 지원자금이 어느 정도 이상되어야 의무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었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있고, 공항공사는 특별법에 의한 대통령법에 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기관 안에서 공사나 공단도 있지만 문화재단, 체육시설 등이 다 공공기관 소속, 시설관리공단 소속이거든요. 그런 시설 단계로 우선 확산을 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민간까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E발주청 담당자)

공공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중요하죠. 알리오에 나오는 국가기관들이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수준의 지자체에서 기관을 만든 것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 유스호스텔이 청소년 이용시설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포함되어 있다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최종까지 제외되어 있던 부분을 변경하지 않아서 현재는 명문상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원래는 적용하는게 맞죠. 그래서 애매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빠지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1D인증기관 팀장)

지방자치단체 말고도 LH라던가 각종 공사들 이런 기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공공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 처음부터 법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현행법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명시를 해서 공식적으로 아예 보게 할 것인가는 양적인 범주 확대의 부분인거죠. (1A인증기관 부장)

BF대상을 신축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창고라던지 조그마한 시설을 짓고 옆에 주민센터를 크게 지어요. 이걸 증축이거든요. 그럼 BF 인증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거요. (1D인증기관 팀장)

또한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분야의 인력 확대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의 증가 등 사회 전반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와 상황에 맞추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되었다.

학교에서도 학생 수가 줄어들다보니까 중학교를 폐교를 하고, 문화시설로 추진하는게 있거든요. 각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수용해야 하는 건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E발주청 담당자)

나. 공공부문 활성화 방안

공공분야 활성화의 방안으로 인증을 수행하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패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가만 의무대상이다보니 벌칙을 둘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까지 의무대상을 확대하여야 위반한 민간기관에 벌칙을 부여할 수 있고, 동일하게 공공에도 벌칙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즉 민간분야도 의무화가 되어야 공공분야까지 벌칙을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분야에 벌칙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증의무대상시설에 민간분야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조차도, 100% 작업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죠. 공무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 조항을 넣을 수가 없대요. 조항 넣는 것 자체가 법제처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대요. 왜냐면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에 패널티를 준다는게 말이 안 된다는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조항을 넣으려면 민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준공공성을 가진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만 그게 가능한거예요. (1A 인증기관 부장)

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인증의 경우에는 BF와는 다르게 대상에 민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민간 또한 의무로 두었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민간이 의무적으로 면적이나 용도제한을 두기 때문에 패널티부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인증과 같이 인증의무 대상을 동일하게 가는 거죠. (1F인증기관 팀장)

녹색건축물인증의 의무 대상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자체나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단, 지방공사에서 신축, 재축, 별동을 증축하는 건물 하에서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차용해서 공공기관 건축물들의 의무화 시킬 때 적용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2A건축사사무소 대표)

하지만 벌칙만으로 제도를 활성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절차 등에 BF인증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건축 세움터(국토부 허가 시스템) 프로그램에 BF인증이 의무사항이라는 사실이 인지될 수 있도록 팝업 또는 아이콘으로 표시하면 담당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BF인증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녹색인증은 이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BF인증 수행 여부를 포함시키는 방안과 인증 절차 등을 고려한 예산의 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내용이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자체도 일부 기관평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BF 인증 대상 건축물에 대한 할당을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면 당해뿐만 아니라 누적되는거죠.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까지 모두 포함을 시켜서 얼마나 인증을 받았는지를 평가에 포함시키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1E인증기관 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마을 회관을 짓겠다라고 하면 그 예산을 직접 발주를 안해요. 개발공사라든지 이쪽으로 돌리면, 그쪽에서 만들면 의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돌린 상황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만이 인증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1D인증기관 팀장)

그리고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보직 순환 등으로 인해 BF인증의 의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인수인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담당 공무원이 의무사항인지 모르고 있다가 감사지적을 받은거죠. 이미 건물을 지어서 쓰고 있는데 이제야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의무사항이라는것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1C인증기관 대리)

나중에 공문이 오면 그때서야 아, 해야 되는군요, 안 해도 패널티도 없군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 자체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대부분 조례적인 부분에서만 운영들 하시잖아요. 어느 지역까지는 범위가 개축이나 증축까지 정해져있는 반면에, 어디는 신축만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요.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고.....(1G인증기관 실장)

공무원들의 특징이 로테이션을 돌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누락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해결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도 감독관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1F인증기관 팀장)

다. 민간분야 대상 확대 방안

다중이용건축물 등 문화시설 기반 또는 공공성의 형태를 지닌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건축법상에서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이 명기되어 있어요. 민간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공공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용적률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 있고 용도는 문화 시설이나 종합병원, 그리고 판매시설, 종교시설, 건강 숙박시설 이용 등이 있고 피난이나 구조활동측면의 의무가 많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BF인증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용성 측면에서도 편의가 높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무사항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E인증기관 과장)

공개공지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도심 내에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개공지와 BF인증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연결을 시키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요.(1C인증기관 대리)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문화시설은 국민의 문화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좀 용이할 것 같고, 단순히 면적제한으로만 두면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는 단계적인 제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대부분의 건물은 민간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간 의무가 필요한데 우리가 조금씩 단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1A인증기관 부장)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다 적용한다고 하면 저항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중이용시설 기준에 맞고 공공성을 갖고 있는 아이тем들을 뽑아서 법적으로 강제조항을 넣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병원도 대부분 민간이거든요. 그런 병원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과 병원을 같이 결부 시켜서, 순차적으로 확대를 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해요. (2A건축사사무소 대표)

몇몇 민간기관의 경우 건립에 지자체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BF인증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인증기관에서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와 전달체계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이 시사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가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하면 자금 지원을 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직접 짓는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주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고 해당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해가는거죠. 그런데 일부 지자체 공무원 중에서 책임성이 강하거나 마인드가 좋은 공무원들은 '우리가 당신에게 자금 지원을 하지만 BF인증을 받드시 받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공무원이 챙기지 않으면 그냥 빠져 나가는 거예요. 인증기관 입장에서 정부에서 자금 지원이 되는현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수가 있더라고요.(1A인증기관 부장)

다른 제도에서는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인증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녹색인증에서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서 발주한 건축물도 다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민간으로 넘어오면 자금 지원을 한 부분을 아는게 사실 어렵지만 공적자금이 지원되는건 사실 다 BF 인증을 받아야죠. (1E인증기관 과장)

라. 민간분야 활성화 방안

민간 분야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혜택, 이자감면, 용적률 완화, 조례 강화 등 다양한 방안과 부과 대상 범위 등이 제시되었지만 몇몇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악용 소지에 대한 우려 등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지적되었다.

BF인증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는 세제혜택뿐이잖아요. 건축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용적률 완화잖아요. 녹색인증은 그렇게 바뀌면서 쪽 이어가고 있고요, 민간부분에서 이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1D인증기관 팀장)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건축주나 사업주한테 사회적인 정의감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해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게 대출 시 이자감면이 있죠. BF 예비 인증을 받은 사업주에 한해서 대출이자를 감면해주고 추후에 본인증까지 받으면 이자를 완전히 감면해주고, 본인증을 받지 않으면 다시 회수를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1E인증기관 과장)

사실 제일 좋은 인센티브는 세제혜택이에요. 왜냐하면 환수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수준이 낮은 인증을 해놓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봐요. 최소 기준만 충족하고 인센티브를 받는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받을 정도가 되려면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편리하고 최우수 수준에서만 받는게 맞다고 봐요. 결국 인센티브는 질적인 측면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A인증기관 부장)

각 지자체에 조례로 해서 장애인생활환경을 조례로 해서 민간의 수수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민간인 건축주가 인증을 받으면 건축심의 할 때 가점을 주도록 조례에서 하고 있어요. 조례를 강화해서 각 지자체별로 민간영역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인증실적이 있으면 심의에서 가점을 주는거죠. (1F인

증기관 팀장)

인센티브를 신축건축물보다는 기존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신축건축물은 기준을 강화하면 돼요. 기준을 강화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건축물 이거든요. 기존건축물이 훨씬 많은데 그럼 기존 건축물에 있는 것들이 장애인, 노약자 등이 사용하기 좀 편한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의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결국 기존건축물을 타겟으로 해야 하거든요. (2B건축사사무소 대표).

결국 건축물에도 등급을 매겨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노출을 시켜서 재산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해요. 용적률은 의미가 없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해서 재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줘야지 민간에도 확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2B건축사사무소 대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것이 매우 위험하더라고요. 민간에서 용적률을 완화해서 BF 인증을 받고, 본 인증을 못 받거나 안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용적률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용적률을 돈으로 환산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이미 용적률 높은 것을 낮출 수도 없죠. 그래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1A인증기관 부장)

표준사업장 인증 등 타인증과의 연계방안 구축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간분야에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BF인증을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공인프라 구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표준사업장인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기본적인 장애인 고용환경을 만드는 인증이거든요. 용자를 해주기도 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표준사업장 인증이 조금 더 발전하면 BF인증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1C인증기관 대리)

결국 시장에서 반응이 나와야 돼요. BF인증을 받아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임대료를 더 받는다면 이런게 눈에 확 들어와야 하는거지 인센티브라는게 만능은 아니죠. 어찌되

있던 시장이 움직여야 하는데 시장이 움직이니 않으니까. 결국 BF인증을 받은게 매력이 없는거죠. (2B건축사사무소 대표)

체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으면 도시가스비용이 덜 나가고 녹색건축인증을 받으면 내가 뭔가 친환경적인 느낌이 들어서 할 것 같은데 사실 BF를 받으면 물론 장애인이 있는 가족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도시가스나 전기요금도 감면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E발주청 담당자)

가장 큰 문제는 건물만 BF인증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도로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는 평지가 거의 없고 대부분 경사지예요. 더구나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주출입구까지 유도를 해도 또 계단이 있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 계단을 휠체어장애인이 올라갈 수는 없죠. 결국 그 건물 주출입구까지 접근로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민간건축물로 확대하기 이 전에 우선해야 하는 것은 공공 인프라에 대한 기준을 맞추는 거죠. (2B건축사사무소 대표)

마. 업무 관련자 대상 인식 활성화 방안

설계사와 건축사, 시공 담당자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시공하는 담당자 등의 지식과 인식 부족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BF인증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건축과 설계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BF 인증에 대해 필수 교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현재 의무인 장애인식개선교육 과정에서도 BF인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이 시사되었다.

BF인증은 심사위원, 컨설팅 모든 사람이 다 고생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BF인증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컨설팅 업체에 넘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컨설팅 업체와 계약해서 맡기다 보니 도서수정도 컨설팅회사에서 수정을 해서 받으니까 이 도서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2B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설 현장에서는 시공관련된 모든 일이 비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작업 하시는 모든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도 어렵겠지만 BF 인증을 왜 해야 하는지, 또는 계단을 시공할 때 실질적으로 단을 전부 동일하게 맞추거나 어느 부분만 맞춰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왜 해야 하는지 몰라요. (1F인증기관 팀장)

건물은 지어가면서 도면에서 2D 상태에서 보는 것과 3D상태에서 보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시공과정에서의 BF인증에 대해 현장 요원들이 알고 있으면 변경을 하더라도 BF에 맞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지식이 없어요.현재는 설계자들한테는 교육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자재 업체 쪽이나 현장요원인 시공사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육에 대한 홍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련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2A건축사사무소 대표)

사실 시공사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바닥 마감재도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도 미끄럽다고 하나씩 설명을 다 해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 있죠. 시공사에서도 청소의 편리함 등 유지관리나 보수에 초점을 맞추지 사실 편리성에 대한 의무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죠. (2F인증건설업체 부장)

가장 필요한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역량강화예요. 저희가 어떤 대학과 MOU를 맺고 학생들의 설계 수업에서 2~3시간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교수가 놀랐어요. 설계에 반영되는 그 수준이 교수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활성화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죠. (1A인증기관 부장)

가장 중요한건 유치원 때부터 완전한 통합 교육이라고 봐요. 장애인 친구가 어떤 순간에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경험하는 것 말고는 해결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건축하거나 토목을 전공하는 학생은 꼭 배워야 하고 그보다 더 원초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때 같이 생활하면서 경험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1A인증기관 부장)

공단에서 2018년부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하는데 건축물이나 설계 사무소 같은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 내용에 BF인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증 받은 강사들이 가서 BF인증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가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사 시험에서도 작년에 단면에 BF인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민간 업체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가 그때부터 인식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큰 것 같아요.(1C인증기관 대리)

3. 적용 범위 및 기준

가. 증축 및 개축 등

기존 건물에 대한 BF인증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증축과 신축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현재 일부 지역의 경우 조례를 통해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까지 포함하고 있다. 증축의 경우에도 수직증축의 경우 BF인증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건물 옆에 창고를 증축하는 경우와 같은 수평증축은 신축 개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다만 기존 건물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비용 비효율성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건물을 건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증대상의 범위를 신축이라는 것으로 했죠. BF인증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건드리는 순간 처음부터 아주 잘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고서는, 즉 BF인증 측면에서 아주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이는 시설을 건드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증축을 하면서 아예 기존 건물과 동떨어져있는 건물을 증축하는 것을 신축으로 포함시켜야 하지 않냐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으로 가죠. 그래서 증축도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A인증기관 부장)

신축에 대해서 있는 기준을 증축으로 완화하고 증축에 대해서 임의대지경계선까지 해서 증축부분에 대한 것들은 BF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2F인증컨설팅업체 부장)

나. 소규모 시설

소규모 건물에 대한 BF 인증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BF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것 보다는 소규모에 맞는 기준에 대한 개정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공공분야의 경우 소형일지라도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해서는 BF인증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로당과 같은 소형시설이라도 실제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BF인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골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BF본인증을 위해 현장에 갔었어요. 제가 이 작은 공중화장실을 무슨 인증을 하나, 그리고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까 이런 곳 까지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장을 갔는데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이용자의 시각에서 봤어야 했는데 전혀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 거예요.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이었는데, 그 공중화장실을 누가 이용하겠어요. 대부분 보행보조기로 이동하는 노인들이예요. 인증을 받지 않으면 보행보조기를 밖에 놓고 화장실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결국 작은것 부터, 소규모에서부터 실천이 되어야죠. (1A인증기관 부장)

소규모의 건축물인데 거기에 날개벽을 600을 만들어주려면 복도가 최소한 1800정도가 돼야 해요. 문 유효폭 900만들어주고 날개벽 600 만들어주면 1500이 되고 벽 두께 등을 고려하면 1800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적은데 복도가 1800씩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 기준을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설계자, 건축사가 참여하는 그 기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A건축사사무소 대표)

경로당 같이 작은 규모 있잖아요. 예전에는 주민 센터를 1층에 두고 2~3층은 레크레이션 하는 시설을 뒀는데 요즘은 분리해서 별도로 지어요. 그런데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을 위한 시설은 아니예요. 규제에만 명시되어 있는 것만 하니까. (1D인증기관 팀장)

다. 인증기준

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으로는 보다 현실적이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요구되며 타법령 체계와의 연계성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작년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일률적으로 900 이상으로 해야돼요. 그런데 800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900에는 미달되지만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설치 기준 등을 세분화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증대상 범위를 지금 기준만 가지고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폭은 800이상이 무조건 되어야 하는데 800~900까지는 몇 점, 900이상은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좀 차등화 해서 하면 BF인증이나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된 설치 대상 건축물이 범위가 자연스럽게 확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 입장이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2B건축사사무소 대표)

민간에서 보면 BF인증의 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큰 화장실 만들어놓고 승강기도 다 설치했는데 앞에 단차가 1/8이라고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럼 인증 자체가 안되는 거죠. 바닥재도 선택하고 싶은데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놓아도 바닥재 하나 때문에 인증이 안돼요. 금처럼 모든 지표에서 최소등급을 받아야 하는 이 기준은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면 민간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2D인증컨설팅업체 실장)

민간시설 중에 올해 9월부터 영유아법 개정으로 해서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건복지부 기관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BF인증을 해야 하느냐는 질의가 있기도 했거든요. 그럼 어린이집만 받으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조금씩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별도로 특수학교법에 의해서 결국 BF인증과 상충되죠. (2F인증컨설팅업체 부장)

그리고 공공기관의 담당자, 설계사,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BF인증 적용 기준과 변경 사항 등을 포함시킨 다양한 사례에 대한 내용과 매뉴얼, 해설서, 법규책 등이 배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해 인증운영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녹색건축인증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Q&A를 발행하고 용도에 맞는 기준들이 있고 해설서 안에도 녹색건축의무에 대해서 사례 등을 제시해주는데 BF인증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마냥 발주처에서도 그렇고 시공사에서도 그렇고 설계사에서도 그렇고 그 기준의 모호함 때문에 말이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례별로 전체적으로 배포가 돼서 당위성에 맞는 설명서가 복지부 이름으로 나왔으면 하죠. (2F인증컨설팅업체 부장)

관련 법 등이 바뀔 때 버전을 계속 바꿔서 배포하던지 매뉴얼대로 배포를 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컨설팅업체에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유가 많이 해본 공정별로 나름의 매뉴얼대로 현장에 가서 설명하고 절차 등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걸 컨설팅업체의 주관적인 해석이고 기준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저희도 컨설팅을 하기 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거죠. (2F인증컨설팅업체 부장)

녹색건축인증은 법규책이 있어서 설계를 할 때 옆에 두고 보면서 참고를 해요. 그런데 BF인증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BF인증 기준을 법규책 속에 포함을 시키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대중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습니다. (2A건축사 사무소 대표)

사실 건축물이라고 해서 인증기준만 보서는 내가 이 건물을 어디가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면 어떤 부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 학교에 대한 기준, 업무시설 등 최소한의 용도 기준에 대한 것은 매뉴얼이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2F인증컨설팅업체 부장)

컨설팅을 하는 곳이 소규모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의 공중화장실도 하고 파출소도 하는데 지방으로 갈 수록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담당자의 역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뉴얼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다른 인증에 비해서 너무 관련법이 너무 많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서 힘든데 조그만 화장실도 황당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2E발주청 담당자)

라. 자재 등 제품에 대한 인증

설계 단계에서 BF인증 기준을 적용해도 조달청 등에서 지급되는 자재가 BF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이와 관련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공공건물의 경우 조달청 지급 자재를 사용하는데 이 자재들이 BF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장실 문 크기가 BF인증기준과 다른 제품들이 여전히 조달되고 있다. 결국 건축주는 BF인증 기준을 맞추려 노력해도 공공조달 기준이 BF인증을 맞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자재 등 제품 기준을 BF인증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재에 대한 BF인증제도 신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건축자재의 규격, 미끄럼 수준 등 규정을 만들면 BF인증이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자재에 대한 BF인증제도 신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관공서의 화장실, 조립식으로 짓는 경우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급자재조차 기준에 전혀 맞지 않은 것들이 조달청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쓰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업체에서도 조달청 통해서 구매 했는데 왜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하고, 조달청에서는 본인들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거죠. (1B인증기관 차장)

잘못된 제품은 목록에서 제외해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잘못된 제품 형태가 설치된 사례가 꽤 많거든요. 그게 파손되지 않는 한 교체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제품에 대한 인증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1E인증기관 과장)

가이드를 잘 하고 설계를 잘하고 공사를 잘 해놓아도 칸막이 벽이라든지 가구나, 안내 데스크 이런 것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용자가 임의로 사고 공공기관에서는 조달청의 나라장터가서 구매를 하는데 나라장터의 기준에 맞지 않은 가구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는 개선이 되었으면 하죠. (2E발주청 담당자)

학교에서 조달청에 있는 책상과 싱크를 샀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다보니 학교에 애

기를 하면 조달청에 있는 것을 그냥 샀을뿐이라고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예산 낭비라서 담당자는 문책까지 가게 되죠 (2E발주청 담당자)

4. 추진 절차상의 개선점 및 유사 사업과의 관계

가. 예비인증 및 도서의 일치성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착공 도면과 최종 납품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과 절차 상에서 의사소통 단절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장가보면 그냥 처음해 했던 원도면대로 시공이 되고 있어요. BF 반영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놀라는 부분이 본인증을 갔는데 큰 규모인데도 잘못되어있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가운데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거예요. 예비인증대로 본인증이 되는 담보가 안된다는 거예요.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돼요. (1D인증기관 팀장)

저희도 현장을 가보면 예비인증과 내용이 너무 달라서 최종 납품 도면과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착공도면과 설계사가 마지막으로 납품했다는 도면을 한 자리에서 다 봤는데 3개가 다 달라요. 그걸 인지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납품단계를 자기네 나름대로 어차피 행정이니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수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요 (1G인증기관 실장)

예비인증 받을 때랑 본인증 받을 때랑 완전히 다른 상태인 건물이 있어요. 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본인증 받을 때 보니까 칸막이가 쳐 있으니깐 그렇게 칸막이가 쳐 있을 때 출입문이 생기면 이 출입문에 대해서 BF인증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컨설팅에서 와보니까 이 부분을 인증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하면 이게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하니까 일단 한 번 밀어 넣는 거예요. 본인증 받으려고. 문서에 있는 절차대로만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문서상에 있는 절차들을 진행시키기가 현실상 어렵다는거죠. (2B건축사사무소 대표)

사실 건물은 준공이 끝나면 예산은 마감이 되어야 해요. 어떻게 보면 사용승인이 나기 전까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영해줄 수 가 있는데 계약법상 준공이나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는 설계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준공이 난 건물을 본심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비인증대로 공사를 다 했어요. 물론 부실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했는데 오히려 예산을 마감을 하고 심사나 심의를 가서 추가로 받아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건에 대한 예산을 마감을 했는데 그 부분이 더 어렵거든요. (2E발주청 담당자)

저희가 본인증 할 때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같이 컨설팅을 하던지 아니면 예비인증도, 저희가 최근에는 관공서에서 예비인증부터 실적확인서를 다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관공서 같은 경우는 예비인증 단계부터 실적증명서부터 해서 본인증도 웬만하면 같이 쪽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보완이 됐으면 해요. (2F인증컨설팅업체 부장)

예비인증 도서가 시공사에 전달이 안 되는건 예비인증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인증심의 끝날 때 설계자나 컨설팅 회사에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긴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책사유는 사실 발주처보다는 설계자와 시공자한테 있어요. (2B건축사사무소 대표)

예비인증을 받게 하려면 본 인증때 강화를 하면 예비인증을 받습니다. 인증기관에서 칼같이 적용기준 그대로 해서 될 때까지 한다고 하면 예비인증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2B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와 관련한 문제는 예비인증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의 집행 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건축 설계 예산에 BF심의 후 설계 변경 단가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설계변경 단가가 없는 실정이다. BF인증 이후 재설계를 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어야 하나, 예산항목이 없다보니 원 설계대로 시공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건축설계에 세 가지(공모설계, 실시설계, BF인증설계) 설계 비용에 대한 예산 항목을 배정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 예비인증을 2층 규모의 도서관을 받았는데 3층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발주처에서 예산이 없어서 1개 층이 없는 상황에서 예비 인증을 받고 예산을 더 받으면 층을 추가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2F인증건설업체 부장)

2016년에 공무원이 법이 바뀌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시행하고 1년 뒤에 예비인증 없이 본인증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인증자체가 안되는 정도의 수준인거예요. 결국 큰 돈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BF인증의 경우 예비인증을 거치는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무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2A건축사사무소 대표)

설계자는 BF인증을 받게 되면 이 인증과 관련된 사항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설계도서를 납품하고 시공단계에 들어가서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지금 거의 없어요. 법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설계의도의 구현이라고 해서 설계자를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참여시키게끔 법은 되어 있는데 지키는 공공기관 아무도 없어요. 대가를 줘야하는데 그냥 부르는거죠. (2B건축사사무소 대표)

처음에 설계를 해서 도면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허가를 받고 인증을 받는 동안 내역을 작성해요. 그럼 그렇게 해보면 내역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발주청 입장에서는 예산 범위에 맞게 줄여야 되는 거예요.최종 납품도서라고 준걸 가지고 시공사에 납품을 한거니까 발주청에서는 납품된 도서로 시공을 한건데 여기에 중간에 예비인증 받은것 등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면 속상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저희가 건축사사무소에 클레임을 걸 수가 없어요. 계약법에 보면 내역의 누락이나 이런것들은 발주청에서 시공사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사사무소는 그렇게 납품하고 끝나죠. 물론 많이들 사후관리 차원에서 오고 가시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법에도 없는 것에 대해 수당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흐름이 있죠. (2E발주청 담당자)

지금 가장 중요한건 단가를 지정해주느냐 아니냐가 현장의 BF인증 퀄리티를 높이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보통 서비스로 설계를 변경해주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비용에서 빼는거죠. 예산상에서 목을 설정 할 때 설계비를 3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비용 산정을 해 달라는거죠. (1A인증기관 부장)

설계하는 사람들은 BF나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이유는 뭐냐하면 일단 BF인증이나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신경쓰고 자료수집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가가 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하자고 클라이언트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같은 비용에 추가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거죠.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줘서 일을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비용도 법제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설계 사무소에서 직접 할 수는 있겠지만 컨설팅 회사에 맡겼을 때 그 인증 비용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 할 때 BF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BF 인증에 대한 대가가 산출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A 건축사사무소 대표)

나. 사후관리, 재인증

본인증 이후에 재인증을 포함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되었다. 운영기관에서 사후관리를 맡고,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또 사후관리할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 사업량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생산성 인증의 경우 2년 주기(1,3,5)로 하고 있는데, 3년에 1번 정도가 좋을 듯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운영기관이든 대표기관이든 사후관리를 일괄적으로 하면 문제는 숫자 조정을 좀 해야 돼요. 올 해 한 인증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기관이 350개예요. 350개의 현장에는 제주도도 있고 마라도도 있어요. 모든 시설을 1년에 1회씩 해야하다보니까 이렇게 누적이 된거죠. 그래서 사후관리는 3년에 1회 정도 등 사후관리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1A인증기관 부장)

사후관리가 횟수, 기간,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2년마다 1,3,5년 차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1D인증기관 팀장)

재인증 같은 경우에는 인증 기준이 바뀌는 문제가 있어요. 기존 1등급을 유지해도 지금 기준에서는 3등급인거예요. 과거의 기준으로는 현 등급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등급이 낮아지면 어느 건물주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개인이 아니가 기관이잖아요. 그럼 기관장입장에서는 담당자한테 다시 등급을 올리라고 하겠죠. 그럼 결국 그 업무를 하는 담당자만 힘든거죠. 그래서 재인증제도는 의미가 없고 차라리 인증받은 기준을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평가가 굉장히 어려워 진다는거죠. (2B건축사사무소 대표)

다. 인증수수료

업무의 프로세스를 고려한 BF 인증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인증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해요. BF인증이 한 번 가서 끝나는게 아니고 한 번은 가서 심의해서 결과를 주고 확인하러 갔을 때 안되어 있으면 또 가야 해요. 사후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방문 했을 때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라고 하면 또 가서 확인해봐야 해요. 교통비가 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전국을 다 가야돼요. 현실하고 너무 안맞죠.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BF인증이라는게 예비인증을 받고 그대로 시공하면 본인증이 쉽게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BF인증 설계용역단가가 없어요. (1D인증기관 팀장)

설계사가 처음에 설계를 하잖아요. 원설계라고 하는데 설계할 때 평당 만약에 만원을 준다고 하면 평수가 크면 BF를 변경하는데 드는 도서 비용을 주는거죠. 설계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발주할 때 설계사가 그 비용을 받는거예요. 최종도면을 BF 도면에 맞게 변경을 해주는거죠. 두 번 바꾸는데 처음에 공모했던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 그 다음 BF인증 설계로 바뀌는거죠. 그런데 실시설계 비용 밖에는 없는거죠. (1D인증기관 팀장)

BF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설계 발주를 받아서 보면 수수료라든지 이런것들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가끔가다 없는 경우에는 설계비에서 쪼개서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안할 수 있으면 안하고 싶은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해요. 질이 높아지면 그만큼 비

요이 수반이 된다는 큰 주제를 갖고서 움직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2A건축사사무소 대표)

컨설팅 입장에서는 일단 사실 녹색건축이나 에너지효율은 저희가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취득이 가능해요. 그런데 BF는 수정되는 것들과 각 공정에 맞춰서 방문을 해야 해서 20번을 가줘야 BF인증 현장실사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수수료는 너무 적은편이에요. 인증평가기관에서 이런 수수료대비 인원수를 배치를 한다고 보는데, 수익이 안 나는데 인원을 많이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증기관마다 저희가 통화를 해보면 자리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내부에 들어와도 예비인증 서류를 꾸려줘야 하는 그 일정도 있고 해서 기관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수수료를 증액을 시켜서 업무를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2F인증컨설팅업체 부장)

어떤 경우에는 인증 전에 예비인증을 받지 않고, 조그마한 공중화장실을 짓는데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계약하기 전에 4군데에 다 넣어본대요. 그럼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다는거죠.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발주청 입장에서는 컨설팅 수수료를 올리자고 하는데 과연 필요한가라고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E발주청 담당자)

라. 적합성 심사와의 관계

적합성 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절차에 대한 조정과 BF인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5층 이하의 건물의 경우 적합성 평가에서는 계단 또는 승강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BF인증에서는 승강기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BF인증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법률에서는 BF인증을 받으면 적합성 평가를 갈음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역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으면 BF인증을 갈음한다는 조항은 논리적 모순으로 보인다.

적합성은 법적인 최소 기준이에요. 용도면적에 따라서 의무 권장이 있어요. 적합성 기준에서는 층간 이동이 계단 또는 승강기이지만 BF인증의 층간 이동은 무조건 승강기 설

비거든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커버가 되는건 아니에요. 적합성은 사용 승인을 위한 조건인거고 BF는 법을 준수하기 위한 의무예요. BF를 받아야만 커버가 되는거죠. 그런데 보통 편법으로 쓰고 있는게 BF를 진행하면서 최종으로 완료가 되어야만 인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래걸리다 보니까 편법은 적합성 확인을 먼저 받고 기본적인거, 의무권장만 이행하고 그 다음에 BF를 계속 진행하는거죠. (1E인증기관 과장)

인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을 때 저희가 관청으로 인허가와 사용승인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택과나 건축과에 인증을 신청하면 사회복지과가 협의부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지자체 내 장애인센터에 보내요. 그럼 그것만 득하면 인허가 관련된 것은 끝나는건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센터에서 다 받았는데 왜 BF인증을 또 받아야 하나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중복되어 있으니까 서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정이 필요할 것거든요. (2E 발주청 담당자)

5. 브랜드 가치

가. 용어에 대한 고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용어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열린 관광’처럼 긍정적, 함축적 표기가 필요하고,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의미를 담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장애물 없는 환경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실 다가가기 쉽지 않잖아요. BF인증을 받은 건축물이나 시설이라고 대중한테 얘기하면 사실 뭔지 잘 몰라요. 서울시에 지금 산 주변에 무장애산책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딱 들으면 그곳을 가면 얼마든지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명칭 자체가 이렇게 BF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그 건물은 뭔가 편하겠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와 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E인증기관 과장)

BF보다도 무장애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더 쉽기는 해요. 그런데 그

것도 솔직히 똑같이 장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누구나 이용가능한 편리한 시설'이라는것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으로 가져가기에는 표현이 너무 길어서 쉽지 않죠. (1A인증기관 부장)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이 이 용어를 보고는 우리 학교에는 휠체어 타는 학생이 없는데 이 인증을 꼭 받아야 하냐는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2E발주청 담당자)

나. 홍보 방안

BF인증을 홍보하는 방안으로는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관 운영이 제시되었으며, 민간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안에 대한 고민과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보통 아이들이 교통박물관에 가듯이 아이들도 가서 휠체어 궁금해 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한번 타보고, 어린이대공원 상상놀이터에도 지하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요. 휠체어 경사로에 대한 공간이있는데 만약에 이런것들이 신규로 만들어져서 언론에서 홍보가 된다면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보고 싶어하거든요. 그럼 조금씩 확산되지 않을까 싶어요. (1B인증기관 차장)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너무 부족한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홍대에 시각장애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 시설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체험을 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 깜깜한 암실안에서 이동하는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색다른 체험이지만 시각장애인이 겪은 이동의 어려움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하는거죠. 그런 체험 공간을 규모있게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1E인증기관 과장).

민간인증에 대한 홍보가 참 어렵더라고요. 초반에는 민간인증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했어요. 실제로 언론과 접촉을 해서 아파트를 홍보하기로 했는데 기자가 무엇을 찍으면 되냐고 묻는 거예요. 출입구를 찍으라고 했는데, 뭘 찍어야 하는지 모르거예요. 포커스가 없는거죠. BF 인증은 없는게 핵심인데 홍보하려는 입장에서는 시각적인 효과가 뭔가가 있는걸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결국 방송을 못했어요. (1A인증기관 부장)

인증을 최우수로 받았다고 해도 홍보하기가 어려운게 장애특성마다 주관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려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얻는거죠. 인증자체에대한 질이 올라가야 홍보를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싶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인증 받은 건물에 음식점이 있다고 하면 그 음식적용 활체어 탄 사람들이 이용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못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측면에서 홍보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A인증기관 부장)

앱의 지도에 표기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필요해요. 저희가 네이버하고 논의를 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예요. 네이버에서 인증기관에서 데이터를 받는 시스템 자체가 소스를 주는 인증기관 측에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인증기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서 못 갖추고 있어요. (1A인증기관 부장)

타인증에 비해서 명패가 너무 불품이 없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인증을 받아도 명판을 설치하지 않더라고요. 녹색건축인증은 교문 등에 하면 되는데 BF인증은 너무 불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2E발주청 담당자)

시설의 용도마다 홍보 타겟을 다르게 하는거죠. 학교는 학생을 강조하고 노인들이 많은 곳은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2B건축사사무소 대표)

6. 인증운영기관

인증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업무 담당자가 인증기관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제고를 위해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인증기관과의 분리보다는 운영기관도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운영기관이 인증기관의 상위 개념에 있는건 아니라고 봐요. BF인증은 타인증과 다르게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낮으니까 인증기관에서 수수료를 떼서 다른 인증운영기관에 수수료를 줘서 하는 타인증제도의 운영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인증운영기관이 생겨야 한다고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서 운영기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기관이 인증기관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증기관과 인증운영기관은 분리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1A인증기관 부장)

저는 당연히 인증기관을 하면서 운영기관을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분리되면 소용이 없고, 비용도 분명히 주무부처에서 지원이 되어야 해요. 인증의 수준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커리큘럼도 짜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사후관리도 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평준화가 될 수 있고 지표, 심사기준을 정확히 준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소통을 하면서 운영기관에서는 교육을 하고 맞춰가면서 인증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1B인증기관 차장)

BF인증이 타 인증과 다른점이 뭐냐하면 민원이 있어요. 다른 인증은 그냥 인증을 하면 끝나지만 BF인증은 장애인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기준에 맞게 되어 있어도 장애인이 쓰기 불편하니까 민원을 제기해요.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게 보통 운영기관이고 인증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가야하기 때문에 인증기관이 운영기관의 역할도 같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건축쪽으로 민원을 맡겨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낭패를 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1D인증기관 팀장)

타 인증은 전혀 별개의 기관에서 운영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인증기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기관은 인증을 전혀 해보지 않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납득이 안되는 결정이 날 때도 있고, 현장에 점 검차 방문을 하더라도 인증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외부민원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고.....인증기관과 운영기관이 같이 가게 되면 객관성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점점 자체도 운영기관이 일방적으로 가는게 아니고 인증기관에 위원들을 어느정도 포함시켜서 하면 좋은 구조인것 같아요. (1E인증기관 과장)

담합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없는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인증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용자가 즉각적으로 체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기관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인증은 지표에 따라 수행을 하는데 다른 두 공간의 대해서는 지표가 있으면 문제될게 없어요. 그런데 그 두 공간을 매개하는 공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거죠. 이 부분이 풀기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이해하고 인증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잘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기존의 인증기관이 운영기관의 역할을 하는게 맞다고 봐요. 다만 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구축 할 것인가를 잘 해결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1D인증기관 팀장)

현재 인증기관 간의 편차가 있어요. 어느 인증기관 가니까 인증을 잘 내주고 다른 곳은 아니라고 하는 평가가 들릴 정도거든요. 결국 형평성 문제가 있는거예요. 같은 1등급인데 정도가 다른거죠. 그래서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봐요. 운영기관이 이런 것들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2B건축사사무소 대표)

제3절 합의

인증기관, 인증 컨설팅업체, 건축사사무소, 발주청 등 인증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증 과정 등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확산 방안, 브랜드 가치 증진 방안, 인증제도 운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합의를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인증 대상 확대 방안, 인증 활성화 방안, 인증 운영기관 설립 방안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BF인증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첫째, BF인증제도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건축이나 환경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BF인증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장애인, 노인 등의 이동 및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둘째, 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 이 용어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 관광’처럼 긍정적, 함축적 표기가 필요하고,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의미를 담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BF인증을 홍보를 위해,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관 운영, 어플리케이션 연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인증 대상 확대 방안

첫째, 현재 인증의무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분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우선 의무대상 범위에 확대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지방공기업,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분야 인증 대상 확대를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 문화시설 기반 또는 공공성의 형태를 지닌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인증대상 시설로 신축건물만 포함되어 있으나, 증축, 개축 건물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직 증축보다는 수평 증축의 경우 신축과 유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 건물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비용 비효율성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소규모 건물에 대한 BF 인증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BF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것 보다는 소규모에 맞는 기준에 대한 개정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조달청 등에서 지급되는 자재에 대해 BF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자재부터 인증기준에 부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BF인증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여도 이에 부합한 자재를 조달하지 못하면 BF인증 기준에 맞는 건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자재 등 제품 기준을 BF인증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인증 활성화 방안

첫째, 공공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는 벌칙조항 신설도 중요하지만,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절차 등에 BF인증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녹색인증처럼, 건축 세움터(국토부 허가 시스템) 프로그램에 BF인증이 의무사항이라는 사실이 인지될 수 있도록 팝업 또는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또한 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BF인증 수행 여부를 포함시키는 방안과 인증 절차 등을 고려한 예산의 전달체계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분야 활성화를 위해, 이자감면, 용적률 완화, 조례 강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지만, 일부 인센티브의 경우 악용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분야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공기관의 담당자, 설계사,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BF인증 적용 기준과 변경 사항 등을 포함시킨 다양한 사례에 대한 내용과 매뉴얼, 해설서, 법규책 등이 제작, 배포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기관 건축 설계 예산에 BF심의 후 설계 변경 단가 신설이 필요하다. BF인증 이후 재설계를 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어야 하나, 예산항목이 없다보니 원 설계대로 시공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건축설계에 세 가지(공모설계, 실시설계, BF인증설계) 설계 비용에 대한 예산 항목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설계사와 건축사, 시공 담당자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시공하는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BF인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건축과 설계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BF인증에 대해 필수 교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현재 의무인 장애인식개선교육 과정에서도 BF인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4. 인증운영기관 설립 방안

첫째, 인증기관의 질적인 측면을 제고하고, 매뉴얼 작성, Q&A작성 등 인증기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운영기관이 필요하다.

둘째, 인증운영기관을 인증기관과는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나, 인증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증기관 중에서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BF인증제도 개선 방안

제1절 BF인증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

제2절 민간 분야 확대 방안

제3절 공공 분야 확대 방안

제4절 인증운영기관 설립 및 운영 방안

제5절 기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제1절 BF 인증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

BF인증제도의 현재 브랜드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아직 제도가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또한 많은 비용을 들여 정량적 측정을 할 만큼 브랜드 가치를 정교화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선 문헌고찰에서 보았듯이 브랜드 가치는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지각된 품질, 브랜드 만족도와 같은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 요소 측면에서 정성적으로 분석은 가능하다.

첫째,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 BF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수준이 낮다. FGI,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담당 공무원들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일반 국민의 인지까지 조사할 필요없이 현재 BF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브랜드 연상 이미지 측면에서 보면, BF인증 마크에 의해 연상되는 이미지가 없었으며, BF인증 마크가 주는 의미 등이 명확치 않았다.

셋째, 지각된 품질 측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BF인증이 있을 경우 접근의 편의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자문회의 등을 통해 BF인증을 받게 되면 장애인, 노인 등 건물, 도로 등의 소비자들이 접근관련 품질을 인식하게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BF인증에 따른 품질에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브랜드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 아직 정부, 인증기관, 건축주, 일반 소비자 모든 측면에서 BF인증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BF인증이 확산되지 않음에 따라 불만족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업무량에 비해 적은 수수료 등 인증업무에 만족도가 떨어져 있었으며, 건축주는 편의시설 위에 부가된 추가적인 규제에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반 소비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은 아직 BF인증이 확산되지 않음에 따라 불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전반적으로 BF인증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4요소 중 지각된 품질 외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만족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지각된 품질도 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BF인증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BF인증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증효과를 제시하거나 최우수 인증 시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각된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우수 인증 시설에 대한 홍보, 시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브랜드 인지도, 만족도 등을 높이기 위한 브랜드 가치 제고 혁신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1.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BI)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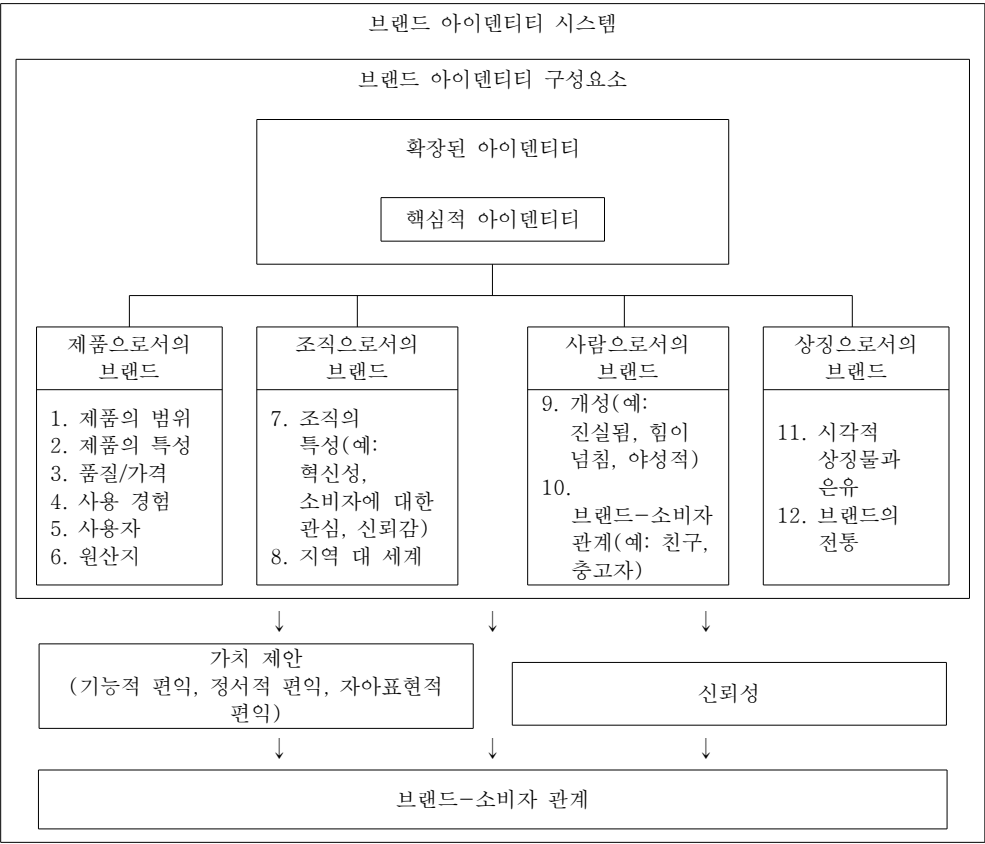
브랜드의 가치는 마케팅 분야에서 ‘브랜드 자산’(brand equity)이라는 용어로 개념화된다. 이 때 브랜드 자산이란 브랜드와 관련된 자본과 회사나 고객의 부가적 가치를 상징하는 브랜드 네임과 심벌에 대해 재화와 용역으로 제공되는 자산(assets)의 집합을 말한다(Aaker, 2003). 이러한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 인지도(brand name awareness), 브랜드 충성도(brand loyalty), 지각된 품질(perceived quality), 브랜드 연상 이미지(brand associations)로 구성된다.

이러한 브랜드 자산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서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BI)의 구축이 제시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와 관련된 일련의 독특한 연상으로, 이러한 연상은 브랜드가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만든 사람으로부터 고객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Aaker, 200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를 타 인증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무엇보다 취약한 것은 이러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커(Aaker, 2003)에 의하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핵심적 아이덴티티와 확장된 아이덴티티로 구성되며, 브랜드의 성격에 따라 제품으로서의 브랜드, 조직으로서의 브랜드, 사람으로서의 브랜드, 상징으로서의 브랜드의 성격을

가진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는 이 중에서 상징으로서의 브랜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적 상징물과 은유, 브랜드의 전통이 중요하다. 또한 모든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해당 브랜드에 의한 가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에는 기능적 편익이 우선이 되겠지만 정서적 편익과 자아표현적 편익도 포함된다. 자아표현적 편익이란 해당 브랜드가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편익을 준다는 의미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 자체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브랜드는 그 자체로 구매의 유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위 브랜드나 조직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 가치 제안, 신뢰성이라는 요소들의 연결이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림 4-1]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 및 시스템



자료: Aaker(2003, p. 127)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제시된 바가 없다. 브랜드의 명칭과 상징, 그리고 의미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협소하게 볼 때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대한 이러한 아이덴티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는 현재 타 인증제도와 같이 인증심볼 디자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브랜드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일례로 녹색건축 인증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펴보면 브랜드의 명칭은 물론 상징의 의미, 브랜드 명칭 및 상징이 추구하는 의미에 대해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의 브랜드 명칭, 브랜드 상징(심볼), 브랜드 의미를 통합적, 일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4-1〉 녹색건축 인증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사례

구분	내용
브랜드 명칭	약칭: G-SEED 풀네임: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
브랜드 상징	  <p>상징 설명: 짙은 녹색의 잎 모양을 간접적(추상적)으로 표현, 잎이 피어지는 모습과 탄생하는 자연의 모습을 나무로 형상화 하여 의미성을 높임.</p>
브랜드 의미	<p>(상징성) 저탄소녹색성장을 기조로 한 녹색건축인증제의 개념을 연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의 녹색과 Energy and Environment의 에너지 및 환경성에 대한 부분이 저탄소녹색성장의 의미에 부합하는 안 <p>(대중성) 친근감이 있으며 누구나 기억하고 부르기 쉬운 대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ED의 '씨앗'이라는 단어가 친숙한 이미지로, 녹색건축물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작지만 큰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누구나 기억하기 쉽다는 것을 착안한 안 <p>(기타) 국제성 등 기타 브랜드네임이 가져야 할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씨드]라는 명칭이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명칭으로 국제화 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기존 단어를 활용한 조합으로 발음에도 문제가 없는 안

자료: 녹색건축인증 홈페이지(gseed.greentogether.go.kr)

2. 인증 효과의 기술과 제시

앞서 기술하였듯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브랜드 명칭과 상징만으로는 부족하며, 브랜드가 제공하는 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가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브랜드 가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건축주 측면, 이용자 측면, 더 나아가 사회적 측면에서 인증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신청의 주체가 되는 건축주에게 경제적 효과가 있어 투자 대비 효용이 높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 유사 인증제도 중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국가경제적 측면, 건축주 측면, 거주자 측면에서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소비자 측면, 주택사업체 측면, 국가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또한 이러한 가치의 제시가 필요하며, 여

러 효과를 나열하는 것과 함께 그러한 효과를 압축하는 표현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브랜드 명칭 및 상징은 물론 이러한 가치의 제시는 인증운영기관이 지정될 경우 중요한 업무 영역으로 둘 필요가 있다.

〈표 4-2〉 인증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 제시 사례

구분		내용
녹색건축 인증	국가경제적 측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배출 저감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감축 -지역경제의 발전
	건축주 측면	-건물 가치의 향상
	거주자 측면	-건물 유지관리비의 절감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감축 -지역경제의 발전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소비자 측면	-건축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획득 -건물 관리에 요구되는 에너지비용 절감 -쾌적한 생활 -구매자에게 유리한 정보 제공 -미래 발생 가능한 에너지위기 및 가격 상승요인 대비 가능 -환경친화적 커뮤니티에 기여
	주택사업체 측면	-건물에너지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분양 시 마케팅전략 활용 가능 -소비자에게 에너지절약 및 쾌적한 실내환경 관련 홍보 가능 -마감재 위주의 주택시장을 성능향상 차원으로 유도 -에너지절약기술 관련 주택산업 발전 유도 -원가절감 유도
	국가적 측면	-에너지절감 및 외화 절약 -미래 발생 가능한 에너지위기 대비 -기후변화협약 이행 지원 -건설시장 활성화 -에너지부분 기반 정비 등

자료: 녹색건축인증 홈페이지(gseed.greentogether.go.kr),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홈페이지(beeec.kemco.or.kr)

3. 최우수 인증 시설의 부각

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키는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는 소비자가 그러한 브랜드를 사용하여 큰 편익을 창출한 사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거나 그러한 사례를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제도에 의해 최우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경험하게 하거나 제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의 경우 운영 초기에는 인증 자체가 큰 가치를 제시할 수 있으나, 운영이 성숙되어 활성화될수록 인증 자체로 인한 브랜드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증등급에서 최우수 인증에 대한 부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는 건축물에 대한 유사 인증제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그린 1등급의 최우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별도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와 같이 최우수 인증등급 사례를 주기적으로 홍보하여 인증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고 단순한 인증이 아닌 우수한 등급의 인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최우수 인증등급 시설물이 많아질 경우에는 매년 ‘올해의 BF 인증 대상’(가칭)과 같은 시상식을 개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 개별 시설이 아닌 도시 차원에서 진행하는 ‘Access City Award’가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향후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2] 최우수 인증 건축물에 대한 홍보 사례



자료: 녹색건축인증 홈페이지(gseed.greentogether.go.kr)

4.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최근 기업의 상업활동에서는 물론 정부의 각종 사업에서 소비자 혹은 일반 국민의 참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혹은 일반 국민의 참여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결함 발견 및 개선의견 수렴,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도의 개선 필요사항 발견의 목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으나, 더 나아가 소비자 및 일반 국민의 참여를 통해 해당 상품 혹은 제도를 널리 알리면서 신뢰도를 높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증제도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히 인증제도의 적용 활성화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 표에 제시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사례와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혹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벌이거나, ‘BF 시민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형성하여 제도개선과 함께 자체적인 혁신활동을 벌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표 4-3〉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사례: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구분	내용
공모전	-제로에너지건축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공모전(2018)
시범사업	-사업모델별(저층형, 고층형, 타운형)로 단계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사용화 유도
얼라이언스	-시장 확산이 가능한 제로에너지빌딩 모델 마련을 위해 기업, 학계, 연구소가 결합된 협력체계 구축
얼라이언스 포럼	-제로에너지빌딩 융합얼라이언스 포럼(2016~현재)
KIEE 수요혁신 토론회	-건축물에너지 관련 혁신 토론회(2019년 1월 최초 개최)
skill-up	-녹색건축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무료 교육(유관기관 종사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대학(원)생 등 대상)
이동체험관	-제로에너지홍보관, 제로에너지체험관 운영

또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제도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과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최우수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운영기관이 처음부터 기획하여 시설물을 신축하고 이를 성공모델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최근 사회적 소통의 보편적 수단이 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1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BF 인증 시설을 찾아라!’(가칭)라는 코너를 통해 BF 인증명판을 찾아 사진을 올리면 추첨하여 시상하는 활동 등이 가능하다. 이는 정보생산의 주체가 시민이 되도록 하는 활동의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시민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시설에 대한 위치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도(map) 기반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시설 정보가 표시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이러한 시스템의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시설의 표시만을 위한 별도의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다른 편의시설, 관광시설, 교통정보, 생활정보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도의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면 본 인증제도가 모든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목적에 국한된 제도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지도 어플리케이션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시설 정보를 연동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제2절 민간분야 확대 방안

현재 민간분야의 경우 BF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민간의 인증실적은 200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599건으로 전체 4,771건의 12.6%에 불과하다. 특히 해마다 공공의 인증비율이 높아지고 민간의 인증실적은 점점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간분야 시설이라고 해서 BF인증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의 이용이 편리해야 하기 때문에 BF인증이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민간분야 BF인증 확대를 위해 인증 의무화가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고, 이후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았다.

1. 대상 범위 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의 타인증 사례를 보면 민간의 경우에도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BF인증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항에 민간이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의무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의무 대상시설을 규정한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관련 별표 2의2를 개정하여 인증 의무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신축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증축, 개축, 대수선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분야의 인증의무를 확대할 수 있다.

가. 의무 건축물의 확대

민간분야에서 BF인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증을 의무화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타인증의 경우 공공과 민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건축물의 종류 또는 면적에 의해 인증 의무 시설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BF인증도 민간분야 의무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시설의 종류와 면적 등에 따라 인증을 의무화할 수 있다. 실제로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은 민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규모일 경우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민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 대상시설이 된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경우에도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 및 라목의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있어서도 민간도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인증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 산출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 중 신축 건축물의 비율을 고려할 수 있다. 2012~2016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이 전체의 96.7%를 차지하고 있다⁹⁾. 따라서 민간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본다면, 5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인증 의무화를 위해서는, 『장애인등의편의증진 보장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경우 외에 민간이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함으로써 가능하다. 다만 모든 민간의 건축물에 대한 의무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선 초고층 건축물 및 다중이용 건축물부터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후 준초고층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도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층 건축물 및 다중이용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BF인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항에 의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우리나라는 1971년 삼일빌딩(지하2층, 지상31층, 높이 114m)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초고층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다. 2014년 기준(MPSS, 2014)에 의하면 고층건축물은 2,158동, 초고층건축물은 81동에 이른다. <표 4-4>에 나타

9)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건물 신축에 따른 협의완료 건축물)

낸 바와 같이 주거시설인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이 72개소로 전체의 88.9%를 차지하고 있다(민세홍, 박중덕, 권용준, 2016). 2014년에는 80층 이상의 건물이 1개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100층 이상의 건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The Skyscraper Center Database 기준으로 2016년 완공된 건물 중, 400m 이상 18개, 400m 이하이나 100 층이 넘는 건물 2개, 2016년 완공예정인 400m 이상의 건물 2개로 총 23개이다(박상민, 2017).

또한 현재 최고층 건축물은 서울 “제2롯데월드타워(123층)”이며,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50층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102개의 건축물로 조사되었고, 2016년 공사 중인 초고층 건축물만 해도 15개의 건축물이 건설중에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초고층 건축물이 건설 될 예정이다.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경우도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수많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건설되고 있다(문희준, 2017).

〈표 4-4〉 지역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2016년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계
초고층	17	28	7	18	8	2	13	1	1	102
지하연계	132	30	23	11	5	—	27	—	—	228
합계	149	58	30	29	13	2	40	1	1	323

자료: 문희준(201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거주밀도에 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와 같은 초고층 건물, 다중이용시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도 점점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위험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BF 인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하기 때문에,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또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BF인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을 보장하는 효과가 크게 존재하지만, 관련된 건축물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의무시설로 확대하여도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안전부 등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을 인증하는 BF인증제도의 의무화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무 대상시설의 확대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관련 별표 2의2를 개정하여 인증 의무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첫째,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법』 제7조(대상시설)에 따라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중 인증 의무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공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원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인증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라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지만, 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현재 전체 인증 4,267건 가운데 공원은 단 12건만 인증을 받고 있다.¹⁰⁾ 따라서 공원을 별표2의2에 포함시켜 인증의무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9조의 대상시설 가운데 인증의무 대상 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없으므로, 이 법에서 인증대상인 도로, 여객시설, 교통수단

10) 인증교부데이터(2019년1월 기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로의 경우 최근 많이 설치되는 둘레길, 숲길, 나무데크길 등 보행자 전용도로는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하며, 여객시설은 충분히 인증대상이 될 수 있고, 교통수단의 경우에도 새로 도입하는 철도차량, 저상버스 등은 인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이 신축하는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관련 별표 2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만을 의무 대상으로 하다보니,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이 빠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민간까지 확대할 경우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건축 범위 확대

건축 범위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에 신축 외에도 개축, 증축, 용도변경 시에도 적용이 되지만¹¹⁾, BF인증의 경우는 신축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무화되는 대상 건축물 중 증축·개축·재축·이전의 경우에도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선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실제로 기존 건축물의 구조를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인증이 어려우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직 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도 구조물을 바꾸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 옆에 새로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BF인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면 개축의 경우에도 신축과 유사하기 때문에 BF인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관의 건축물은 신축뿐 아니라 전면 개축하는 건축물도 포함하고 있다.¹²⁾

1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시설주의 의무) 및 「시행령」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제3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2. 활성화 방안

가. 인센티브 제공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용적률, 최대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3~9%),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의 경우 용적률, 최대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를 해주고 있다. 세금감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므로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적용이 적절하다. 다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의 최대한도를 이미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적용하고 있어 새로운 인센티브 마련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서의 인센티브 부여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함께 취득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나. 건축심의 조건으로 산정하는 방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심의의 내용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건축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과 맞지 않는 건축이 허가되고 있다.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 접근로의 횡경사, 나선형 계단이나 곡선 경사로 등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 건축심의를 내용에 장애물 없는 인증을 포함시킨다면 BF인증제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1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3조(적용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다. 조달청 PQ 가산점 제도 도입 방안

민간의 인증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의 하나로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검사기준(PQ)의 가산점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신인도 평가 기준에는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5>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검사 신인도 평가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라. 녹색건설 관련 인증 실적	16)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	A : 1등급 B : 2등급	1.0 0.5
	17)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 최우수 B : 우수	1.0 0.5
	18)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제3절 공공 분야 확대 방안

1. 공공 분야 BF인증 현황

가. 총괄

2008년부터 2019년 1월까지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공기업이 교부받은 BF 인증 현황을 제시한다. 예비 인증과 본 인증을 포함해 총 3,014건의 인증이 교부되었다. 건축물이 2,87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여객시설 114건, 공원 12건, 도로 8건, 도시(구역) 1건 등의 순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인 공공기업(2018년 8월 기준 총 338개)에서 BF인증은 총 307건인 가운데, 건축물이 21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객시설 86건, 공원 2건, 도로 1건 등으로 나

타났다. 시도와 시군구를 모두 포함한 지자체의 BF인증은 총 2,580건이다. 건축물이 2,545건으로 가장 많고, 여객시설은 18건, 공원 10건, 도로 7건 등이다. 끝으로 지방공기업(2016년 6월 기준 총 410개)의 경우 총 127건이며, 건축물이 116건, 여객시설 10건, 도시(구역) 1건으로 확인되었다.

<표 4-6> 공공 분야 주요 기관 BF인증 현황(2019년 1월 기준)

(단위: 건)

구분		계	건축물	여객시설	공원	도로	도시(구역)
전체	계	3,014	2,879	114	12	8	1
	본인증	867	828	33	6	0	0
	예비인증	2,147	2,051	81	6	8	1
공공기관	계	307	218	86	2	1	0
	본인증	102	71	30	1	0	0
	예비인증	205	147	56	1	1	0
지자체	계	2,580	2,545	18	10	7	0
	본인증	718	710	3	5	0	0
	예비인증	1,862	1,835	15	5	7	0
지방공기업	계	127	116	10	0	0	1
	본인증	47	47	0	0	0	0
	예비인증	80	69	10	0	0	1

자료: 한국장애인복지개발원, BF인증교부 현황(2019년 1월 기준)

나. 공공기관 BF인증 현황

2018년 8월 기준 338개 공공기관 가운데 BF인증을 1건이라도 교부받은 기관은 31개기관으로 인증률은 9.2%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인증은 주로 한국철도시설공단(90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59건), 한국농어촌공사(33건),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29건) 등 4개 기관에 의한 BF인증이 총 307건 가운데 약 70%인 211건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BF인증 교부를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로 전국에 소재한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운수시설에 대한 BF인증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연구시설과, 사무실 등의 업무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에서 BF인증을 획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소재 지사의 공중화장실

의 BF인증 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지역본부 업무 시설의 BF인증 건수가 대다수이다. 이 기관 이외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5건, 국민연금공단 13건, 한국자산관리공사 12건, 국민체육진흥공단 10건, 한국수자원 공사 10건 등이며, 모두 건축물에 대해 BF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 4-7> 주요 공공기관 BF인증 현황(2019년 1월 기준)

(단위: 개)

기관	계	건축물	여객시설	공원	도로	도시 (구역)
한국철도시설공단	90	4	86	0	0	0
한국토지주택공사	59	58	0	1	0	0
한국농어촌공사	33	33	0	0	0	0
국민건강보험공단	29	29	0	0	0	0
국립공원관리공단	15	15	0	0	0	0
국민연금공단	13	13	0	0	0	0
한국자산관리공사	12	12	0	0	0	0
국민체육진흥공단	10	10	0	0	0	0
한국수자원공사	10	10	0	0	0	0
한국산업단지공단	6	6	0	0	0	0
한국도시주택공사	3	1	0	1	1	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2	0	0	0	0
선박안전기술공단	2	2	0	0	0	0
한국관광공사	2	2	0	0	0	0
한국지역난방공사	2	2	0	0	0	0
한국콘텐츠진흥원	2	2	0	0	0	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2	0	0	0	0
15개 각 기관	1	1	0	0	0	0

자료: 한국장애인복지개발원, BF인증교부 현황(2019년 1월 기준)

다. 지자체 BF인증 현황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BF인증 건축물 등의 시군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BF인증 건수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도와 시군구를 모두 포함한 지자체의 BF인증은 총 2,580건이다. 먼저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0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 263건, 서울시 257건, 경상북도 211건, 인천시 197건, 강원도 176건 등의 순이다. 반면 광주시는 57건, 대전시 62건, 울산시 82건,

충청북도 85건, 부산시 94건으로 100건 미만의 BF인증을 받았다. 시도별 환경과 여건이 상이함을 고려하더라도 지자체의 BF인증 노력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도별 시군구 BF인증 분포에서 해석시 유의할 점은 소재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시도가 주체가 되어 받은 BF인증 또한 시군구에 집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31건 이상의 BF 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11개, 11-30건 이하는 18개, 11-20건은 66개, 6-10건은 74개, 5건 이하는 57개로 나타났다. 즉, 시군구별 BF인증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가령,경기도의 경우 31건 이상의 BF 인증 건축물 등이 소재한 시군구가 4개가 있는 반면, 5건 이하인 시군구도 8개소가 있다.

<표 4-8> BF인증 소재지 기준 시군구 분포 현황(2019년 1월 기준)

(단위: 개)

시도	전체	시군구 개소수				
		1-5건 이하	6-10건 이하	11-20건 이하	11-30건 이하	31건 이상
전국	2,580	57	74	66	18	11
서울특별시	257	2	11	11	1	0
부산광역시	94	11	3	1	1	0
대구광역시	144	0	0	7	0	1
인천광역시	197	1	1	2	5	1
광주광역시	57	1	1	3	0	0
대전광역시	62	1	1	2	1	0
울산광역시	82	0	1	2	2	0
세종시	15	0	0	1	0	0
경기도	400	8	7	10	2	4
강원도	176	5	6	7	0	0
충청북도	85	5	4	1	0	1
충청남도	144	2	8	3	1	0
전라북도	118	4	3	6	0	0
전라남도	263	6	7	6	2	1
경상북도	211	6	11	2	3	0
경상남도	161	5	10	2	0	1
제주특별자치도	114	0	0	0	0	2

자료: 한국장애인복지개발원, BF인증교부 현황(2019년 1월 기준)

라. 지방공기업 BF인증 현황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의 경우 총 BF인증은 127건이다. 기관별로

보면 2016년 6월 기준 총 410개 기관 가운데 BF인증을 한 건이라도 교부받은 기관은 약 7%인 28개 기관에 불과하다. 지방공기업에서 BF인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에서 BF인증을 주도한 유형은 도시개발공사이다. 서울주택공사가 38건, 경기도시공사 16건, 인천도시공사 15건, 전남개발공사 9건, 충남도시개발공사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대목은 시도에 도시개발공사가 모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개발공사 간에도 BF인증 노력이 큰 편차가 있다는 점이다. 시설관리공단 또한 BF인증을 일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천시설관리공단은 5건으로 가장 많다. 도시개발 공사와 동일하게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또한 BF인증 노력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9> 지방공기업 BF인증 현황(2019년 1월 기준)

(단위: 개)

구분	기관	계	건축물	여객시설	도시 (구역)
공영·도시 개발	서울주택도시공사	38	37	0	1
	경기도시공사	16	16	0	0
	인천도시공사	15	15	0	0
	전남개발공사	9	9	0	0
	충남도시개발공사	4	4	0	0
	김해도시개발공사	3	3	0	0
	대전도시공사	3	3	0	0
	용인도시공사	3	3	0	0
	광주도시공사	2	2	0	0
	김포도시공사	2	2	0	0
	하남도시공사	2	2	0	0
	강원도개발공사	1	1	0	0
	경남개발공사	1	1	0	0
	경북개발공사	1	1	0	0
	남양주도시공사	1	1	0	0
	성남도시개발공사	1	1	0	0
	천안공영개발	1	1	0	0
	화성도시공사	1	1	0	0
시설관리	인천시설관리공단	5	5	0	0
	대전시설관리공단	1	1	0	0
	부산시설관리공단	1	1	0	0
	서울시설관리공단	1	1	0	0
교통	부산교통공사	10	1	9	0
기타	3개 각 기관	1	1	0	0

자료: 한국장애인복지개발원, BF인증교부 현황(2019년 1월 기준)

2. 국가 공공기관 확대 방안

가. 개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BF인증 의무화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공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BF인증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1항에 의거해 지정된 것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해당된다. 이 기관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아닌 기관 법인·단체지만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요건에 의해 지정된다는 점, 그리고 전기, 가스, 도로·공항·항만, 금융, 의료·사회복지서비스, 4대 보험, 안전, R&D 등 다양한 업무 분야를 망라한다는 점에서 공공 분야 BF인증을 확대 필요성이 크다.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제도’에 BF인증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것이다. 연성규제 방식인 경영평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은 법·제도를 개편하는 방식에 비해 단기적 실현이 가능하고, 규제집행의 비용이 크지 않으며, 평가체계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체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는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사회적 가치 실현은 BF인증의 목적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사회적 가치 경영을 촉진하고자 「공운법」 제48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가 매해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제도’가 개편됐다. 2018년 이후 경영관리 부문 평가지표에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이 추가되었고,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윤리 경영 수준 등이 평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BF인증과 관련된 경영평가 지표 신설은 상당한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 또한

주무부처 주관하에 자체평가를 실시하나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준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기에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과 공공기관 현황, 공공기관 경영평가실적제도,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평가지표를 제시한다.

나.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¹³⁾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서 개별기관의 설립근거 및 설립주체, 개별기관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형태와 규모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공운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동 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세부 유형을 보면, 우선적으로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자체수입액 비중, 자산규모, 기금관리여부 등을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어 구분된다.

<표 4-10> 공공기관 유형 분류

유형구분	지정요건
①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②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13)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 2018, 2018 공공기관 현황 편람, pp. 18~20.

유형구분	지정요건
③ 기타공공기관	직원정원 50인 미만인 공공기관과 이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 2018. 2018 공공기관 현황 편람

주: 연구개발 목적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분류 근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개정을 통해 마련됨(2018.3.27. 개정법률)

다. 공공기관 현황

2018년 9월 현재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은 총 338개이다. 공기업은 총 35개(10.3%)로 시장형 공기업이 15개, 준시장형 공기업이 20개이다. 준정부기관은 총 93개(27.5%)로, 이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16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77개이다. 기타공공기관은 210개(62.1%)이다.

<표 4-11> 2018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18.9월 기준)

전체 공공기관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93개)		기타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338개	15개 (4.4%)	20개 (5.9%)	16개 (4.7%)	77개 (22.8%)	210개 (62.1%)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2018.1.31.)』 보도자료

같은 기간 지역별 공공기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서울이 118개(34.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전 35개(10.4%), 경기 28개(8.3%), 부산 21개(6.2%), 세종 20개(5.9%), 대구 15개(4.4%), 전남과 경남 각각 13개(3.8%) 등의 순이다.

같은 기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6개(13.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41개(12.1%), 문화체육관광부 33개(9.8%), 국무조정실 24개(7.1%),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각각 23개(6.8%), 교육부 22개(6.5%), 해양수산부 17개(5%), 고용노동부와 벤처기업부 각각 12개(3.6%)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각각 10개(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2>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18.9월 기준)

(단위: 개)

구 분						
	계 (338개)	시장형 공기업 (15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7개)	기타 공공기관 (210개)
기획재정부	4	0	1	0	1	2
교육부	22	0	0	1	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	0	0	0	10	36
외교부	3	0	0	0	1	2
통일부	2	0	0	0	0	2
법무부	4	0	0	0	0	4
국방부	3	0	0	0	0	3
행정안전부	3	0	0	0	1	2
문화체육관광부	33	0	1	4	4	24
농림축산식품부	10	0	1	0	5	4
산업통상자원부	41	12	5	2	13	9
보건복지부	23	0	0	1	6	16
환경부	10	0	1	0	4	5
고용노동부	12	0	0	1	4	7
여성가족부	5	0	0	0	2	3
국토교통부	23	2	6	0	5	10
해양수산부	17	1	4	0	4	8
중소벤처기업부	12	0	0	2	2	8
국무조정실	24	0	0	0	0	24
방송통신위원회	2	0	1	0	1	0
원자력안전위원회	3	0	0	0	1	2
금융위원회	8	0	0	4	0	4
공정거래위원회	2	0	0	0	1	1
국가보훈처	3	0	0	0	2	1
인사혁신처	1	0	0	1	0	0

구 분						
	계 (338개)	시장형 공기업 (15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7개)	기타 공공기관 (210개)
식품의약품안전처	4	0	0	0	1	3
관세청	1	0	0	0	0	1
방위사업청	2	0	0	0	0	2
경찰청	1	0	0	0	1	0
소방청	1	0	0	0	1	0
문화재청	1	0	0	0	0	1
산업청	3	0	0	0	2	1
농촌진흥청	1	0	0	0	1	0
특허청	5	0	0	0	1	4
기상청	3	0	0	0	1	2

자료: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 2018. 2018 공공기관 현황 편람

주: 「정부조직법」 개정(2018.6.8.)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주)위터웨이플러스는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조정됨.

<표 4-13>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18.9월 기준)

(단위: 개,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118 (34.9)	21 (6.2)	15 (4.4)	7 (2.1)	4 (1.2)	35 (10.4)	9 (2.7)	20 (5.9)	28 (8.3)	12 (3.6)	12 (3.6)	7 (2.1)	8 (2.4)	13 (3.8)	11 (3.3)	13 (3.8)	5 (1.5)
공기업 (35개)	4 (11.4)	3 (8.6)	2 (5.7)	2 (5.7)	0 (0.0)	4 (11.4)	3 (8.6)	0 (0.0)	2 (5.7)	3 (8.6)	0 (0.0)	2 (5.7)	0 (0.0)	4 (11.4)	3 (8.6)	2 (5.7)	1 (2.9)
준정부기 관(93개)	21 (22.6)	7 (7.5)	6 (6.5)	1 (1.1)	1 (1.1)	7 (7.5)	3 (3.2)	3 (3.2)	9 (9.7)	7 (7.5)	7 (7.5)	2 (2.2)	4 (4.3)	8 (8.6)	2 (2.2)	4 (4.3)	1 (1.1)
기타공공 기관 (210개)	93 (44.3)	11 (5.2)	7 (3.3)	4 (1.9)	3 (1.4)	24 (11.4)	3 (1.4)	17 (8.1)	17 (8.1)	2 (1.0)	5 (2.4)	3 (1.4)	4 (1.9)	1 (0.5)	6 (2.9)	7 (3.3)	3 (1.4)

자료: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 2018. 2018 공공기관 현황 편람

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¹⁴⁾

14)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 2018. 2018 공공기관 현황 편람. pp. 204~205.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의 목적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매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984년도에 최초 실시되어 34년째 시행중인 대표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 중 하나이며, 경영실적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경영실적평가는 매년 3~6월 사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등 후속조치가 수반된다.

한편,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제4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주무부처 주관 하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준용하여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

마. 공공기관 경영혁신과 사회적 가치 구현¹⁵⁾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목표는 ‘국민 삶의 질 제고’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주력하여 실질적인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3대 기본방향은 ①공공성 강화, ②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③국민 신뢰 회복이다. 공공성 강화란 대국민서비스 확충 및 질 제고를 위해 기관 고유업무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조직운영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달성을 위해 기관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확산에도 주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국민 신뢰 회복은 부채·비리 근절, 국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을 실현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영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상기한 3개 기본방향에 입각한 7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고

15)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 2018. 2018 공공기관 현황 편람. pp. 79~83.

유업무의 공공성 제고 과제로, 고유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 삶의 질 개선,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 안전·환경·복지 분야 등에서의 투자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조달 혁신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영혁신에 반영하기 위해 2018년 경영평가지표의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었다. 경영관리 부문에서 공기업의 배점은 총55점인데, 이 중에 사회적 가치 구현은 22점이 할당되었고, 준정부기관은 총 45점에서 20점이 할당되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배점 부여는 평가체계에 정부차원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가치 구현의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정현원차 관리, 민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공기업 7점, 준정부기관 6점), 고졸자·지역인재·여성 관리자 확대 등과 관련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공기업 4점, 준정부기관 3점), 산업 재해 관리, 에너지 절약 등과 관련된 ‘안전 및 환경’(각각 3점),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업체 적기 자금 결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등과 관련된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각각 5점), 윤리 경영 체계, 경영 투명성 등과 관련된 ‘윤리경영 수준’(각각 3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4-14> 공공기관 경영 평가 지표 비교

범주	2017년		2018년	
	평가지표	계	평가지표	계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18점)	50 점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공기업·준정부 공통 6점)	공기업 55점 준정부 45점
	2. 업무효율(5점)		2. 사회적 가치 구현 (공기업 22점·준정부 20점)	
	3.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4점)		3. 업무효율 (공기업만 5점)	
	4. 재무예산관리(10점)		4. 조직·인사·재무관리 (공기업 9점·준정부 6점)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13)		5. 보수 및 복리후생비 (공기업·준정부 공통 8점)	
			6. 협력과 참여	

	점)		(공기업·준정부 공통 5점)	
주요 사업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중 합평가	50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공기업 10~15점·준정부 30~35점)	공기업 45점 준정부 55점
			기타 주요 사업 (공기업 35~45점·준정부 20~25점)	

자료: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 2018. 2018 공공기관 현황 편람

<표 4-15> 2018년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세부 항목

구분	공기업	준정부	비교
일자리 창출	7	6	·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정현원차 관리, 민간 일자리 창출 등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	3	· 고졸자·지역인재·여성 관리자 확대 등
안전 및 환경	3		· 산업 재해 관리, 에너지 절약 등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업체 적기 자금 결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윤리경영	3		· 윤리 경영 체계, 경영 투명성 등
총점	22	20	

자료: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 2018. 2018 공공기관 현황 편람

바. BF인증 유사 평가지표

BF인증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구현의 세부 평가 항목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세부 평가지표이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과 관련된 환경의 지속가능성 지표와, 산업재해 안전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 유지 지표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BF인증과 관련된 평가지표를 신설할 경우 계획 대비 달성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표 4-16> 2018년 사회적 가치 구현 내 BF인증 관련 세부 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 안전한 근로환경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관의 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안전 및 환경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총 합계 1점)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0.2~0.8), 녹색제품 구매실적(0.2~0.8)
지표정의	·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산업재해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등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②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 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 정보보호 피해건수,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국가정보원) 결과 등 ③ 기관의 업무 특성에 적합한 환경보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예방적 접근과 훼손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자료: 기획재정부. 2018. 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3. 지자체 공공시설물 확대 방안

가. 개괄

지자체 소관 신규·기존 공공 시설물, 다중이용시설(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등의 BF 인증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인증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있다.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의 경우는 인증 의무 대상시설이어서 작은 경로당조차 인증을 받고 있지만, 경로당 보다 큰 마을회관의 경우는 대상시설이 아니어서 인증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전망대의 경우 역시, 별표2의2에 따른 관광휴게시설에 포함이 되지 않아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건축하는 공원, 다중이용시설 등을 의무 대상시설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9조의 대상시설 가운데 인증의무 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없으므로, 이 법에서 인증대상인 도로, 여객시설, 교통수단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로의 경우 최근 많이 설치되는 둘레길, 숲길, 나무데크길 등 보행자 전용도로는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하며, 여객시설은 충분히 인증대상이 될 수 있고, 교통수단의 경우에도 새로 도입하는 철도차량, 저상버스 등은 인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일부 지자체의 선도적 BF인증 사례

진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선도적으로 BF 인증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BF 인증 확산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BF인증 소요비용이 상당한 만큼 생활SOC 관련 사업으로 기획해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에 BF 인증 확대를 지표로 신설함으로써 지자체 확산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 중 하나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심의 지표 개발이다.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지표를 중점 개발했다.

1) 진주시의 ‘무장애도시’ 구축 사업 사례

진주시의 ‘무장애도시’ 구축 사업은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된 BF 관련 사업이다. 2013년 11월에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가 공포한 이후 2015년 2월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무장애시설(BF) 인증기준 확정·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무장애도시’의 사업 목적은 “어린이·노인·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과 도로, 공원 등 생활환경 속 장애물을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시공함으로써 모두가 편안한 도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도시’, ‘모두가 함께 만드는 좋은 도시’를 목표로 TF팀 운영, 진주시 무장애(BF)시설 인증제 확대, 시 및 읍·면·동 무장애도시 위원회 활성화, 시민인식 개선 강화, 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 추진해 왔다.

사업대상은 공공건축, 공원시설, 도로시설, 교통시설, 기타 신설 택지지구 무장애(BF) 기반 조성 등 공공분야와, 민간 소규모 건축물(음식점, 소매점, 기타)과 다중이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기타 등 편의시설설치 의무대상 시설) 등 민간분야를 포괄한다.

<표 4-17> 진주 무장애도시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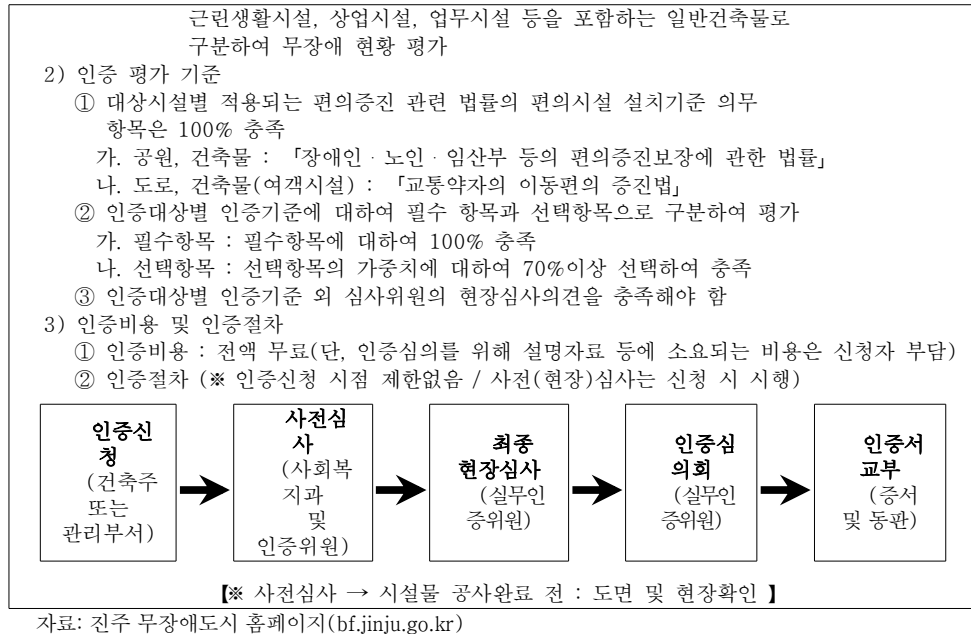
추진사항	대상	추진내용
공공시설 BF 의무화	· 공공청사 및 공공건축물(신설 또는 개보수)	· 진주시 BF 인증 기준 적용 · 공공청사 편의용품 비치
보행환경개선	· 보도(신설 또는 개보수)	· 진주시 BF 인증 기준 적용
민간다중이용시설 BF 권장	· 병원, 음식점, 마트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없으나, 시민이용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	· 건축인·허가 시 진주시 BF 인증 권장 · 소규모 사업장 접근로 및 출입구 문턱 제거, 자동문 및 도움벨 설치 등 · 소규모 사업장 문턱없애기 운동 추진
사회약자 편의증진사업	· 거동 불편 장애인, 노인	· 전동휠체어충전기 보급 · 주거약자 주택 편의시설 설치사업 · 보조기구 교부사업
관련종사자 전문성 강화	· 공무원 · 관련분야 종사자	· 관련 분야 공무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교육(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 · 분야별 BF 매뉴얼 제작·보급
시민인식개선 및 사회적 참여분위기 조성	· 시민	· 각종 공모전 개최(상징디자인, UCC, 사진 등) · 장애체험장 운영 · 시민인식 개선 관련 교육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 BF 포럼 개최 · 위원회 구성·운영(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 실무·인증위원회, 읍면동 위원회) · 시민참여활동 전개(시민축진단, 모니터링단 등)

자료: 진주 무장애도시 홈페이지(bf.jinju.go.kr)

진주시 무장애도시 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별도의 BF인증 체계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증 대상은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을 포괄하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심으로 인증 평가 기준을 적용해 2017년 3월 롯데몰 진주점, 2017년 3월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관, 2018년 5월 진주목공예전수관 등을 인증했다.

<표 4-18> 진주 무장애도시 인증 평가 기준

- 1) 인증대상 - 도로, 공원, 건축물(공공건축물,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함
- ① 도 로 : 도시계획상의 도로에 대하여 무장애 현황을 평가
 - ② 공 원 :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에 대하여 무장애 현황을 평가
 - ③ 건축물 :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을 포함하는 공공건축물과



2) 제주도 'BF제도 홍보 및 인증시설 확대' 사업

제주도의 'BF제도 홍보 및 인증시설 확대' 사업은 “장애인 노인·임산부 및 모든 국민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이며, 사업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증축(재건축)하는 공공건축물 및 보조금, 기금을 지원하는 건물 등이다. 사업내용은 건물 신·증축(재건축) 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시설의 경우 본인증(예비인증)을 획득하는 것이다. 사업목표량은 19년 30개소, 20년 30개소, 21년 35개소, 22년 35개소이다.

3) 강원도 '무장애(BF) 강원,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사업

강원도의 '무장애(BF) 강원,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 무장애 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이며, 사업대상은 (사업대상) 도내 장애인 편

의시설(편의지도 제작), 법적 설치의무 면제 민간 다중이용시설(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이 사업은 연차별로 사업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1차년도에는 장애인 편의지도 제작, 1차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법적 설치의무 면제 민간 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하는 것으로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록 등의 설치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3차년도에는 장애인 편의지도 업데이트, 2차~3차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법적 설치의무 면제 민간 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하는 것으로,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록 등의 설치,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차년도에는 장애인 편의지도를 지속 갱신하고, 3년간의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원도 ‘무장애(BF) 강원,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목표량은 소규모 민간시설 지원을 19년 100건, 20년 400건, 21년 500건, 22년 500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등 BF인증 의무화’ 사업

부산광역시 북구의 ‘공공기관 등 BF 인증 의무화’ 사업은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불편 없는 생활환경 구축·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8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며, 사업 대상은 신규·기존 공공 시설물, 다중이용(복지관 등) 시설, 민간시설물 등이다. 이 사업 내용은 신축 공공건축물 및 신규 조성시설물 BF 인증을 추진(총 5개소), 기존 공공시설물 BF 인증 추진, 다중이용 공공시설물(종합사회복지관 등) BF 인증 추진, BF 인증 확대 및 활성화 촉진 위한 조례 추진(검토 과제)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목표량은 19년 1개소, 20년 1개소, 21년 1개소, 22년 1개소를 설정하고 있다.

다. 지자체 합동평가 인증 지표 유사 사례

지자체 소관 신규·기존 공공 시설물, 다중이용시설(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등의 BF 인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합동평가를 활용한다. 실제 지자체

체 합동평가 평가 지표에서는 인증 관련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 내용이 포함된 사례가 있다. 가령, 2018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는 HACCP 인증과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관련 지표가 설정된 바 있다. 축산기관 운영관리와 관련된 평가지표로서,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인증 증가율로 관리되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평가지표로서,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실적이 포함되기도 했다.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는 GAP 인증 농가 확대가 신설되었다. GAP 인증은 우수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안정성 인증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농산물의 생산·수확·포장·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한 농산물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은 국정운영과 국정과제와의 지표 연계성을 보다 강화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심의 지표 개발로,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지표를 중점 개발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BF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인증 달성률을 지자체 평가지표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지방공기업 확대 방안

가. 개괄

중앙 공공기관과 더불어,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로 지방공기업이 있다. 「지방공기업법」과 지자체 개별 조례에 의거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에서 BF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BF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 경영노력을 관리하는 핵심적 정책도구 중 하나이다.

중앙의 공공기관의 경영혁신과 유사하게, 최근 일자리 확대와 공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책임 강화로 규정된 사회적 가치는 지방공기업의 주요한 경영 목표 중 하나이다. 2018년이후 평가지표에 '사회적 가치'가 신설되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윤리경영, 노사상생, 재난·안전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 배려, 친환경 경영 등이 평가되고 있다. BF인증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공기업 평가지표로 반영될 정당성이 있다.

나. 지방공기업 대상 및 현황

지방공기업은 2016년 6월 현재 총 410개소로, 직접경영형태인 지방직영기업이 265개소이며, 간접경영인 지방공사·공단인 145개소이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이다.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이 해당 분야이다. 지방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 법인으로 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표 4-19> 2016년 지방공기업 기관 현황(2016.6월 기준)

전체 지방공기업	직영기업					공사·공단				
	소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지역개발 기금	소계	지하철	도시개발	기타공사	지방공단
410	265	119	95	33	18	145	7	16	39	83

자료: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2017. 2016년 지방공기업 현황

<표 4-20> 2016년 지방공기업 시도별 현황(2016.6월 기준)

시도별	합계	지방공기업									
		직영기업					공사·공단				
		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 기금	계	도시철도	도시개발	기타 공사	지방 공단
계	410	265	119	95	33	18	145	7	16	39	83
서울	31	2	1	0	0	1	29	2	1	1	25
부산	10	3	1	1	0	1	7	1	1	1	4
대구	8	3	1	1	0	1	5	1	1	0	3
인천	17	5	1	1	2	1	12	1	1	1	9
광주	8	3	1	1	0	1	5	1	1	1	2
대전	7	3	1	1	0	1	4	1	1	1	1
울산	8	3	1	1	0	1	5	0	1	0	4
세종	4	4	1	1	1	1	0	0	0	0	0
경기	106	72	31	30	10	1	34	0	1	16	17
강원	33	25	15	5	4	1	7	0	1	3	4
충북	21	18	8	7	2	1	3	0	1	0	2
충남	34	27	13	9	4	1	6	0	1	2	4
전북	20	17	9	6	1	1	3	0	1	1	1
전남	22	20	8	8	3	1	2	0	1	1	0
경북	36	27	14	12	0	1	9	0	1	4	4
경남	39	29	12	10	6	2	9	0	1	5	3
제주	6	3	1	1	0	1	3	0	1	2	0

자료: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2016. 2016년 지방공기업 현황

다. 지방공기업 평가체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한 유형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사·공단으로 구분되며, 기관 유형에 따라 평가지표의 세부 측정 내용이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

<표 4-2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유형

경영평가유형	구분 기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중 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중 하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도시철도공사	지방공사 중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 중 주택건설, 토지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기업
특정공사·공단	도시철도·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한 농수산물공사·에너지공사 등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중 경륜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단
관광공사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중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컨벤션센터를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기업
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중 주차장, 체육시설물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기업, 시설관리형 공사
환경시설공사·공단	지방공사·공단 중 하수처리를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기업

자료: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2019.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경영평가 지표체계는 “지방공기업 설립 목적과 가치를 고려해, 공기업의 경영 활동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되어 있다. 리더십/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사회적 가치·정책준수 등 5개 대분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BF인증과의 개념적 유사성이 있는 세부지표는 사회적 가치-사회적 책임에 포함된 사회적 약자 배려 지표이다.

<표 4-2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체계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리더십/전략	리더십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경영시스템	경영효율화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경영성과	주요사업	주요사업 활동 및 성과
	경영효율성과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성과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일자리창출, 일자리 질 개선
	사회적 책임	고객 및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재난·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 배려, 친환경 경영
정책준수	정책준수	공기업정책준수

자료: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2019.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도시철도공사 군에 설정된 사회적 약자 배려 관련 지표는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 제공 및 서비스 제공 활동, 기타 생활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세부 평가 내용으로, ① 사회적 약자 관리시스템, ② 사회적 약자 고용을 위한 노력과 실적, ③ 장애인 의무고용, ④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포함하고 있다. 사사회적 약자 배려 평가 내용에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인증 대상 시설물에 대해 인증 획득률을 지표화해 포함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4-23> 도시철도공사 사회적 약자 배려 지표 세부 평가 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지표정의	·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 제공 및 서비스 제공 활동, 기타 생활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을 평가한다.
배점	· 정성/정량 3점
세부평가내용	① 사회적 약자 관리시스템 - 유료시설의 무료 감면 수혜자수(금액) 확대 노력 및 성과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사후평가 - 봉사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② 사회적 약자 고용을 위한 노력과 실적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고졸자 등 기능인재추천채용,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고용 노력 및 실적 ③ 장애인 의무고용(1.0점, 정량) ④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0.5점, 정량) 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0.5점, 정량)

자료: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2019.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제4절 인증운영기관 설립 및 운영 방안

1. 인증운영기관 설립의 필요성

인증기관이 2-3곳에 불과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인증기관을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인증기관이 7곳에 이르게 되면 주무부서의 인력만으로는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 인증제도의 홍보 및 제도개선, 심사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인증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BF인증 브랜드 명칭 및 상징의 의미를 제시하고, 인증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고,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BF인증 제도를 현재보다 더욱 활성화하고, 인증업무의 체계성을 갖추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증운영기관 운영이 필요하다.

2. 인증운영기관의 운영 방안

가. 지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 등급효율 인증 등 타 인증제도의 경우에도 인증주관기관 또는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증운영기관을 기존 운영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방식과 기존 운영기관과는 별도로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기존 운영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방식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제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인증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을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 등급효율 인증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증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을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인증운영기관이 인증기관을 평가, 사후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인증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인증운영위원회와 업무가 상충되거나, 옥상옥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인증기관 중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은 인증운영기관이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 있고, 인증기관과의 협력이 비교적 원활할 수 있다. 하지만 인증기관을 평가하거나 감독하려 할 경우 협력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증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인증운영기관이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을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인증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인증운영기관이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중 운영 기간, 운영역량 등을 파악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두 방식 모두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 다른 차이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BF인증의 경우 인증제도 활성화, 인증제도 홍보, 모니터링, 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별도의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할 정도로 인증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인증기관 중 한 곳을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증운영기관의 권력화 방지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증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거나, 인증기관에 과도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증운영기관에서 BF인증 기준을 정하게 할 경우 타 인증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업무는 상위기관인 주무부처가 담당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는 인증운영위원회가 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증운영기관의 지정은 인증기관 중에서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1조(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객관성·효율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조정·통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12. 18.>

1. 감항인증 업무 주관
2. 감항인증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업무 지원

3.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
 4. 감항인증과 관련된 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항인증에 필요한 시험비행 조종사와 시험비행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이 감항인증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평가·분석·검증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인증운영기관의 업무

인증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 ② 인증기관의 심사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 ③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업무
- ④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 브랜드 상징의 의미 제시, 사회적 가치 제시 등
- ⑤ 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 ⑥ BF인증 적용 기준과 변경 사항 등을 포함시킨 다양한 사례내용이 담긴 매뉴얼, 해설서, 법규책 등 제작, 배포
- ⑦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 ⑧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인증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 ⑨ 당사자 중심 모니터링단 운영 및 모니터링
- ⑩ 홈페이지 관리, 정보 공개 등
- ⑪ 인증 재심의 - 인증기관의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인증 재심의(권리구제 기구로서의 역할)
- ⑫ 인증기관 인증위원, 담당 직원, 지자체 공무원¹⁶⁾ 등에 대한 교육
- ⑬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

16) 지자체 공무원이 몰라서 인증 안내 또는 공공기관 인증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하는 업무

특히 실질적으로 인증여부와 등급을 결정하고 있는 인증기관의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관 재량에 맡겨져 있는 이들 인력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여야 한다.

또한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개인이 사진 찍어서 신고하게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 인력

인증기관 중 1곳을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팀장 1인과 담당 직원 5인으로 구성된 1팀 체제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팀장 및 담당 직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4-24> 인증운영기관의 인력 구성(안)

구분	담당직무
팀장	팀 운영 총괄 업무협력체계 구축
직원 1	정책개발, 조사 연구 사업 제도홍보, 브랜드 가치 향상
직원 2	매뉴얼, 해설서, 법규책 등 제작, 배포 심사전문인력, 인증기관 담당자, 공무원 등 교육(역량강화)
직원 3	인증관리시스템 운영 통계 생산 및 조사, 분석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직원 4	모니터링 및 인증기관 평가 인증 제심의, 인증 심사결과 검토
직원 5	회계 관리 및 기관 운영 지원 인증기관 협력 지원

라. 예산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산 항목은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고, 전체 지원액은 6억6천8백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6명의 인건비는 2억8천7백만 원 정도 소요되고, 운영비는 3천2백만원 정도, 사업비는 3억5천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비는 업무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다.

<표 4-25> 인증운영기관 소요 예산(안)

(단위: 천원)

관	항	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인건비	보수	보수(6인) 20,681×12월=248,172	248,173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6인) 1,939×12월=23,268	23,263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6인) 1,727×12월=20,724	20,724
			인건비 합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1,000×12월=12,000	12,000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300×12월=3,600	3,600
			특근매식비	특근매식비 6×20회×12월=1,440	1,440
			관리비	관리비 500×12월=6,000 기기 임대료 400×12월=4,800	10,800
			여비	여비 42×2인×12월=1,000	1,000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200×12월=2,400	2,400
			운영비 합계		
		사업비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00 매뉴얼 등 제작 30,000	50,000
			홍보	홍보물 제작 등 20,000 언론 홍보 등 50,000	70,000
			교육	교육 2,000×24회=48,000	48,000
			전산 관리	전산 관리 1,000×12월=12,000	12,000
			모니터링단 운영	모니터링단 운영 3,000×12월=36,000	36,000
			인증기관 모니터링	인증기관 모니터링 2,000×4회=8,000	8,000
			인증 재심의	인증 재심의 10,000×12회=120,000	120,000

		인증기관협 력	인증기관 협력	500×12월=6,000	6,000
		사업비 합계			350,000
		합계			668,400

제5절 기타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의 인증의무 대상시설 확대 방안, 인증 활성화 방안, 인증운영기관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앞서 기술한 제언 외에 기타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1. 용도와 면적에 대한 고려

BF인증 의무대상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로 규정하다 보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소규모 시설까지 모두 포함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증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규모의 제한이 없다 보니 공원 내 화장실과 같은 소규모 건물도 의무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이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소규모 시설이라 하여도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의 접근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시설의 용도에 따라 이용 정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용도 및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에 따라 일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 제도 자체에 대한 반감을 높이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용도와 규모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방법으로, 현재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시설 기준을 BF인증 기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은 BF인증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BF인증을 면제하는 것

이다. 소규모 시설이라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용이 빈번한 경우 BF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시설에 BF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BF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예상되므로 추후 구체적인 논의¹⁷⁾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규모 기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서울 중심 인증기관의 전국 권역별 확대

현재 7개 인증기관은 서울 및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증심사 위원도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 전라, 경상 등 지방에서 인증심사를 신청하고 실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권역별로 인증기관을 확대하거나 현재 인증기관 중 지역사무소가 있는 경우 지역사무소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신설되는 인증운영기관에서 인증담당 인력을 교육하여 인증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재인증 제도 개선

현재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5년 후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건물의 특성 상 5년이 지나도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5년마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인증 기간을 5년보다 긴 10년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재인증 대신 인증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인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최우수등급을 받았던 건물이 5년 뒤 재인증에서 우수등급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인증제도가 오히려 BF인증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처음 인증받은 기준을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17) 이 연구문제에 대해서만 별도의 조사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사례에 대한 조사, 전문가, 이용 당사자, 인증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FGI, 델파이 조사 등 필요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확인(모니터링)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인증운영기관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BF인증 당시의 구조가 훼손된 경우 인증을 바로 해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 비용은 국고지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니터링할 시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사업량에 대한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 인증의 경우처럼 2년 주기(1년, 3년, 5년, 7년, 9년 등)로 하거나, 3년에 1번 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재인증기간을 10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과 재인증 없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인증운영기관의 업무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업무를 추가하였다.

4. 인증심의위원회 및 인증운영위원회 시민 참여 확대

최종적인 인증단계인 인증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더불어 해당 전문분야 전문가와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복지 업무 경력자를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에 따라 실제 운영 현장에서는 위원회가 건축, 도시계획, 조경, 장애인복지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어, 장애 관점보다는 업계의 의견이 과다 대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BF인증제도는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임산부 포함) 등 시설,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 노인, 장애인, 여성(임산부 포함) 등 시민대표가 4-5인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편의시설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체, 시각, 청각, 발달 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제2항 심사전문인력의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원래 6개 항목 외에 노인복지, 여성학, 아동복지 업무 수행한 사람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생략)

② 인증기관은 도시·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 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장애인
7. 노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노인
8. 아동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9. 여성학(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여성

또한 동 규칙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 인증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6-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인증위원회 전체 인원(15인 이내)의 50%를 반드시 넘게 하여 제도 수혜자의 참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타 영역에 비해 장애영역의 경우 손상(장애)의 종류에 따라 BF인증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를 2인 이상 위원으로 할 경우, 반드시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생략)

③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3조제2항의 6호 내지 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50%를 넘어야 한다. 또 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장애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건축사법 개정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더라도 접근로, 출입구, 출입문 등 최소한의 시설은 건축 설계 시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이 고려될 수 있도록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 실무교육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대안적 조치 강구- 인적 서비스 제공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 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아니거나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장애인의 접근,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서 장애인에게 인적 서비스 제공 등 대안적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개정이 필요하다(인권위 권고안).

미국의 경우 물리적 장벽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접근성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적 서비스에 의한 대안적 조치(alternative measure)를 통해 장애인에게 최대한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안적 조치(alternative measure)란, 물리적 장벽이 절대 제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모든 물리적 제거 방법을 검토한 뒤 어떠한 방법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없다고 결정된 후에만 최후에 고려되는 것이다. 다만 대안적 조치조차 공간 및 인력의 제약으로 용이하게 달성할 수 없다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대안적 조치가 취해진 경우, 접근 가능한 대안이 존재함을 공지나 광고, 신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대안적 조치를 통한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추가적인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종업원들은 대안적 조치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이용자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7. 기존 건축물 인증 수수료

향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BF인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편의시설 적합성의 경우 네거티브한 규제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소급입법에 해당되어 부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BF인증의 경우 포지티브한 인정제도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BF인증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BF인증을 하고자 할 경우, 신축 건축물 수수료에 비해 보다 저렴한 수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론 및 관련 법률 개정 사항

제1절 결론

제2절 관련 법률 개정 사항

5

결론 및 관련 법률 개정 사항 <

<

제1절 결론

2장에서 밝힌 BF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제3장과 제4장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BF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BF인증제도 활성화	BF인증제도 필요성에 대한 낮은 체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BI) 강화 - BF인증제도의 브랜드 명칭, 브랜드 상징(심볼), 브랜드 의미를 통합적, 일관적으로 제시 • 인증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 제시 • 최우수 인증 시설의 부각 또는 올해의 BF인증 대상과 같은 시상식 개최 •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 활동 - 공모전, 체험관 운영(UD체험관 등 활용 가능), 어플리케이션 활용 BF 앱 작성, BF마을 운영 emd • “모두가 편리한 건축물 인증”으로 용어 변경
	BF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담당자, 설계사,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BF인증 매뉴얼, 해설서, 법규책 등 제작, 배포 • 설계사와 건축사, 시공 담당자 등에 대한 BF인증 교육 실시 • 건축과 설계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BF인증에 대해 필수 교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 과정 개설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의 낮은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식개선교육 과정에 BF인증 교육포함 • TV 등 대중매체 광고
	BF인증제도에 따른 이익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야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세움터 프로그램에 인증 의무화 인식표 설치 • 기관 경영 평가에 인증 수행 여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심의 조건으로 상정 • 조달청 PQ 가산점 제도 도입 • 용적률 완화, 이자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관 건축 설계 예산에 BF심의 후 설계 변경 단가 신설
BF인증 의무대상	인증대상의 제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야 단계적 확대 -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개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공단 등 • 민간분야 단계적 확대 - 초고층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우선 확대, 이후 준초고층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로 확대 • 의무 대상시설의 확대1 -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법』 제7조(대상시설)에 따라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중 인증 의무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을 포함. 공원, 공동주택 등 포함 • 의무 대상시설의 확대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9조의 대상시설 중 인증대상인 도로, 여객시설, 교통수단에 대해 인증 의무화
	건축 범위의 제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 포함. 다만 수직 증축, 일부 개축의 경우 구조 자체에 대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평 증축 및 전면 개축만 포함함 • 조달 자재에 대해 인증 기준 적용
	용도와 면적에 대한 고려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증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BF면제 또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수수료	비용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개편 시행 결과 평가 후 개선 방안 도출 필요 • 재인증 제도 개선 - 재인증 대신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방식으로 개편 • 기존 건축물 BF인증 시 단가 인하
운영	인증기관 평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및 이를 반영한 지정 철회 등 실시 • 서울 및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인증기관 신설
	인증운영기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의 질적인 측면을 제고하고, 매뉴얼 작성, Q&A작성 등 인증기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인증운영기관 신설 운영
	관련 위원회 시민 대표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위원회에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시민 대표 포함

1. BF인증제도 활성화

BF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BF인증제도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야 하고, BF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반 국민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BF인증제도에 따른 이익이 있어야만 한다.

첫째, BF인증제도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BF인증제도의 브랜드 명칭, 브랜드 상징(심볼), 브랜드 의미를 통합적, 일관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BI)를 강화하여야 하고, 인증운영기관 등 관리주체를 통해 인증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만의, 장애인만을 위한 BF인증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의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BF인증제도가 되도록 BF인증제도의 아이덴티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최우수 인증 시설을 부각하는 정책을 사용하거나 올해의 BF인증 대상과 같은 시상식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공모전, 체험관 운영(UD체험관 등 활용 가능), 어플리케이션 활용 BF 맵 작성, BF마을 운영 등과 같은 혁신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물 없는 건축물 인증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이고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공모전 등을 통해 명칭을 바꾸어야겠지만 연구진에서 제안을 하면 “모두가 편리한 건축물 인증”으로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BF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공기관의 담당자, 설계사,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BF인증 매뉴얼, 해설서, 법규책 등을 제작, 배포할 필요가 있으며, 설계사와 건축사, 시공 담당자 등에 대한 BF인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업무는 새로 생기는 인증운영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 등과 협의하여 건축과 설계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BF인증에 대해 필수 교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 국민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이 된 장애인식개선교육 과정에 BF인증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국민들에게 BF 인증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TV광고 등도 고

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및 도로점용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BF인증제도에 따른 이익이 있어야만 BF인증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다. 처벌 또는 제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 보다는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인증제도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 배리어프리법」에서는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용적률 및 세제상 혜택, 건물정비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인증 등 우리나라의 다른 인증제도에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 등을 참조하여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야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세움터 프로그램에 인증 의무화 인식표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기관의 경영평가에 인증 수행 여부를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 허가를 심의할 때 BF인증 여부를 조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조달청 PQ 가산점 제도 도입, 용적률 완화, 이자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유인책도 가능한 정책수단이다. 또한 설계 후 BF인증 심의에 따라 설계를 충실히 변경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축 설계 예산에 BF심의 후 설계 변경 단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BF인증의무대상 확대

현재보다 BF인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증의무대상 건축주체 및 대상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축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용도와 면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BF인증의무 건축 주체 및 대상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분야의 경우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분야의 경우에도 초고층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확대하고 이후 준초고층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무 대상시설의 확대도 필요하다.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법』 제 7조(대상시설)에 따라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중 인증 의무 시설에 포함되

지 않은 시설인 공원, 공동주택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제9조의 대상시설 중 인증대상인 도로, 여객시설, 교통수단도 인증 의무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 증축과 일부 개축의 경우 건축물 구조 자체에 대한 변경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수평 증축과 전면 개축하는 경우만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 조달 물품의 경우 조달청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BF인증에 맞추어 설계를 해도 조달 물품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현재 조달 물품 기준을 BF 인증 기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이 모든 건축물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BF인증에 따른 소요 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별도 인증 기준을 만들던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3. 합리적 운영

인증제도의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마련, 인증운영기관 설립 및 운영, 관련 위원회에 시민 대표성 확대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정책이 부재하다 보니, 인증 품질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을 수시(1년 단위)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치를 명령하고, 그럼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 또는 업무 정지할 수 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지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8.>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문기관이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치할 것을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통보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도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비슷하게 2017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셀프인증(인증기관이 발주한 건축물을 스스로 심사), 이해관계자의 심의 참여, 특정 심의 위원에게 심의 몰아주기, 심의위원 심의비 일부 미지급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김예성, 2018).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기관이 부당한 인증업무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벌칙을 강화하여 인증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의안번호: 2013369, 발의일자: 2018.5.1.)이 현재 국회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둘째, 인증기관의 질적인 측면을 제고하고, 매뉴얼 작성, Q&A작성 등 인증기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운영기관이 필요하다. 인증운영기관을 인증기관과는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나, 인증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증기관 중에서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인증심의위원회 및 인증운영위원회에 BF인증제도에 의한 수혜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건축 전문가 외에 장애인복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BF인증제도는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임산부 포함) 등 시설,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 노인, 장애인, 여성(임산부 포함) 등 시민대표가 4~5인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전체 위원 중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등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합하여야 한다(배용호, 2018). 현재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에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건축물 외의 도로, 교통시설,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교통약자법’에서 다루고 있다. 소관부처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한 접근과 이동이 구분되어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접근과 이동은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두 개의 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접근성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이미 일본의 경우 2006년도에 건축에 대한 법률과 교통에 대한 법률을 통합하여 배리어프리신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2절 관련 법률 개정 사항

제1절에서 살펴본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법」,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

법에서는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과 관련하여 인증의무 건축물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제4항과 제5항에 인증운영기관에 대한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중 지정취소 사유에 ‘평가에 의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평가에 의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는 해당 법률 및 지침 등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지만, 보편적인 인센티브는 이 법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10조의 8을 신설하여 보편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 ② (생략) ③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u> <u>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u>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 ② (좌동) ③ <u>다음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u>

<p><u>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u></p> <p>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u>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u></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u>인증기관 지정 기준·</u></p>	<p><u>인증을 받아야 한다.</u></p> <p>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 전면 개축, 수평 증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p> <p>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신축, 전면 개축, 수평 증축하는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p> <p>3.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의거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신축, 전면 개축, 수평 증축하는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p> <p>4. 민간이 신축, 전면 개축, 수평 증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및 다중이용 건축물</p> <p>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p> <p>6.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p> <p>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u>인증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u></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u>인증운영기관 및 인증</u></p>
--	---

<p>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p>	<p><u>기관</u>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p>
<p>제10조의6(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6. <u>(신설)</u> 	<p>제10조의6(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6. <u>보건복지부 등의 평가에 의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 10조의8(BF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특례 등) ① ~ ③ (신설)	제10조의8(BF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BF인증 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BF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2.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 중 별표 2의2 개정이 필요하다. 18호 관광휴게시설에 전망대를 포함하고, 20호부터 22호 까지 신설하여 공원, 공동주택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정안
----	-----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별표 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1. ~ 17. (생략) 18. <u>관광휴게시설</u> 19. (생략) 20. (신설) 21. (신설)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별표 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1. ~ 17. (좌동) 18. <u>관광 휴게시설: 전망대 포함</u> 19. (좌동) 20. <u>공원</u> 21. <u>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u>
---	---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칙에서는 인증운영기관 지정 등에 대한 절차와 업무를 신설하여야 한다(제3조의2(인증운영기관의 지정 등) 신설). 또한 시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제2항 심사전문인력의 자격과 관련하여 노인복지, 여성학,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당사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 인증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 중 6-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인증위원회 전체 인원(15인 이내)의 50%를 반드시 넘게 하고,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를 2인 이상 위원으로 할 경우 장애유형을 고려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현행	개정안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생략) ② 인증기관은 도시·군계획, 건축, 토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좌동) ② 인증기관은 도시·군계획, 건축, 토

<p>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p> <p>1. ~ 5 (생략)</p> <p>6.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u>사</u> <u>람</u></p> <p>7. (신설)</p> <p>8. (신설)</p> <p>9. (신설)</p> <p>③ ~ ⑥ (생략)</p>	<p>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p> <p>1. ~ 5. (좌동)</p> <p>6.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u>장</u> <u>애인</u></p> <p>7. 노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u>노</u> <u>인</u></p> <p>8. 아동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u>사</u> <u>람</u></p> <p>9. 여성학(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u>여</u> <u>성</u></p> <p>③ ~ ⑥ (좌동)</p>
<p>제3조의2(인증운영기관의 지정 등)</p> <p>① ~ ④ (신설)</p>	<p>제3조의2(인증운영기관의 지정 등)</p> <p>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2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여 <u>관</u> <u>보에 고시하여야 한다.</u></p> <p>② 인증운영기관은 해당 인증제에 관</p>

	<p>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u>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업무인력"이라 한다)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u></p> <p>2. <u>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u></p> <p>3. <u>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인증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u></p> <p>4. <u>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업무</u></p> <p>5. <u>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u></p> <p>6. <u>인증기관의 심사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u></p> <p>7. <u>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u></p> <p>8. <u>BF인증 적용 기준과 변경 사항 등을 포함시킨 다양한 사례내용이 담긴 매뉴얼, 해설서, 법규책 등 제작, 배포</u></p> <p>9. <u>당사자 중심 모니터링단 운영 및 모니터링</u></p> <p>10. <u>인증 재심의</u></p> <p>11. <u>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u></p> <p>③ <u>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u></p>
--	--

	<p><u>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u>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u></p> <p>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u>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u></p> <p>④ <u>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 10조의6 제1항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주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u></p>
<p>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p> <p>③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보건복지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p> <p>2.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④ ~ ⑨ (생략)</p>	<p>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좌동)</p> <p>③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u>다만 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3조제2항의 6호 내지 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50%를 넘어야 한다. 또 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장애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1. 보건복지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p> <p>2.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④ ~ ⑨ (좌동)</p>

4. 표준 조례안

각 지역의 조례는 비슷한 형식과 내용이지만, 대상시설, 의무시설,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가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00시 또는 00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0시 또는 00도 공공건축물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시장 또는 도지사의 책무) 00시장 또는 00도지사(이하 ‘시장’ 또는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0시 또는 00도(이하 “00시 또는 00도”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00시 또는 00도가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시 또는 도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증축, 개축하는 건축물
4. 시 또는 도의 도로, 공원 등 공공발주 대상물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00시 또는 00도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4. 건축주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③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다.

제5조(인증기준 등)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① 제4조제1항의 건축물은 반드시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증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 인증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건축물 인증취득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재인증을 포함한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8조에 따른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시장 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 및 재인증) ① 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 또는 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건축물
2. 인증 및 재인증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건축물

② 제6조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민간건축물의 재인증 취득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취득장려) 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건축물에 대해 입찰에 참여한 건축주에 대해 심사를 한 때에는, 기존 인증 취득 실적이 있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등 인증 취득 장려를 할 수 있다.

제11조(인증건축물에 대한 혜택) 시장 또는 도지사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시 또는 도의 시세 또는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경감
2. 「시 또는 도의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검사의 면제
3. 각종 우수건축물 지정 시 가점 부여
4. 시 홍보매체에 게재 등

제12조(교육) ① 시장 또는 도지사는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 또는 도지사는 인증제도, 인증 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

<

- 국가인권위원회.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자료집’.
- 국토교통정책연구소. (2011). 배리어프리화의 사회경제적 평가 확립을 향하여. 국토교통성.
- 곡현(Qu Xuan) (2019). 브랜드 가치인식 제고를 위한 브랜드 모델 분석과 UBI 디자인 개발 전략 연구 - 중국 미술대학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기획재정부. (2018).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2018.1.31.)』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2018). 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 (2018). 2018 공공기관 현황 편람
- 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2000).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 서울: 현문사.
- 김연선. (2004). ZMET를 이용한 호텔의 브랜드자산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예성. (2018). 녹색건축 인증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498호.
- 김용만, 서희정, 김은정. (2005). K-리그의 브랜드인지도, 브랜드개성, 브랜드태도 및 지각된 가치가 브랜드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체육과학연구, 16권 3호.
- 김인순 외. (2016). 숙박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인순 외. (2019).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 김인순·이소영. (200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비용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정권, 최주석, 이미숙. (2017).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비용효과분석 적용방안 마련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12(3), 1-22.
- 문희준. (201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거주밀도에 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세홍, 박종덕, 권용준. (2016). 연결송수관설비를 이용한 초고층 건물의 화재진압 연구.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6(3), 195-201.
- 박문기. (2000). 기업 브랜드 자산가치의 측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상민. (2017). 초고층건물의 계획적 측면에서 구조시스템별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9(1), 185-192.
- 박신원, 윤인숙, 조영태, 이범규, 김상운. (201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성과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배용호. (2017).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접근권 정책 비교 연구 - 편의시설과 이동권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용호. (2018). 한국 장애인 건축물 접근권의 현황과 과제. 인권연구, 1(2), 1-30.
- 백승희. (2003). 페스트푸드 기업의 브랜드 자산 구조 및 가치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일권. (2003). 브랜드 아이덴티티, 서울 : 경영정신.
- 오정일. (2012).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1), 33-57.
- 이은주. (2007). 한국관광지 브랜드 구성요소가 브랜드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2019년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2019).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2016). 2016년 지방공기업 현황
- Aaker, D. A. (1991). Managing Brand Equity: Capitalizing on the Value of a Brand Name. The Free Press, New York, NY.2.
- Aaker, D. A. (2003). 데이비드 아커의 브랜드 경영 (이상민 역). 서울: 비즈니스북스, (원서출판 1996)
- European Commission. (2010). European Disability Strategy 2010-2020: A renewed commitment to a barrier-free Europe. COM(2010) 636.
- European Commission. (2011). *Access City: The European awardd for accessible cities: Making Europe's urban environment accessible for all*.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2012). *Access City Award 2012*.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2013). *Access City Award 2013*.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2014). *Access City Award 2014*.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2015). *Access City Award 2015*.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2016). *Access City Award 2016*.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2017a). *Access City Award 2017*.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2017b). Progres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uropean Disability Strategy 2010–2020. SWD(2017) 29.
European Commission. (2018). *Access City Award 2018*.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2019). Access City Award 2019. <http://ec.europa.eu>에서
2019. 3. 20. 인출.
Keller, K. L. (1993).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Managing Customer based
Brand Equity". *Journal of Marketing*, 57(1).

관련사이트

UN www.un.org

진주 무장애도시 홈페이지(bf.jinju.go.kr)

한국장애인복지개발원. BF인증교부 현황(2019년 1월 기준). <http://www.koddi.or.kr>
2019. 5. 13 인출